

실무연수 결과보고서

통일대비 사회주의 체제전환 실태 연구

2004. 7

체제전환 실무연수단

목 차

要約

| | |
|--------------------------|-----|
| I. 체제전환국 연수 | 1 |
| 1. 연수 개요 | 1 |
| 2. 연수 일정 | 3 |
| 3. 연수자 명단 | 4 |
| II. 연수 대상국 체제전환 현황 | 5 |
| 1. 동구권 개황 | 5 |
| 2. 체 크 | 16 |
| 3. 헝가리 | 21 |
| 4. 체크-헝가리 비교 | 30 |
| III. 방문기관별 면담 결과 | 45 |
| 1. 투자청 | 45 |
| 2. 스코다 자동차 | 50 |
| 3. 노동사회연구소 | 54 |
| 4. 경제교통부 | 61 |
| 5. 무역투자진흥청 | 66 |
| 6. 민영화청 | 74 |
| IV. 북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80 |
| 참고문헌 | 84 |
| 헝가리 진출 한국경제인 면담결과 | 85 |
| 방문기관별 수집자료(원문) | 90 |
| 면담자 현황 | 119 |
| 연수소감 | 121 |

요 약

□ 경제 개혁정책 추진

- 경제체제 전환의 목적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하에서 비롯된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낙후된 경제를 재건하고 시장경제체제로의 안정적 전환을 위한 것임. 서유럽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동유럽의 체제전환 전략은 가격자유화와 거시경제안정화 등 경제정책을 통해 추진되었음.
 - 체코는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강력한 계획경제 유지에 따른 취약한 민간경제 때문에 1990년대초 가격 자유화, 국유재산 사유화, 대외개방 정책, 금융시장 정책 등을 동시에 병행
 - 헝가리는 일찍부터 자유시장경제를 도입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었기에 모든 분야에서 단계적 실시를 통해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고 대외채무 및 재정적자 축소에 주력
- 이와 함께 양국은 물가상승과 임금인상의 악순환에 기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률 이상의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조세정책 등을 통해 강력한 통제를 시행하였음.

□ 국유재산의 사유화

- 국유재산의 사유화 추진은 자국의 경제수준과 민간부문 정도, 정치적 판단 등에 따라 결정되는 바, 체코는 민간부문이 미약했지만 내부경제가 건전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 국가재산을 무상분배하는 대중사유화 방식을 채택한 반면, 헝가리는 민간경제가 상당부분 존재했지만 재정적자 누증을 극복하기 위해 자국민과 외국인에게 기업을 매각하는 외부자 매각방식으로 사유화를 추진하였음.
 - 대중사유화는 국부의 신속한 공평분배는 이룰 수 있으나 기업경영의 책임소재 불분명, 자금조달 애로 등의 문제점이 발생
 - 직접매각의 경우, 생산시설 낙후와 노동자의 낮은 생산성 문제 등으로 헐값에 매각되거나 매각 불발에 따른 기업파산·통합 등으로 대량실업 문제 대두

- 사유화는 상점 등 규모가 적은 경제단위부터 사유화하는 소사유화 실시 후 대사유화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 사유화 추진에 있어 기업가치 제고와 회사법 등 법제 정비가 핵심요소이며, 기업경영을 책임질 수 있는 투자가에게 소유권이 이양될 수 있도록 매각제도와 절차 및 추진기관 등이 마련되어야 함.
- 매각시 재산가치는 실제 가치가 정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매각과정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며, 연대보증 등 정부개입을 최소화해서 차후 추가자금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함.

□ 외자유치 활성화

- 신속한 경제안정과 산업발전, 고용문제 해결, 국가재정 확충 등을 위해 체제전환국들은 외자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 각종 투자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는 등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을 강화해 오고 있음.
- 헝가리는 체제전환초기부터 외자유치 활성화에 주력하여 1990년대 중반까지 체제전환국들 중 가장 많은 외자를 유치
- 체크는 국부유출 우려, 자국경제 자부심 등에 따라 초기 외자유치를 기피했으나, 1997년 외환위기와 대중사유화 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제 도입 등 외자유치에 주력, 현재는 동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인 외자 유치국임.

□ 노동·보건·의료 문제

- 사회주의국가들은 일찍부터 사회보장체제가 잘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체제전환 초기 혼란에도 불구하고, 체크나 헝가리도 교육·의료 등의 서비스를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연금·주택 등 복지우선정책으로 재정적자가 누증됨에 따라 오히려 시장경제체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일정부문의 복지수준 축소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임.
- 양국은 사회주의체제 시절부터 형성된 정부와 노조간의 협조관계가 체제전환초기에도 그대로 이어져 파업·실업 등 노동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았음.

- 또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제도에 대해서도 양국 국민들이 이미 상당부분 체득하고 있었고, 사유화 등이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체제전환 국민교육이나 실업자 구제 등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음. 최근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각국이 대처하고는 있으나 미약한 수준임.

□ 북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 동유럽의 체제전환은 ① 선진 서유럽과 근접하고 있다는 지리적 이점 ② 체제전환 이전 1960년대 말부터 초기 시장경제 경험 ③ 독재정치의 수준이 낮았고, 식량과 생필품도 풍부했다는 점 등 북한의 상황과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으나 북한의 초기 개혁개방 여건 조성과 관련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 첫째, 초기 개혁정책 추진시 경험하게 되는 가격자유화, 주민의식 변화, 대외환경 개선 등 시장경제 경험누적이 본격적인 체제전환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함.
 - 둘째, IMF, IBRD 등 국제금융기구의 차관 및 이들 기구들과 원만한 협조관계가 재정안정 및 SOC 건설 등 경제부흥에 필수적임.
 - 셋째,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군수의 민수전환, 정치·경제적 안정 등이 선행되어야 함.
- 북한의 사유화 추진시 급속한 외부매각이나 대중 사유화 실시보다는 먼저 법제도를 비롯하여 좋은 투자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국내 자본 축적여부에 따라 사유화 방식을 결정하여야 함.
 - 국내자본 축적이 미약할 경우 대중 사유화와 외부자 매각방식을 혼용하여 사용
 - 초기 외자유치는 북한 노동자 수준에 맞게 단순기술과 저임금을 위주로 하는 업종의 유치가 바람직하며, 기술 숙련도에 따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대
 - 중국 등 인접국가 수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필요, 내부 소비시장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시 이윤창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야 함. (북한투자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홍보할 필요)

통일대비 사회주의 체제전환 실태 연구

I. 체제전환국 연수

1. 연수 개요

o 연수기간 : 2004.6.21(월)~6.30(수)

o 연수지역 : 체코, 헝가리

o 연수대상 : 통일부 등 6개 부처 공무원 15명

o 주요 방문기관

- 체코 : 투자청(Czech Invest)

Skoda 자동차(Skoda Auto)

노동사회연구소(Research Institute for Labour and Social Affairs)

- 헝가리 : 경제교통부(Ministry of economy and Transport)

무역투자진흥청(The Hungarian Investment and Trade Development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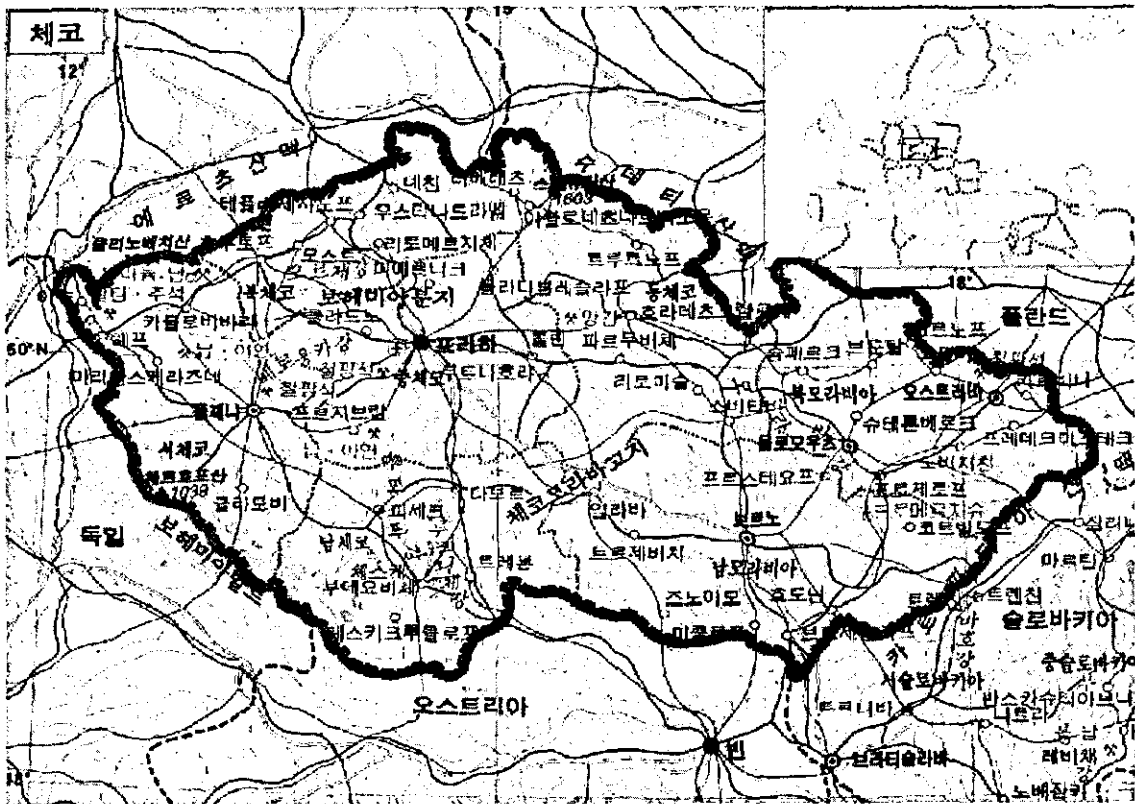
민영화청(Hungarian Privatization and State Holding Company)

o 연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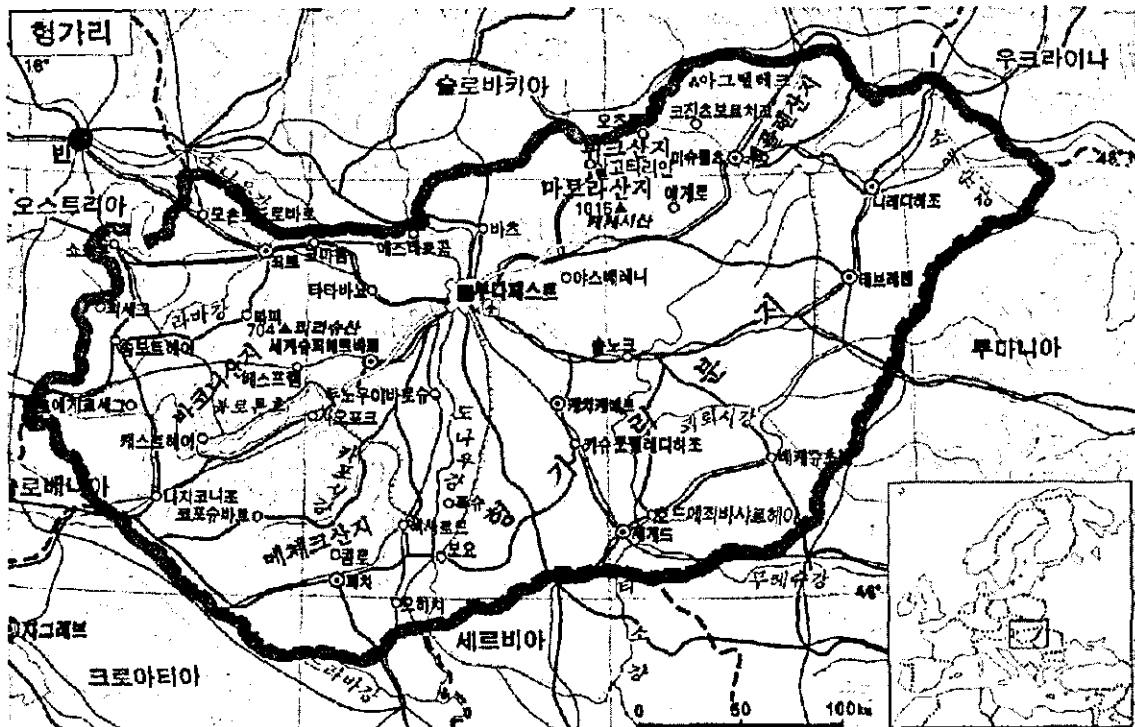
- 체코, 헝가리는 1980년대말 체제전환 이후 정치적 민주화 및 적극적인 개혁정책의 추진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왔음.

- 체제전환의 선행사례인 동구권 국가들의 분야별 체제전환 과정과 최근 변화추이를 분석하여 남북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북한 체제전환시 적용가능한 정책대안을 모색함.

- 또한 체제전환 사례에 대한 해외 현장체험을 공유함으로써 통일관련 유관 부처 실무담당자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무협조체제를 강화하고자 함.



(체코 지도)



(헝가리 지도)

2. 연수 일정

| 일차 | 월일 | 시행지역 | 교통편 | 현지시각 | 훈 련 내 용 |
|----|-------------|------------|-------------------|----------------------------------|---|
| 1 | 6.21 (월) | 인 천 체 크 | KE 935 | 13:20/17:20 | o 인천→프라하 이동 |
| 2 | 6.22 (화) | 체 크 | 전용차량 | 10:00 14:00 | o 대사관 방문 o 체크 투자청(Czech Invest) 방문 |
| 3 | 6.23 (수) | 체 크 | 전용차량 | 10:00 15:00 18:30 | o Skoda Auto 방문 o 노동사회연구소(RILSA) 방문 o KOTRA, 한국기업인 간담회 |
| 4 | 6.24 (목) | 체 크 | 전용차량 | 전 일 | o 현지체험 |
| 5 | 6.25 (금) | 오스트리아 | 전용차량 | 전 일 | o 오스트리아 경유(체크→헝가리) |
| 6 | 6.26 (토) | 헝가리 | 전용차량 | 오 후 | o 현지체험 |
| 7 | 6.27 (일) | 헝가리 | 전용차량 | 전 일 | o 현지체험 |
| 8 | 6.28 (월) | 헝가리 | 전용차량 | 10:00 12:00 15:00 19:00 | o 경제교통부(MOET) 방문 o 대사관 초청 오찬 o 무역투자진흥청(ITDH) 방문 o KOTRA, 한국기업인 간담회 |
| 9 | 6.29 (화) | 헝가리 | LH 3443 KE 906 | 09:30 14:45/16:25 19:45 | o 민영화청(HPSHC) 방문 o 부다페스트→프랑크푸르트 이동 o 프랑크푸르트 출발 |
| 10 | 6.30 (수) | 인천 | | 13:00 | o 인천 도착 |

3. 연수자 명단

| 연번 | 소 속 | 성 명 | 연락처(e-mail) | 비 고 |
|----|-------------------|-----|------------------------|-----|
| 1 | 통일부 정책기획과장 | 황부기 | hbga@unikorea.go.kr | 단 장 |
| 2 | 통일부 정책기획과 | 이해준 | hjlee77@unikorea.go.kr | 총 무 |
| 3 | 통일부 총무과 | 최석찬 | choi77@unikorea.go.kr | |
| 4 | 통일부 기획예산담당관실 | 홍양희 | kjhong@unikorea.go.kr | 재 무 |
| 5 | 통일부 혁신인사담당관실 | 김구원 | phs302@unikorea.go.kr | |
| 6 | 통일부 교역과 | 김순옥 | soonok@unikorea.go.kr | 연구장 |
| 7 | 통일부 회담지원과 | 한재현 | hjh123@unikorea.go.kr | |
| 8 | 통일부 교육총괄과 | 김미옥 | kmiok@unikorea.go.kr | |
| 9 | 통일부 회담연락과 | 강태성 | river73@unikorea.go.kr | |
| 10 | 통일부 감사담당관실 | 김수영 | kis1536@unikorea.go.kr | |
| 11 | 국무조정실 혁신담당관실 | 김세필 | phil@opc.go.kr | |
| 12 | 건설교통부 해외협력담당관실 | 민기숙 | mkszzang@moct.go.kr | |
| 13 | 국방부 대북정책과 | 권혁록 | write1827@hanmail.net | |
| 14 | 국가정보원 | 서정웅 | mundang@vivimail.com | |
| 15 |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 | 조병준 | native@mogaha.go.kr | 간 사 |

II. 연수 대상국 체제전환 현황

1. 동구권 개황

가. 체제전환 배경

1) 정치적·사회적 측면

동유럽에서의 체제전환이란 정치적 측면에서의 공산당 일당독재의 종식과 경제적 의미에서의 중앙계획경제체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정치적 측면에서 체제전환의 배경을 보면 대외적 정치상황의 변화, 지배층의 정통성 상실, 시민세력의 성장을 들 수 있음.

첫째, 대외적 정치상황의 변화

1985년 3월 소련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한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통한 '인간적 사회주의'의 달성을 목적으로 대내적인 정치·경제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과의 군비감축협상을 주도, 1989년 12월의 몰타회담을 계기로 동서냉전은 공식적으로 종식되었음.

동서냉전 종식은 동유럽 국가의 민주화가 추진될 수 있는 대외적인 여건을 제공했는바, 이러한 여건변화를 바탕으로 동유럽 국가의 국민들은 공산당 일당독재를 배격하는 민주화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음.

자유노조(Solidarity)를 중심으로 한 폴란드가 1989년 6월 자유총선에 의해 자유노조 중심의 비공산연정을 출범시키고, 헝가리는 1989년 2월 다당제를 도입하고 동년 6월 대오스트리아 국경의 개방을 통해 동독인의 서독이주를 허용함으로써 동년 11월에 발생한 베를린장벽 붕괴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체코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에서도 1989년 말부터 1990년까지 공산당 일당독재체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치·경제체제의 변혁이 시작되었음.

둘째, 지배층의 정통성 상실

소련의 영향 하에 계획경제체제와 공산당 일당지배체제를 유지하던 동유럽 국가들은 1980년대 말 무역수지 악화, 외채누적으로 경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음. 경제

개방 및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수록 관료제, 중앙계획의 불합리성, 규제 가격제도의 모순 및 문제점들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정치적·이념적 개혁이 수반되지 않고는 더 이상의 경제개혁 자체가 불가능해졌음.

즉 체제 자체가 합리적 경영을 할 수 없음이 드러남으로써 집권당, 집권 세력에 대한 인민과 엘리트 모두로부터의 신뢰가 실추되고 이러한 불만이 확산됨으로써 정치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었음.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들에서 공산체제는 그 성립이 자생적이라기보다는 각국 공산당에 대한 소련의 지원에 힘입은 것이었고, 내부의 크고 작은 정치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군사적 개입이나 정치·경제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공산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임.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정치적 자유주의와 다원주의의 물결이 일자 공산 통치질서의 붕괴는 건잡을 수 없었음.

셋째, 시민세력의 성장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의 요인으로 체제위기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각국 별로 체제에 대한 대항세력의 꾸준한 성장을 들 수 있음.

1980년대 시작된 폴란드의 자유노조의 정치세력화, 헝가리의 반체제 원탁회의, 체크의 반체제 지식인들이 결성한 시민포럼 등이 시민들의 개혁욕구를 대변 하면서 공산정권의 붕괴를 가속화시켰음.

2) 경제적 측면

<경제성장의 한계>

197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동유럽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서방국가들과 경제적 격차가 뚜렷하게 벌어지기 시작, 1980년대 동유럽의 누적된 경제적 상황 속에서 서구의 경제적 발전과 성장은 동유럽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것이었음.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의 국가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크고 작은 경제개혁을 시도하였지만, 거의 모든 시도가 실패로 끝나고 결국 1989년 이후 공산체제가 연속적으로 붕괴되면서 대다수 동유럽 국가들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음.

- 동유럽 국가들은 초기에는 과잉노동력 흡수를 위한 노동집약적 공업화로 부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수 있었으나, 점차 노동집약적 공업화의 한계가 나타나고 설비 및 기술개발투자의 부진으로 인한 시설의 노후화 및 기술 수준의 저하 등이 심화되면서 성장이 지속적으로 둔화되었음.
- 1965년~1980년 동유럽국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5%대였으나 1980년대 들어서는 1.4%로 크게 둔화되었으며 1인당 실질 GDP 성장률도 0.8% 증가에 그쳤음.

<노동생산성 저하>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계획당국에 의한 자원배분의 결과 자원의 낭비가 심화되고 생산의욕을 부추길 이윤동기가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노동생산성도 이전보다 저하되었으며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고정투자율이 하락한 데다 투자효율성마저 떨어졌음.

- 구동독과 유고를 포함한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전체 6개국의 고정투자율은 1970년대 33.8%를 기록하였으나 1980년대에는 26.8%로 낮아졌으며
- 경제성장률 또한 1980년대에는 2.3%로 1970년대 6.1%에 비해 40% 하락하였으며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1970년대의 5.5%에서 1980년대에는 2.2%로 현격히 낮아졌음.

<국제경쟁력 약화와 대외채무 누적>

폐쇄경제체제의 유지로 국제수준의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서방국가와의 기술격차도 크게 확대되어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동유럽 국가들은 상호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생산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련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간 역내 무역시스템을 창설하였으나 사회주의 국가들이 모두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동 시스템의 유지도 문제해결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음.

또한 대서방 수출 부진에 따른 외환부족으로 역내 무역에 의해 확보할 수 없는 자본재 및 원자재의 수입을 외자에 의존함에 따라 대외채무가 누적되었음.

- 폴란드의 경우 1971년 11억 달러였던 대서방국 채무는 1989년 400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체코 또한 1971년 5억 달러에서 1989년 79억 달러로 증가했고 헝가리도 1971년 11억 달러에서 1989년 213억 달러로 증가했음.

나. 체제전환의 목표

경제체제 전환의 목적은 중앙계획경제체제에서 비롯된 비효율을 제거하고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생산증대를 통해 낙후된 경제를 재건하는데 있었음.

그 방법으로서 논의되는 것이 일시에 모든 개혁을 추진하느냐(big bang), 아니면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느냐(piece mill) 하는 점과 어떠한 순서로 경제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개혁순서(sequence)에 관한 문제였음.

동유럽 국가들이 체제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의 목표와 방향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경제안정화와 자유화의 동시 추진

체제전환에 있어 가격의 자유화와 동시에 거시경제적 안정화는 개념상 서로 충돌되기 때문에 이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함.

안정화 우선론에 의하면 초과수요를 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유화 조치를 실시하게 되면 경제왜곡이 더욱 심화되며 자유화의 부작용이 자유화 조치 자체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경제의 안정화가 자유화보다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함.

반면에 안정화와 자유화의 동시 추진론자들은 동유럽 국가의 경우 장기간 중앙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의 왜곡이 상호 구조적으로 얽혀 있어 어느 한 부문의 개혁도 여타 부문의 개혁 없이는 성공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가격기능이 작동하는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가격자유화가 불가피하므로 안정화와 자유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으로 주장함.

2) 가격개혁과 무역자유화의 실현

가격기능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내가격을 자유화함과 동시에 대외무역을 자유화해야 함. 대외교역의 신속한 자유화를 반대하는 측은 국제가격 수준을 급격히 채택할 경우 산업의 생산력이 약화되어 기업이 모두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원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가 유발되므로 국내가격을 우선 자유화한 후 점진적으로 무역자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함.

반면, 국내가격과 무역자유화를 동시에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에 의하면 먼저 국내시장 수급에만 맞추고 그 후에 국제시장가격에 맞출 경우 총조정비용은 더욱 증가하기 쉬우며 이중적 환율제도를 유지하게 됨으로써 수입원자재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어 수입인플레이를 억제하게 되면 가격의 왜곡이 초래되므로 국내가격의 자유화와 대외무역의 자유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3) 국영기업의 민영화 문제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민영화의 속도, 매각방법, 기업간 부채의 정리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이 문제로 등장

첫째, 민영화의 속도와 관련, J. Sachs와 같은 급진적 개혁론자들은 사유화가 일시에 획기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사유재산을 보유한 민간부문의 성장이 침체되기 때문에 체제 자체의 성공적인 개혁이 제약을 받는다고 본 반면, Kornai와 같이 보수적 개혁론자들은 사유재산의 보유에 따른 인센티브가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미시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봄.

둘째, 국영기업이 민영화와 관련해서 유상매각은 과잉통화를 흡수할 수 있고 재정의 건전화에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화시책을 뒷받침하여 주는 장점이 있으나 국내저축의 부족과 자본시장의 미발달 및 소요기간의 장기화로 매각이 지연되는 단점이 있음. 그 외 무상공여는 소득배분 효과가 있고 신속한 민영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재정건전화에의 기여가 없으며 소유권의 지나친 분산으로 경영에 대한 감독권이 약화되고 실질적인 기업인수가 어렵게 되는 단점이 있음.

셋째, 국영기업간 부채의 정리와 관련해서는 경제체제구조상 발생한 기업간 부채가 정리되지 않는 상태로 민영화될 경우 민영화 이전의 부실채권에 대한 책임소재가 모호해질 뿐만 아니라 새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간 신용에 대한 책임도 회피되기 쉬우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구체체 하에서 발생한 신용을 정리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민영화 방식 >

1) 직접매각(협의매각)

매각주체인 정부와 매수자 즉 투자자간에 가격 및 거래조건 등에 관해 직접 협의하는 방식. 외부 투자자에게 기업을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장점

2) 경영자/종업원 매각(MEBO : Management/Employee Buyout)

매각대상 기업의 경영자 또는 종업원 등 내부주체에게 액면가나 잉가로 국가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 외부투자자들의 지분참여가 원천적으로 막힘으로써 민영화 본연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3) 바우처 매각(대중민영화: Mass Privatization)

일정자격을 갖춘 일반국민들에게 바우처(또는 쿠폰)를 무상 또는 잉가로 분배하고 향후 국영기업의 주식이나 국영기업을 인수하는 투자펀드의 주식으로 교환해 주는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민영화의 이익을 분배함으로써 정치적 반발을 회피하고 신속하게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분이 극도로 분산됨으로써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가 없어 민영화 이후 기업의 효과적 구조조정이 어려운 단점이 있음

4) 기타 방식

그밖에 경매(auction), 입찰(tender), 주식상장(stock flotation), 주식분배(stock distribution) 등의 방식이 있으나, 체제전환국가에서 많이 채택되지는 않았음

4) 정책의 신뢰성 확보

경제정책 당국자는 경제계획의 신뢰성과 정책실행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정책의 비일관성' 문제에 빠지지 않아야 하며, 개혁이 개인과 사회에 단기적으로 비용을 증대시키는 경우 최초의 개혁을 중단하거나 최대로 축소시키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우나 최초의 결정을 바꾸는 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향으로 개혁의 순서를 결정함으로써 개혁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봄.

정부 정책변경 소지를 축소시켜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대내외적 제약방법을 제시되고 있음.

첫째, 내적으로 정치적 제약(internal political constraints)을 가하는 것으로 경제개혁의 일정을 세움으로써 정책변경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크게 하는 것

둘째, 내부의 법적 제약(internal legal constraints)을 가하는 것으로 정책의 비밀관성 문제를 감시하기 위해 독립된 중앙은행을 설립하거나 균형예산 달성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정부의 역할을 남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토록 하는 것

셋째, 외적인 법적 제약(external legal constraints)을 두는 것으로 유럽통화 제도(EMS)내 환율조정메카니즘(ERM)이나 GATT 등 국제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정책수행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 것

넷째, 외적으로 경제적 제약(external economic constraints)을 가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IMF, IBRD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정부의 임의적 정책추진에 제약을 가하는 것임.

상기 네가지 방법은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니나, 외적인 제약이 내적인 제약보다 정책추진에 있어 보다 유용한 수단으로 봄.

다. 동유럽 체제전환의 특징과 민영화

체제전환국들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지역별로 체제전환의 성과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과 핵심 경제개혁과제인 자유화 및 민영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개혁 간에는 지속적으로 격차가 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구체제 붕괴 이후 광범위하고 신속한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민영화 방식에 따라 민영화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 등임.

1) 체제전환 초기여건

중동구와 발틱연안국들은 신속한 자유화 추진, 거시경제적 안정의 달성 그리고 광범위한 국영기업들의 민영화 추진과 더불어 민간기업의 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장제도의 기반을 점진적으로 구축하였음.

반면 러시아를 비롯한 CIS 국가들도 자유화와 민영화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그 효과는 매우 낮고 거시경제적 불안이 심화되어 왔으며 민간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렇게 지역별로 경제개혁의 성과에 차이가 나타난 원인은 체제전환 초기의 경제적 여건, 체제전환 이전의 경제개혁 추진 경험, 역사적 환경, EU와의 지리적 근접성 등에서 찾을 수 있음.

첫째, 양 지역간에는 산업화 정도, 교역대상의 차이, 초기의 거시경제적 불균형 정도, 국가통제의 정도 등 체제전환 초기의 여건에 차이가 있었음. 대체로 CIS 국가들은 선도국들에 비해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출발하였으며, 경제개혁을 위해 치러야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경제개혁의 지연으로 나타나게 됨.

둘째,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선도국들은 1980년대 초부터 이미 부분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는 등 체제전환의 기간이 길었다는 점도 CIS 국가들에 비해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 이유의 하나임.

셋째, 양 지역간 역사적 배경의 차이를 들 수 있음. 중동구 국가들은 2차 대전 이전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수준과 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었으며, 통제경제체제의 역사도 50년 정도에 불과한 반면 대부분의 CIS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빈곤한 지역이었으며 통제체제의 역사도 80년에 달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음.

마지막으로 EU와 지리적으로 근접될수록 EU와의 활발한 정치·경제적 교류를 통해 간접적인 시장경제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으며 이는 체제변화를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인이 되었음.

2) 경제개혁 과제들 간의 격차

전환초기 많은 체제전환국에서는 공산체제 붕괴 이후 시장경제로의 조속한 이행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면서 광범위하고 신속한 민영화와 자연스러운 흐름을 형성하였고 이런 흐름이 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의 개선을 가져와 곧 바로 소득수준의 향상과 서구적 수준의 시장경제체제가 달성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이 확산되었음.

그러나 지금까지 나타난 전반적인 민영화의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며 그 이유는 체제전환을 위한 경제개혁 과제들이 갖는 속성의 차이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임.

자유화와 민영화 같은 개혁조치들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자리 잡은 것은

정부가 가격통제 철폐, 국영기업 소유권 이전 등의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곧바로 그 실적이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임. 그러나 시장체제가 제 기능을 발휘토록 하는 제도개선은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정부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들의 질적 변화에 맞춰 정착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진행된 민영화에 비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개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3) 동구권의 주요 민영화 방식

체제전환국들은 앞에서 언급된 다양한 민영화 방식 중 중·대규모 기업의 민영화를 위해 직접매각, 바우처 방식, MEBO 등 3가지 방식을 집중적으로 선택했음.

중동구 및 발틱연안국들은 대체로 직접매각 방식을 1차적 민영화 수단으로 채택하였음. 반면에 CIS 국가에서는 3가지 방식이 혼재되어 있으며 특히 바우처 방식과 MEBO를 1차적 민영화 수단으로 채택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동일한 방식이 항상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채택된 방식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졌다는 점이 중요함. 대체로 직접매각 방식은 외부투자자의 경영권 인수로 연결되는데 비해 MEBO 방식과 바우처 방식의 경우 내부 주체가 기업을 지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기의 민영화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

체제전환 선도국들은 양호한 전환 초기의 상황을 바탕으로 내부 주체에 한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민영화 정책을 시행하였음. 에스토니아와 헝가리는 외부의 전략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요 기업들을 민영화시켰으며, 체크와 리투아니아는 직접매각 방식과 바우처 방식을 비슷한 비중으로 활용하였으나 바우처 방식의 민영화가 기업 내부집단에 기업통제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함.

반면 러시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CIS 국가들과 유고연방 등에서는 내부 집단에 유리한 바우처 방식이나 MEBO 방식을 통해 내부집단이 민영화된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사례가 많았음.

<동유럽 주요 국가들의 민영화 방식>

| | 폴란드 | 헝가리 | 체코 | 불가리아 | 루마니아 | 에스토니아 | 러시아 |
|----------------------|---------------------------|-----------------|----------------------|-------------------|-------------------|-----------------|-----------------|
| primary method | 직접매각 | 직접매각 | 대중사유화 (Voucher) | 직접매각 | MEBOs* | 직접매각 | 대중사유화 (Voucher) |
| secondary method | MEBOs* | MEBOs* | 직접매각 | 대중사유화 (Voucher) | 직접매각 | 대중사유화 (Voucher) | 직접매각 |
| 사유화속도의 정책적 중요성 | 보통 | 1990년대 중반 이후 중요 | 1990년대 초반까지 최우선 | 1990년대 중반 이후 중요 | 1990년대 중반 이후 중요 | 1993년 이래로 최우선 | 1990년대 초반까지 최우선 |
| 원소유자 반환 | 원칙적으로 인정하나 법규미비로 거의 적용 안됨 | 광범위하게 적용 | 소규모 사유화에서 일부 적용 | 토지 및 주택에 대해 일부 적용 | 토지 및 주택에 대해 일부 적용 | 거의 적용 안함 | 거의 적용 안함 |
| 외국인투자 도입정책 (실적,\$)** | 중요 (389) | 매우 중요 (1,627) | 1990년대 중반 이후 중요(967) | 중요 (159) | 중요시 (200) | 매우 중요 (953) | 제한적 (61) |

주) * Manager-Employer-Buy-Out (사유화 기업의 경영진과 종업원에게 특혜 매각)
 ** 1989-1998년간 국민1인당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도입 실적

라. 동유럽의 새로운 출발 : EU가입

1) 동구권의 EU가입

새로이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된 10개 국가 중에서 사이프러스와 말타를 제외한 8개 중동부 유럽 국가는 20세기에 들어와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했지만 현재는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폴란드와 같이 인구가 3,900만 명에 이르는 국가가 있는 반면, 에스토니아와 같이 인구가 140만명에 불과한 국가도 있음.

경제적인 수준차이도 상당한데, 슬로베니아의 경우는 1인당 GNI가 10,370 달러에 이르지만 라트비아의 경우는 3,480달러에 머물러 있어 약 3배 차이가 나기도 함.

한편 중부 유럽국가와 발트 3국 그리고 발칸유럽 쪽에 위치한 슬로베니아는 각기 상이한 문화유산과 민족성 그리고 정체성을 지니고 있어 일견 이질적인 구성원으로 보이기도 함. 물론 신규 가입국과 기존의 15개 유럽연합 회원국가간의 차이는 훨씬 더 큼.

<신규가입국의 기본정보와 경제상황>

| 국가 | 인구 (백만명) | 국토면적 (km ²) | GNI (bil.US\$) | 1인당 GNI (US\$) | GDP (bil.US\$) | GDP 성장률(%) | FDI (bil.US\$) |
|-------|-------------|----------------------------|-------------------|-------------------|-------------------|---------------|-------------------|
| 체 크 | 10.2 | 78,870 | 56.6 | 5,480 | 69.5 | 2.0 | 9.3 |
| 슬로바키아 | 5.4 | 49,010 | 21.3 | 3,970 | 23.7 | 4.4 | 4.0 |
| 헝가리 | 10.2 | 93,030 | 53.7 | 5,290 | 65.8 | 3.3 | 0.85 |
| 폴란드 | 38.6 | 312,700 | 176.6 | 4,570 | 189.0 | 1.4 | 4.1 |
| 라트비아 | 2.3 | 64,600 | 8.1 | 3,480 | 8.4 | 6.1 | 0.38 |
| 리투아니아 | 3.5 | 65,200 | 12.7 | 3,670 | 13.8 | 6.7 | 0.72 |
| 에스토니아 | 1.4 | 45,100 | 5.7 | 4,190 | 6.5 | 6.0 | 0.285 |
| 슬로베니아 | 2.0 | 20,250 | 20.4 | 10,370 | 22.0 | 2.9 | 1.9 |

GDP 규모와 성장률 그리고 GNI의 측면에서 각국의 현황을 살펴보면 체크의 경우는 GDP가 695억 달러이며, 1인당 GNI는 5,480달러로 슬로베니아에 이어 두 번째임. 폴란드의 경우는 전체 GDP 규모는 1,890억 달러로 최대이지만, 1인당 GNI는 체크(5,480달러), 헝가리(5,290달러)에 이어 4,570달러임.

한편 GDP 성장률의 측면에서는 발트 3국이 모두 6%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폴란드와 체크는 각각 1.4%와 2.0%로 발전의 속도가 느려지고 있음. 외국인직접투자에서는 2002년 기준으로 체크가 모두 93억 달러로 최대 규모이며, 슬로바키아 등이 비교적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임.

한편 신규가입한 중동부 유럽의 8개 국가들은 최근에 체제전환을 경험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발전이 기존의 유럽연합 국가에 비해 느린 것이 사실임.

2) EU가입의 의미

지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소위 '철의 장막'을 경계로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서유럽과 동유럽으로 나뉘어졌음.

금번 유럽연합 확대는 이제 더 이상 그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이데올로기적인 구분을 걷어내고 본래의 '유럽으로의 복귀'를 선언한 셈이며 이로써 동과 서를 구분했던 낡은 구시대적인 잔재가 사라졌음을 의미함.

유럽통합의 의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욱 현실성이 있음. 기존가입 국가들 입장에서 신규 가입 국가들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급처인 동시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등장하였으며, 반면 신규 가입국의 입장에서 기존 가입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투자유입처로서 절실함.

EU의 동구확대는 동서유럽의 재결합이라는 역사적 의의와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동구의 체제전환 작업이 완성되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3) EU가입에 따른 경제적 손익

동구경제는 EU가입으로 연평균 1.7~3.2%포인트의 추가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특히 동구국가들의 대EU수출은 8~10%가량증가가 예상되고 동구 국가들 간에도 교역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동구국가들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EU가입에 따른 환경변화로 동구산업계는 기회이자 위기의 시기를 맞고 있음. 비관세장벽의 철폐에 따른 EU시장 접근 용이성과 기업환경의 개선은 기회로 작용하는 반면 경쟁심화, 단일시장법규의 시행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은 위기로 작용하고 있음.

2. 체 크

가. 경제발전사

체크는 중세 때부터 은으로 부를 축적, 이를 토대로 일찍부터 공업화를 시도 하여 18-19세기 무렵에는 중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들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합스부르크 왕가가 지배할 당시에는 합스부르크 왕국 제조업 설비의 70%가 체크슬로바키아 지역에 위치할 정도로 이미 공업이 번성하였음.

1차 세계대전이후 독립할 당시에는 개인소득이 전세계 6~7위 정도로 부유했었고 일찍부터 공업화가 진전된 탓으로 특히 기계산업 전반에 걸쳐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소비재 부문에서도 거의 전분야에 걸쳐 오래된 제조업 역사를 가지고 있음.

1960년대 초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한 체크에서는 시장경제체제로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동시에 광범위한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범사회적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그 결과 당내 개혁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은 두브체크(Alexander Dubcek)가 1968년 1월 당 제1서기로 선출되었음.

두브체크는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위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체제민주화 작업과 경제개혁정책에 착수하였으나 1968년 8월 21일 브레즈네프는 제한주권론을 빌미로 바르샤바조약기구의 동맹군을 동원하여 체크를 무력으로 침공, 두브체크를 실각시킨 후 구스타프 후사크를 내세워 친소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체크의 ‘프라하의 봄’은 사실상 막을 내렸음.

강력한 중앙계획체제로 복귀한 체크는 1970년대 중반까지는 완만하지만 경제성장을 지속하기는 하였으나,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국제원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앙등하는 등 교역조건이 악화됨으로써 무역적자가 차츰 누적되었음.

1989년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을 위한 벨벳혁명 이후 체크는 그동안 낙후되었던 공업기반을 되살리기 위해 민영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쿠폰방식의 민영화가 전반적으로 부정적 효과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과도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부 외국기업에 매각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경영 실적을 올리고 있음.

체크 경제는 19997년 금융위기 직후 19997~1998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바 있으나 산업생산력 증대, 특히 적극적인 해외 투자유치 등을 통해 1999년 말부터 경제 회복으로 반전되었으며 GDP 대비 재정적자율이 높아짐에 따라 부가세율 조정, 공공부문 임금 및 정부예산 삭감, 복지혜택 축소 등을 추진 중에 있음.

2004년 5월 1일 EU 가입과 관련, 그동안 취해진 법, 제도, 관행 등의 투명성 제고 조치에 대한 외국투자자들의 긍정적인 평가 결과, 1993~2003년간 385억 6천만불의 해외투자 유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2003년도 대EU지역 총수출의 86%를 점유하고 있음.

나. 체제전환후 경제정책

체크는 1991년 1월과 11월의 가격자유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삭감과 임금인상 억제 등으로 물가상승폭이 진정되어 가격자유화로 인한 충격이 작은 편이었음.

또한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1992년 이후 재정지출규모를 조세수입 범위 내로 억제하는 한편 일반 공공행정비, 국방비 등은 가급적 동결 내지 축소하고 사회보장비, 복지비, 교육비 등의 지출은 확대하는 등 지출부문을 조정하였음.

체크는 금융정책의 목표를 코루나화의 내적 구매력 유지에 두고, 은행의 민간 여신공여를 강력히 규제하는 등 긴축통화정책을 추진했으며 체제전환 직후 경제안정화를 위해 외환정책을 실시하였음. 또한 환율을 정책지표로 삼기 위해 1990년 12월 환율을 일원화하면서 자국통화를 서방 주요국 통화에 연동시켰음은 물론 추가적인 평가절하를 막기 위해 대폭적인 평가절하를 실시했음.

현재 체크 정부는 대내외 균형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현대화를 위한 투자 및 국가경제의 전체 생산성 향상에 바탕을 둔 경제성장 지원의 경제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직접투자 지원 조치들을 채택하고 있음.

- 체크투자청을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 지원, 체크 무역청 등을 통한 대외 수출 지원에 힘을 쏟고 있으며 또한 체크 기업인들의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요 전략기업들을 포함한 기업들의 구조조정 및 재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EU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음.

다. 민영화(사유화) 방식

민간경제 부문이 극히 취약했던 구체크슬로바키아연방은 국유기업의 사유화를 앞당기기 위하여 무상분배 중심의 급진적 사유화 방식을 채택했는데 이는 바우처(voucher)라는 투자증서를 발행하여 거의 무상으로 일반에게 매각하는 대중사유화(mass privatization) 방식을 말함.

- 체크의 경우 헝가리나 폴란드와 같이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문제가 그리 크게 문제되지 않았고, 기업내부자 집단이 강하지 않았으며, 민간 부문의 비중이 비교적 낮고 취약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음.
- 이에 종업원 우대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대신, 바우처에 의한 무상분배 방식을 중심으로 사유화를 추진했으며 이 방식은 체크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체제전환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고자 하였던 의도가 있었음.
- 이 방식은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쉽게 달성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주식의 지나친 분산으로 책임경영제의 정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

했으며 체크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주를 대신하여 기업경영을 감독하는 금융중개기관의 육성을 계획한 바 있음.

바우처제도에 의한 민영화가 별로 효과를 얻지 못하자, 1998년 5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투자 인센티브 부여를 개시한 바 있으며 외국인 직접 투자방식(FDI)에 의한 민영화는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음.

라. 외자유치 활성화

체크는 체제전환 초기에는 외자유치에 상당히 소극적이었으나, 1998년 이후 본격적으로 외자유치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990년 4월 외국인의 100% 투자허용, 과실송금완화, 세금면제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신외국인투자법의 의회승인, 동년 5월1일부터의 발효로 외국인 투자가 1991년부터 본격화되었으며 특히1992년 대규모 국영기업의 민영화 사업은 외국인들의 대체크 투자를 유인하여 외국인 투자가 증가한 계기가 되었음.

외국인투자와 관련해 그동안 별다른 특혜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1998년 5월 사상 처음으로 투자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후 2000년 2월 동 투자 인센티브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하여 동년 5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신투자인센티브법은 인센티브 수혜를 위한 최저액을 실업률이 높은 특정지역에 대해 US\$5백만달러로 대폭 인하하였음.

투자인센티브법의 주요내용은 법인세 면제, 신규투자기업은 10년간, 기존 기업은 5년간 부분 면제하고, 종업원 훈련 및 재교육 보조금 지급, 고용 창출 보조금 지급, 입지 염가 제공 및 기반시설 지원 등임

- 인센티브 수혜자격은 투자분야가 반드시 제조업이어야 하고, 설비 투자액의 50% 이상이 체크 정부에서 지정한 첨단 기계류 설치에 투입되어야 하며, 투자가 새로운 제조설비의 건설이나 취득에 이루어지거나, 새로운 생산 활동을 위한 기존 생산설비의 현대화 또는 확장에 이루어져야 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마. 방문기관 면담내용 요약

<사유화 과정과 문제점>

사유화는 국가소유에서 개인소유로의 변환을 의미하며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1991년에서 1993년 사이에 사유화되었음.

1990년대 초 은행에 의한 은행형 자본주의화가 심화되어 초기 사유화에 참여했던 소유자들은 이자 지불능력 등이 부족하여 결국은 다시 구 기업가들을 끌어들이며 경영을 맡기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음.

전국민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바우처 방식은 소유주체가 너무 많고 규모가 작다보니 오히려 효율적인 경영에 장애가 되어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음.

- 대안으로 기업경영 능력과 의사를 가진 참여자에게 직접 매각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며 FDI는 민영화에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해법임.

<외국인투자유치(FDI)>

체크는 외국투자자에게 좋은 조건의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 투자청에서, 지역별, 하청업자 명단별 D/B를 구축하여 정부와 기업을 연결해 주고 있음.

투자청은 투자시점부터 투자가 진행되는 전과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생산 확대를 위한 방법, 업체와 하청업체간 연결 등의 지원 활동을 하고 있음.

스코다자동차회사 1991~2000년까지 폭스바겐에게 매각, 폭스바겐이 사실상 소유주로서 지역의 생산자에게 글로벌 활동을 학습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체크에서 가장 성공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사례로 볼 수 있음.

<시민단체의 역할 및 사회문제>

체제전환기 체크는 다양한 부분에서의 시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위기였으며 특히 시민단체는 사회구조를 풍부하게 하여 시민의 활동영역을 넓혀주었고 외국인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단체도 많아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문제점은 없었음.

실업발생과 복지혜택 감소로 인한 노사갈등도 거의 없었으며 체크 노조는 정부의 반대론자가 아니고 협력단체의 역할을 수행하였음.

3. 헝가리

가. 경제발전사

헝가리는 전 국토 중 70%이상이 경작지로서 전통적인 농업국가였으며, 현재도 농·임업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하지만 1782년에 부다페스트 공과대학이 설립될 만큼 기초과학분야가 튼튼한 국가로 과학분야에서의 노벨평화상 수상자 11명을 포함하여 전체 노벨상 수상자를 13명 배출하였고 1945년 이후 공업이 경제정책의 중심이 되었음.

1968년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에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도입한 신경제 메카니즘을 실시하였으며, 1972년에는 회사법이 제정되어 양국간 협정에 따라 외국회사가 헝가리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합작이 가능하였음. 1975년에는 공업 부문 종사자수가 전체 노동력의 37%를 차지하게 되었고 동구에서는 소비물자가 가장 풍부한 나라였음.

1984년 제2차 경제개혁을 실시하였고 1985년부터 동유럽 최초로 외국과 합작투자를 하였으며, 이후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개인 합작회사 설립을 허가하는 등 대폭적인 경제개혁정책을 실시하였음.

1991년 3월 소유권 제도의 확립과 국내자본의 효율성 제고, 교육·행정 개혁을 위한 "경제 전환 및 발전 계획"을 채택하였지만 경제 개혁에 따른 혼란과 긴축정책 등의 부작용으로 1990~1993년까지 헝가리 경제는 역 성장을 하였음.

그러나 1993년 이후 경제 안정화 조치에 따라 시장 경제가 진정되고 공업 생산 및 투자가 증가하여 1994~1995년 동안 2%이상의 성장과 1996~1997년에는 3~4%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였고 1996년 5월에 OECD에 가입하였음.

1999년 헝가리의 교역실적은 수출 115억 1,000만 달러, 수입 130억 6,000만 달러로 1998년 대비 수출은 5.8%, 수입은 7.2% 증가하였음. 헝가리의 수출은 1997년과 1998년 사이에 20%가 넘는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러시아 경제침체의 장기화와 유고사태로 인한 영향으로 1999년에는 저조한 실적을 보임.

헝가리는 2003년 GDP 성장률이 2.9%로 당초 기대를 약간 웃돌며 총 GDP 규모가 733억 유로(828억 달러)에 달했음. 1인당 국민소득은 7,233유로를 기록했는데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1인당 소득은 13,000~14,000유로인 것으로 통계청은 추산하고 있음.

- 이러한 GDP 성장률은 2002년 성장률(3.5%)보다 낮을 뿐 아니라 1996년 1.3% 증가 이후 가장 낮은 증가세이며 실제로 헝가리 경제는 2000년 5.2% 성장 이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음. 다만 지난해 4/4분기 성장률이 3.6%에 달하는 등 성장세가 회복조짐을 보여 올 전망을 밝게 하고 있음.

지난 5월 1일 EU에 신규 편입된 헝가리는 중·동 유럽의 중심지로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크로아티아, 우크라이나 등 7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EU 가입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EU의 남동 지역 거점이 될 가능성이 큼.

그러나 헝가리가 EU 가입에 맞춰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음. 그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외국인 투자유입 확대를 위한 여건을 개선해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일임. 헝가리의 경제성장이 EU에 비해서는 훨씬 높지만 기존의 EU 국가들과 경제 규모의 차이가 매우 큼. 이런 추세로는 앞으로 30~40년이 지난다 해도 1인당 국민소득이 EU 선진국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될 가능성이 높음.

나. 체제전환 후 경제정책

동유럽 국가들은 IMF가 제시한 일반적 경제개혁 추진방향에 근간을 두어 개혁을 추진했으나, 추진양상은 각국의 정치·경제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남.

- 폴란드와 체코는 경제개혁 추진에 있어 전 부문에 걸친 급속한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헝가리는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기 이전부터 가격자유화와 대외개방이 상당부분 이루어져 있어 체코처럼 급격한 가격자유화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음.

가격자유화와 관련하여 헝가리는 공산당정권이 붕괴되기 전인 1986년부터 점진적인 가격자유화가 실시됨에 따라 구정치체제가 붕괴된 이후에도 대폭적인 가격인상 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물가상승률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완만하였음.

- 헝가리는 정부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전반적인 가격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와 기초원료 가격을 점진적으로 자유화하는 과정을 밟았으며 급속한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공급부족이 해결되는 재화부터 자유화하는 정책을 취함.

무역자유화에 있어서는 체제전환 이전부터 상당한 규모의 외채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국내가격을 자유화한 후 대외무역을 점진적으로 자유화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음. 즉 국내가격을 먼저 자유화한 후 경상수지 상황을 보아 가면서 수입자유화율을 확대하는 방법을 택함.

외환자유화와 관련하여서는 1980년대 초 이미 환율을 일원화하였으며 무역자유화와 기업의 경화접근을 통해 화폐의 태환성을 점진적으로 도입하였음. 당좌거래와 외국투자는 태환할 수 있었지만, 개인은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암시장 거래가 상당히 제한될 수 있었음.

재정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체제전환 초기 동유럽 국가들은 세수증대보다는 세출억제에 의한 재정건전화를 도모했으나 당초 계획대로 재정수지 적자가 축소되지 못하는 양상을 나타남.

- 즉 대다수 국가들에 있어 조세행정과 조세제도의 미비, 민영화된 기업의 탈세 및 생산감소에 따른 기업이익의 감소 등으로 세수증대를 이루지 못했으며 국영기업의 매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국영기업 매각에 의한 재정수입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

헝가리는 1991년의 경우 세수는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지출은 계획된 한도 내에서 유지되었으며 예산 적자분은 헝가리 국가은행으로부터의 신용으로 충당하였음.

- 한 가지 특기할만한 점은 헝가리가 1980년대 중반 이후 상당 정도의 가격개혁을 경험하면서 이중은행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1993년부터 일정기간 중앙은행이 고금리 정책을 견지해왔다는 것임.

금융정책과 관련하여 체제전환 초기 동유럽 국가들은 금리의 인상과 민간 신용의 억제를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였으나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정부 신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통화신용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제약되었으며, 경제안정화를 위해 외환정책을 실시한 국가는 폴란드와 체코연방뿐이었음.

동유럽 각국은 임금과 물가상승의 악순환을 배제하기 위해 실질임금의 상승을 억제하는데 주력하였으며 헝가리 역시 임금인상에 따른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1991년 국유기업의 임금에 대한 조세규정을 개정, 일정률 이상의 임금인상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제도를 마련했음.

다. 민영화(사유화) 방식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했던 헝가리는 사유화 초기단계부터 경쟁입찰에 입각한 외적 사유화를 선호하였으며, 이는 헝가리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대량 유입되는 결과를 가져왔음.

- 그러나 이 같은 외적 사유화에 의존한 국유기업의 사유화는 그 과정에 있어 투명성 문제나 매각가격에 대한 논란을 야기했으며, 특히 국내축적 자본의 부족으로 내국인의 사유화 참여가 부진하였음.

따라서 헝가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E-Credit제도나 보상쿠폰제, 종업원지주 프로그램, 소액투자자 주식 매입프로그램 등 내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였음. 그러나 이와 같은 보완제도가 전체 사유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음.

라. 외자유치 활성화

헝가리 정부는 외국인 투자가 유치를 위해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헝가리는 동구권 국가 중 시장경제로의 개혁 추진속도가 가장 빠르고 제도적으로 완비되어 있으며 특히 "정치적 안정"이 매우 공고하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헝가리는 통신, 금융서비스 등 사회간접자본 면에서도 여타 동구국가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EU 준회원협정, 형-EFTA자유무역협정, 중부유럽 자유무역협정(CEFTA) 등 무역환경 정비로 인근국 진출기지로서의 역할이 매우 큰 나라임.

헝가리는 동구국가들 중 가장 먼저인 1988년에 외국인 투자유치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국유화 및 몰수시 투자 당시의 금액으로 보상해주는 투자보장제도와 자유로운 과실송금, 세법 및 관세법에 의거한 투자 혜택 부여, 무역 및 도소매 등 영업활동의 자유로운 보장과 내국인 대우 원칙 등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음.

외국인 투자현황은 1989~1996년까지 165억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중 중구 유럽국가에 대한 총 외국인투자 금액의 1/3을 상회하는 수준임.

- 1995년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45억 달러로 최대를 기록한 이후 1996년 20억달러로 축소되었으나 세계은행 보고서는 헝가리가 1996년 중 세계 12위 투자 대상 국가였다고 발표하였음. 1995년의 외국인 투자는 주요 국영기업 (Utility 부문)의 민영화에 기인함.
- 중앙은행(NBH) 발표에 의하면 1998년말까지의 누적 외국인 투자 총액은 197억 달러이며 정부는 1999년 외국인 투자 목표액을 15억달러로 발표하였음.
- 현재 약 3만개의 외국회사들이 가동 중이며 이들은 헝가리 산업 수출의 78%를 담당하고 있음. 통신, 가공산업, 전력, 가스 서비스업, 무역업, 은행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음.

헝가리는 인구가 1천만에 불과하여 단일시장으로서의 투자 매력은 적은편이나 물류 분배센터로서의 이점과 함께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 값싼 공장 부지 그리고 EU 가입을 위한 노력에 따른 각종 규제 철폐 등이 서방 투자 기업들을 유인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2004년 5월 1일자로 정식 EU 회원국이 됨에 따라 이 시점부터 헝가리를 비롯한 새로운 EU 회원국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에 EU의 경쟁법이 적용됨.

- 경쟁법은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제공하는 지원에 대한 상한선을 규정하는 법으로 모든 회원국에 강제 적용되나 제한 범위 내에서 회원국들은 자국의 투자 인센티브 시스템을 조정할 수 있음.

마. 방문기관 면담내용 요약

<국유재산 처리방법>

체제전환 이후 가장 큰 쟁점은 국유화된 재산의 처리방법이었음.

- 국유재산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우처(voucher)라는 쿠폰형식으로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방식과 국유재산을 직접 매각하는 방식이 있었으나 바우처에 의한 방식은 주식의 지나친 분산으로 책임경영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움.

헝가리는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공장가동의 계속과 고용의 승계 여부를 기준으로 직접 매각하는 방식을 택하였으며, 그 결과 재정수입이 늘고 노후화된 공장시설의 현대화와 새로운 기술 채택으로 수출능력이 제고되었음.

<토지사유화 과정에서의 문제점>

2차대전 전에는 개인소유의 토지가 존재하였으나, 2차대전 이후 강제적으로 협동농장이 설립되면서 62년에는 모든 토지가 국유화됨.

- 63년도에는 경작지 중에 민간소유는 하나도 없게 되고,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의 토지만 있었으며 이는 80년대 말까지 유지되었음.

체제전환 이후에 원소유자에게 토지를 돌려준 것이 아니라 보상채권을 발행하였는데 이는 사유지 인정과정의 시작이었음.

- 1993~1994년부터 영세한 규모(2~3ha)로 경작지 소유가 가능하게 되면서부터 협동농장이 완전 폐지되고 국가소유의 토지도 점차 없어짐.

지금은 EU국가와 경쟁하기 위해선 기계화와 넓은 경작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유화한 땅을 나눠줄 때 영세한 규모로 나누어 준 것을 후회하고 있음.

- 헝가리의 평균소유 경작지 면적은 7~8ha인데 이러한 영세한 규모의 경작지로는 기계화하기에 규모가 너무 작고, 효과적인 운영이 어려우며 EU 국가와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선 300ha의 면적이 필요함.

헝가리에서도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경작지 면적이 넓어져 한 사람이 4,000~5,000ha를 소유한 사람도 있으며, 계속적으로 경작지를 늘리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물론 여기에는 자본이 필요하며, 법적으로 외국인은 경작지를 소유할 수 없으나 현재 실제적으로는 소유하고 있음.

돌아보건대 가장 좋은 방법은 협동농장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회원들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토지를 경작하게 하는 것이었음.

- 협동농장이 있었을 때는 농기계도 많았고 기계사용이 용이하였으며 비료 등을 공동 구입함으로써 생산비를 줄일 수 있었음.

<체제전환 이후 외자유치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체제전환 과정 중에 발생한 부정부패와 국내자본의 유출에 대하여 국민들의 불만이 있었음.

- 국영기업은 기술이 노후화 되어 있었고 새로운 기술로 대체하는 데는 많은 자본이 필요하였으나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여 부자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소유 기업을 외국인에게 팔 수 밖에 없었음.
- 외자유치 과정에서는 상호이익이 충돌하게 되어 경쟁입찰 과정에서 떨어진 기업이 뇌물문제를 제기하는 등 부패문제가 뒤따랐으며 민영화 과정에서 부패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나 부패한 방법으로 기업을 인수했다더라도 결국 세금을 내게 되므로 경제부문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고 생각함.

민영화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인 국가민영화관청이 있었으나 어떤 회사를 매각할지는 정부에서 결정하였으며, 헝가리 관료나 외부인이 간섭할 여지가 없었음.

- 회사를 매각할 때 중요하게 여긴 것은 단순히 수입이 얼마나 될까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고용자를 계속 고용할 것인지를 중요시 여겨 아주싼 값에도 매각함.
- 해고시 대량실업이 발생할 것을 고려해 근로자 고용 승계시 가격을 할인해 주거나 정부지원금을 책정하는 방법을 사용함.

<민영화 과정>

헝가리는 60년대 말에 초기개혁의 단계가 있었으며 이미 72년 합작회사에 관련된 규정을 포함한 법안이 존재

- 이 때 시행한 개혁은 중앙은행과 민간 상업은행의 역할을 구분하고 임금, 가격, 수입체제를 자율화하는 것이었음.

1988년 회사법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1875년에 있었던 법안을 개정한 것으로 이 법에 의해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개념이 도입되고 합작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됨. 동 법의 시행이후 헝가리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첫째, 매각회사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 척도가 없다는 것과 경영층이 단기적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점

둘째, 국가 기간산업의 매각문제

셋째, 반쯤의 기업개혁으로는 기업이 완전한 자본주의기업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음.

민영화 초기 중요 국가 기간산업의 매각이 문제가 되었음. 그래서 국민적 입장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있는 회사들 즉 수도, 전기, 국방을 수행하는 회사는 국가소유로 남길 것으로 결정함.

- 100% 국가소유 23개, 50% 국가소유 3개, 25% 국가소유 3개, 주식하나를 가지고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 9개 등 총 38개 기업 국가소유
- 매각 시 피고용자 승계여부, 해고 시 새로운 직업교육 실시여부, 가능하면 적은 수의 피고용자 해고 여부를 기준으로 매각 계약을 함.

초기 민영화과정을 통해 회사의 일부는 개편할 수 있었지만 회사 전체를 개편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1980년대 말에 부분적이 아닌 완전한 시장경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 대두

- 시장경제제도는 사유재산제도에 기반을 두므로 사유재산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치적 변화가 불가피하게 됨.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개혁 조치가 이루어지고 나서 정치적인 개혁이 뒤따랐다는 것임, 즉 경제적 조치가 정치적 변화를 초래한 것임.

<국유화한 재산의 보상 문제>

원소유자가 누구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현재와 당시의 직업이 달랐기 때문에 국유화이전 상태 그대로 재산을 돌려준 것이 아니고 국가가 자기 재산을 국유화했다는 증명을 하면 '보상표'를 받을 권리가 주어졌음.

- 보상표는 1인당 500만 포린트까지 가능했으며 소유권이 2사람에게 나누어져 있으면 1/2씩(250만 포린트) 지급

- 보상표가 있으면 자치단체 소유의 주택 소유 가능, 토지경매에 지원 토지구입 가능, 증권시장에서의 매매 가능, 재산형태가 아닌 생존시까지의 연금 수령이 가능하였음.

<외자유치 과정>

헝가리는 유럽의 중심으로서 매력적인 투자지역이며 특히 지정학적 위치상 남동유럽의 관문으로 외국인 투자에 이상적이며, 세계 100대기업 중 53개 기업이 지사를 갖고 있음.

- 정치·경제가 매우 안정적이며 스트라이크나 산업위험, 재정위험이 없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음.

헝가리는 1990년대 초 코메콘의 탈퇴, 시장실패, 서구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기업의 부재, 대다수 기업의 부도, 본질적인 생산구조의 왜곡 등으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해 있었음.

1990년대 중기 이후 지주회사의 선업구조를 조정하고, 기계류 산업을 높은 FDI 유입에 맞추고, 자동차생산을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고, 기계류 산업을 경제의 원동력으로 삼고, 강한 수출지향적 정책을 추진하는 등 국가경쟁력 제고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적극 노력함.

1995년부터 외국자본 유입이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생산조립부문과 같이 부가가치가 낮고 값싼 노동력이 필요한 분야에 유입

- 생산성이 높고 부가가치가 높은 연구개발(R&D)분야의 진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외국회사들의 R&D분야 투자율은 전체 GNP규모의 1%였음.
- 헝가리 국민들의 소득증가 압력이 커짐에 따라 생산성이 높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외자유치 정책이 진행되었음.

세금과 관련된 주요 간접적 인센티브제도는 다음과 같음.

- 법인세 16%~18% 감면, 유럽에서 가장 최저

- 주요 투자기업에게 발전적으로 10년 동안 법인세 혜택을 80%까지 지원
- 유럽에서 좀더 유리한 부가가치세 제도중의 하나
- 법인세를 지방세의 25%까지 지원
- 세금면제 투자 유지
- 기업의 R&D와 혁신을 위한 보조금 지급
- 근로자 연수를 위한 세금관련 인센티브 제공

4. 체크-헝가리 비교

가. 개 황

폴란드 등 동유럽의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체크와 헝가리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사회주의 국가로 전환하여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와 공산당이라는 일당독재를 경험하였고, 1980년대말 비슷한 시기에 시장경제체제로의 체제 전환 과정을 겪어 진행과정이 유사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양국이 처한 역사적 배경이나 경제개혁에 대한 경험, 그리고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정치역량 및 야당과 국민들의 역할 등에 따라 그 결과는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체크의 경우 1940대까지 전자,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공업 선진국가였으나 2차 세계대전과 사회주의 체제를 겪으면서 강력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가 이루어져 국민들이 자본주의적 자유 시장경제를 경험해 볼 기회가 적었으며, 이러한 결과로 1990년 체제전환기에는 민간경제 부문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음.

반면 헝가리는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전형적인 농업국가였으나 사회주의 체제를 겪으면서도 정책적으로 공업부문을 육성하고 일반주민들에게 개인 소유나 판매를 폭넓게 허용하면서 중앙집권보다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기업이나 협동농장의 자율적 생산체제를 용인해 주는 등 시장경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해 운용해 오고 있었음.

또한 체제전환기에 국내 정치상황과 지도자들의 판단에 따라 체제전환 방식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였으며 국가 재정 상태나 자국의 경제수준에 따라 경제정책 추진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하지만 체크나 헝가리 등 비슷한 시기에 체제전환을 이룬 중동구 국가들은 서유럽 선진국들을 정치·경제 모델로 삼으면서도 중동구 각국에서 취한

정책들을 상호 비교하고 검증해 보면서 자국정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고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이들 국가들 중에서도 체코와 헝가리, 폴란드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체제전환을 이룬 모범 국가들로서 다른 중동구 국가를 선도해 가고 있음.

이번 “사회주의체제 전환국가 실무연수”의 주 방문국인 체코와 헝가리에 대해 체제전환 전후과정을 경제적 측면 중심으로 상호 비교하고 분석해 봄으로써 양국을 좀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중동구 국가들과 동선으로 놓고 볼 수는 없으나 이러한 비교내용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려 하는 북한과 민족경제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함.

나. 체제전환 이전 배경

1) 민족적 특징

양국은 서유럽에 인접하면서도 전체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서유럽이 동구나 아시아로 진출하거나 러시아와 아시아 세력이 서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유럽권의 전쟁사에 따라 심한 영향을 받아왔음.

체코는 체코-모라비아인이 전체인구 1,027만명 중 94%를 차지하고 있으나 보헤미아왕국(10세기~1526년)때 체코공화국의 전성기를 이루었고 이후 합스부르크 지배(1526~1918)와 독일 나치지배와 공산정권 시대(1939~1989)를 거치면서 약소민족으로서 슬라브 민족권과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성장해 왔고 체코어 자체가 독일어에서 파생되어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등과 함께 독일어권이라고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역사성 때문에 체코인들의 기질은 전체적으로 온화하나 지극히 실리적이고 꼼꼼한 성격이며, 정세 판단이 빠르고 배타적 유럽문화 중심 국가로서 민족적 자부심이 강함. 종교면에서도 유럽국가들과 달리 무신론자들이 전체인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절대적 이상과 같은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현실이익에 관심을 두는 지극히 현실주의적 국민성을 갖고 있다고 할 것임.

헝가리는 전체인구 1,012만명 중 마자르인이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

도인 부다페스트에는 180만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음 체크와 달리 헝가리 민족은 아시아 우랄산맥에 거주했던 한 민족이 서기 890년경 유럽으로 이주해와 약탈과 정복전쟁 등을 통해 오늘날의 헝가리에 정착하게 되었음.

유럽권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기 1,000년경에 국교를 기독교로 개종까지 하였고 이후 몽고침입(13세기)과 오스만 지배(1526~1699), 합스부르크 지배 등의 민족적 수난을 겪으면서 근 1,000년간 1,000여 차례의 전쟁을 겪어 온 민족임.

유럽속의 동양인이고 과거 약탈과 방화를 일삼았다는 것들 때문에 유럽인들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을 오랜 세월동안 겪어야 했으며, 언어도 유럽권과 전혀 다른 우랄어 계통의 마자르어를 사용하는 등 큰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유목민족으로서 진취성과 호방한 기질을 가지면서 오랜 전쟁경험 등으로 생활력이 강하고 현실 적응력이 뛰어나며 과거 유럽권을 주도했다는 민족적 자부심 또한 대단한 민족임. 종교는 개종이후 기독교가 90%를 점하고 있음.

이러한 양국의 민족적 기질은 사회주의체제를 극복해 가는 과정과 체제 전환 이후 양국이 추진한 각종 정책들을 이해하는데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임.

2) 체제전환전 정치·경제

체크는 중세 때는 은으로 부를 축적하였고 14세기에 찰스대학을 설립하였으며, 2차대전 전까지 자동차 등 기계산업과 모조장신구 등 경공업 분야가 고루 발달한 공업국가로서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6~7위에 이를 정도로 부유한 국가였으나 사회주의체제 속에서 강력한 중앙집권식 계획 경제를 고수함으로써 급속한 경제쇠퇴를 겪어야 했음.

1960년대초 심각한 경제위기 발생으로 시장경제체제로의 조속한 이행 요구와 동시에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범사회적 운동이 전개되었고,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1968년 개혁주의자였던 두부체크가 공산당 서기장으로 선출되어 체제 민주화와 경제개혁 작업을 착수하였으나 소련의 무력 침공으로 7개월 만에 실각하여 소위 말하는 “프라하의 봄”은 막을 내리고 되었음.

- 소련의 지원 아래 새로 집권한 후사크의 체크정부는 보수적인 탄압정치를 감행하여 사회 안정화를 이룩하였음. 경제부문에서도 중앙계획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업연합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중앙통제기능을 강화하여

투자, 임금 및 가격결정 등을 포괄적으로 통제하게 되었음. 이후 1970년대에 두차례 유가파동 등을 겪으면서 국제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등 무역적자가 차츰 누적되게 되었음.

비록 체제전환기에 체크의 민간경제부분이 5%에 불과할 정도로 위축되었지만 전통적인 공업국가였고 국민들의 문화적 자긍심과 선진국가였다는 자부심이 있었으며, 유럽 건축의 박물관이라 불릴 정도로 잘 보존된 관광자원의 보유에 따라 세계 각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여행객 등을 통해 체제전환 전에 이미 다수의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 대해 학습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음.

헝가리는 전 국토 중 70%이상이 경작지로서 전통적인 농업국가였으며, 현재도 농·임업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음. 하지만 1782년에 부다페스트 공과대학이 설립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기초과학분야가 튼튼한 국가로 과학분야에서의 노벨평화상 수상자 11명을 포함하여 전체 노벨상 수상자를 13명 배출하였고 1945년 이후 공업이 이 나라 경제정책의 중심이 되었음.

지극히 저항적이고 현실주의적인 민족성 때문에 소련점령에 따른 사회주의체제로 바뀐 이후에도 1954년 헝가리 의거가 있었고, 1968년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에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도입한 신경제메카니즘을 실시하였으며, 1972년에는 회사법이 제정되어 양국간 협정에 따라 외국회사가 헝가리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합작이 가능하였음.

1984년 제2차 경제개혁을 실시하였고 1985년부터 동유럽 최초로 외국과 합작투자를 하였으며, 이후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개인 합작회사 설립을 허가하는 등 대폭적인 경제개혁정책을 실시하였음.

이와 같은 정부의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헝가리 국민들은 1968년 이후 시장경제를 체득하면서 살아왔음. 즉, 1962년까지 모든 토지가 국유화되었으나 1975년경에는 다시 사유농장이 18%정도 존재했고, 1970년대에는 일년에 3번까지 주변국을 여행할 수 있어 동시기에 벌써 연간 해외 여행자수가 300만명에 이르렀고 입국 관광객 수는 1,000만명에 달하였음.

- 이에 따라 관광상품 판매가 허용되고, 헝가리 농산물을 외국인이 구입할 수 있었음. 외환거래는 엄격히 통제되었으나 외국에 거주하는 헝가리인들의 국내 송금 등에 따라 해외상품 구입도 가능했음. 또한 기업에도 자율적인 목표 설정과 기업간 유통이 허용되고 초과 생산품에 대해서는 시장판매도 허용되는 등 체제내 다양한 시장경제제도가 시행되어 왔음.

3) 사회변혁기 정치상황

체코는 정치 지배세력이 구체제를 고수해서 시민세력이 주도한 벨벳혁명에 의해 타율적인 방법으로 체제가 전환된 국가임.

- 1987년 최초의 정치적 목적을 가진 「민주화추진회」가 결성되어 정치적 자유와 개혁을 정부에 요구함으로써 반체제인사들의 조직적 활동이 이후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1989년 11월 문학작가 출신인 하벨을 포함한 지식인들이 연합하여 「시민포럼」을 조직하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반폭력 민주」이 결성되어 반정부 시민궐기를 선도하여 공산정권의 붕괴를 초래하였음.
- 체코정부는 1989년 11월 「시민혁명」으로 공산당의 일당독재가 폐지되었고, 1990년 6월 자유총선을 실시하여 내각제 자유민주정부인 체코슬로바키아연방공화국이 탄생하였음. 이후 1993년 1월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되어 체코공화국으로 국명이 변경됨.

이에 비해 헝가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 정치지도자들이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이었으며 민본주의와 현실적 정치사상이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그대로 드러남.

- 소련의 감시 속에서도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일정부분 유지해 갔으며 1980년 말에는 외국과의 합영, 합작투자 등을 허용하고 일정부분 가격 자유화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시장경제가 도입되었고, 1989년 2월 다당제 도입, 동년 10월 공산당을 폐지하면서 헝가리사회당으로 당명을 바꾸는 등 정치지도자들이 사회 변혁기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 1990년 3월 자유총선을 통한 평화적인 정권교체로 내각제 민주정부가 출범하게 되었음.
- 헝가리의 시민세력은 폴란드의 자유노조 출범 등에 따라 1988년말 경에는 50여개의 시민단체를 형성하였고 이들은 「반체제 원탁회의」를 결성하고 집권당인 공산당과 1989년 6월부터 적극적인 협상을 벌여 사회주의 체제가 자유 민주주의체제로 전환하는데 기여함.

<체제전환기 주요 정치개혁 현황>

| 구 분 | 공산당 폐 지 | 자유총선 | 주도세력 | 국가원수 (소 속) | 총 리 | 공산당명 변 경 | 국호변경 |
|-------|---------|---------|----------------------|----------------|-----------------|------------------|---------------------------|
| 헝 가 리 | 1989.10 | 1990.3월 | 헝가리 민주포럼 (비공산 연정 출범) | 아르파드 곤츠 (민주포럼) | 요제프 안탈 (1990.5) | 헝가리 사회당 (1989.1) | 헝가리 공화국 (1990.12.28) |
| 체 크 | 1990.1 | 1990.6월 | 시민포럼 (비공산 연정 출범) | 바츨라프 하벨 (CF) | 마리안 칼파 (1990.6) | - |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 (1990.3.29) |

다. 체제전환 이후 경제분야 변화

1) 경제정책

체제전환기 체크나 헝가리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따른 경제낙후와 기업의 비효율성 증대로 경제성장이 멈추었거나 퇴보상태였으며,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고 소비재 물자 등의 부족현상이 심화된 상태였으며, 이에 따른 국제경쟁력 약화와 대외채무가 누적되어 국가경제를 압박하고 있었음.

체크는 전통적인 공업국가로 기반이 튼튼하였기에 사회주의체제를 겪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자유시장 경제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는 못하였고 강력한 계획경제 유지에 따른 취약한 민간경제 때문에 1990년부터 시작한 체제전환기 경제개혁정책은 전 부문에 걸친 급속한 개혁을 채택하여 가격 자유화와 거시경제적 안정화를 동시에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토대에서 국유재산의 사유화와 대외개방정책을 시행하게 됨.

- 가격의 자유화는 1991년 1월과 11월에 실시되었고(교통, 통신, 의료 등 일부제외) 동시에 국영기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급을 철폐하고 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물가상승 압력이 진정되어 가격자유화로 인한 충격은 타 중동구 국가들에 비해 적었음.
- 또한 대외무역에서 국가독점을 폐지하고 민간기업의 수출입업무 취급을 허용하는 등 무역을 자유화하고 환율을 대폭 조정하면서 실질환율을 도입, 고정환율제를 시행하였음.

- 이와 함께 재정과 금융, 외환, 임금 및 고용정책 등 거시경제 안정화도 동시에 추진하였음. 헝가리, 폴란드 등에 비해 체제전환기 대외채무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국가채무를 감소시키고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1992년 이후 재정지출 규모를 조세수입 범위 내로 억제하였음.
- 한편, 일반 공공 행정비, 국방비 등은 가급적 동결 내지 축소하고 사회보장비, 의료비, 교육비 등은 확대하는 등 재정부문을 재조정하였음. 또한 경제안정화를 위해 강력한 긴축통화정책을 폈으며, 임금과 물가상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실질임금 상승을 억제하는데 주력하였음.

헝가리는 일찍부터 자유시장경제를 도입하여 시행하여 왔고 공산정권이 붕괴되기 전인 1986년부터 점진적인 가격자유화를 시행해 1989년 체제전환 이후에 체크처럼 급격한 가격자유화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음.

헝가리는 정부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전반적 가격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와 기초 원료 가격을 순차적으로 자유화하였는데 급속한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공급부족이 해소되는 품목부터 자유화를 실시하였음. 또한 헝가리는 체제전환 이전 210억달러에 이르는 대외채무를 가지고 있어서 국가 재정의 확충과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국내가격을 자유화한 후 대외무역을 단계별로 자유화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음.

외화자유화와 관련하여 헝가리는 1980년대 초에 이미 환율을 일원화하였고 무역자유화와 기업의 경화접근이 가능토록 해 화폐의 태환성을 점진적으로 높이면서 개인은 엄격히 제한하여 폴란드 등에 비해 암시장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 헝가리는 특별한 안정화정책은 없었지만 대외채무 증대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예산 적자분은 국가은행으로부터 충당하는 이중은행체계를 유지하고 1993년부터 고금리정책을 일정기간 견지하였음.
-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폈는데 1991년에 국유기업의 임금에 대한 조세규정을 개정하여 일정률 이상의 임금인상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였지만 이 제도는 1993년에 폐지하였음.

<양국의 가격자유화 추이>

| 국가별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
| 체 크 | - | 72.1 | 81.7 | 82.1 | 81.7 | 82.6 | 82.6 | 86.7 |
| 헝가리 | 84.0 | 89.0 | 89.1 | 89.2 | 88.2 | 87.1 | 87.2 | 84.1 |

주) 위 수치는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자유화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임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단위: %)

| 국가별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
| 체 크 | 2.3 | 10.8 | 52.0 | 12.7 | 18.2 | 9.7 | 7.9 |
| 헝가리 | 17.0 | 28.9 | 32.0 | 21.6 | 21.1 | 21.2 | 28.3 |

<환율변동 추이>

| 국가별 | 1988 | 1989 | 1990 | 1991 |
|-------------|------|------|------|------|
| 체크(Koruna) | 14.3 | 14.3 | 28.0 | 27.8 |
| 헝가리(Forint) | 52.5 | 62.5 | 61.5 | 75.6 |

주) 1988~1990년은 상업환율, 1991년은 은행간 거래환율 적용

2) 국유재산 사유화

체크는 강력한 중앙집권식 계획경제하에서 민간경제부문이 5%밖에 안돼 일반국민이나 기업 내부자 반발 등이 문제되지 않았고 경제규모에 비해 비교적 작은 80억달러 정도의 외채를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재정적 안정이 있었기에 국부를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어 국민적 지지를 얻어 내고자 무상증권을 교부해 주는 대중사유화(바우처) 방식을 주로 사용하였음.(1984년 민간부문 3%)

- 그러나 기업소유의 지나친 분산과 책임경영 부재에 따른 기업의 체질 개선 미흡 등의 문제를 야기해, 이후 일부 국유재산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통한 직접매각을 시행하게 되었고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적극 추진하였음.

- 공산정권이 몰수한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부 원소유주에게 되돌려주는 정책을 폈으며, 재산소멸 등 불가피한 경우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하였음.

헝가리는 이미 1960년대 말부터 개인의 토지소유가 일부 허용이 되어지고 있었고 1980년대 말경에는 개인들의 자본축적도 상당부분 이루어졌으며, 과도한 국가채무로 인해 재정상태가 열악하였기 때문에 국유재산의 사유화 방식을 직접매각과 경쟁입찰 위주로 추진하여 매각대금을 국가재정으로 충당해야만 했음.(1984년 민간부문 비중 35%)

- 따라서 매각의 투명성 문제와 헐값에 판매한다는 매각가격에 대한 논란이 야기됐으며, 특히 국내자본 축적의 부족으로 내국인의 참여가 저조하여 국부의 지나친 해외유출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어 기업경영자나 종업원들에게 매각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보완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전체 사유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었음.
- 또한 공산정권에 의해 몰수된 재산의 처리는 교회 등 종교집단이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에 대해서는 반환하였으나 일반인들에게는 몰수재산 반환 대신 보상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음.

<양국의 사유화 방식>

| 국가별 | 기본방식 | 2차방식 | 사유화 속도의 정책적 중요성 | 원소유자 반환 | 외국인 투자도입 정책(실적, \$) |
|-----|-----------------|------|-----------------|-----------------|----------------------|
| 체 크 | 대중사유화 (Voucher) | 직접매각 | 1990년대 초반까지 최우선 | 소규모 사유화에서 일부 적용 | 1990년대 중반 이후 중요(967) |
| 헝가리 | 직접매각 | MEBO | 1990년대 중반 이후 중요 | 광범위하게 적용 | 매우 중요 (1,627) |

주) MEBO : Manager Employer Buy Out(사유화 기업의 경영진과 종업원에게 특혜 매각)

<국유기업 사유화제도 비교>

| 구 분 | 체 크 | 형 가 리 | |
|-------------|---------------------------------------|---|----------------|
| 사유화 초기의 문제점 | - 지나친 민간부문의 취약성 | - 특권층 사유화의 만연 | |
| 담당기관 | - 사유화부 - 국가재산기금(NPF) - 지역사유화위원회 | - 국가자산청(SPA) - 국가지주회사(SHC) * 95년 합병(SPHC) | |
| 사유화 방식 | - 대중사유화 - 외부자 직접매각 | - 외부자 직접매각 | |
| 주요 투자자 | - 전국민 | - 외국투자자 | |
| 종업원 우대정책 | - 해당 없음 | - 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매각 - 매각대금 분할 납부 | |
| 원소유주 반환방식 | - 현물 반환 및 보상 | - 보상증권으로 보상 | |
| 실 | 중 대 규 모 | - 체크 81%(95년 6월말) | - 75%(95년 4월말) |
| | 소 규 모 | - 체크 93년말 완료 | - 94년말 까지 완료 |
| 적 | 민간부문 비중 | - 체크 70%(95년중) | - 60% (94년중) |

3) 외국자본 유치

체제전환 초기 체크는 국유재산의 대중사유화에 중점을 두었고, 과거 공업국가로서의 자부심과 국부의 해외유출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정부가 적극 외자유치에 나서지 않아 1997년까지는 유치 실적이 저조함.

- 물론 제도적으로는 1990년 5월 외국인에게 100% 투자허용, 과실송금 완화, 세금면제의 법적근거 명시 등 신외국인투자법이 발효되었으나 외국인들에게 투자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특혜제도는 별도로 시행하지 않다가 1997년의 외환위기 경험과 대중사유화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1998년 5월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제 도입을 골자로 한 투자인센티브법을 시행하는 등 본격 외자유치에 나서게 되었음.
- 2003년말 기준 1인당 외국인 투자유치 1위이며, 2002년 기준 93억달러를 유치해 중동구권 1위를 차지하고 있음.

헝가리는 체제전환 초기부터 국내자본 부족과 대외채무 악화에 따른 재정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국유재산 매각과 외국인 직접투자 등 외자유치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음. 기 약속한 바처럼 1972년에 이미 국가간 협정에 따라 외국기업의 헝가리 진출이 허용되었으며, 1988년 외국인 투자유치법을 제정하였고, 1991년 1월 외국인투자유치 전담기구인 「HIT」를 설립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991년 6월말 합작기업 수가 8,700개에 이르렀음.

- 그러나 총 매각자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금액이 15억달러에 불과해 1개 기업체당 20만달러에도 안되는 수준이었고 기업의 비효율성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헝가리 정부는 법적·제도적 장치정비와 정치적 안정을 공고히 하고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적극 유치하여 1996년까지 외국인 직접 투자금액이 165억달러에 이르는 등 중동구 국가들의 모범이 되어왔음.

양국을 포함한 중동구권 국가들은 현재 경쟁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각종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체크가 중부유럽권상 지리적 여건이 우수하고, 노동력과 교육 인프라 등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체크 투자청(Czech Invest)과 같은 투자유치 기관의 행정 서비스가 월등하여 보다 많은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외자유치 관련법안 제정 비교>

| 국가별 | 외 자 최초입법 | 외국인100% 소유허가 | 주식시장 개방 | 회사법 | 경쟁법 | 파산법 |
|-----|----------|--------------|---------|------|------|------|
| 체 크 | 1985 | 1991 | 1992 | 1991 | 1991 | 1994 |
| 헝가리 | 1972 | 1988 | 1990 | 1989 | 1990 | 1991 |

<체제전환 이후 국가별/산업별 FDI 현황>

(2003년말 기준)

| 국가별 | 주요 투자국 | 산 업 별 |
|-----|---|---|
| 체 크 | 독일(32%)→네덜란드(13%)→오스트리아(11%)→프랑스(9%)→미국(7%)→기타(28%) | 제조업(33%)→은행·재정(20%)→교통(15%)→서비스(13%)→부동산(8%)→기타(11%) |
| 헝가리 | 독일(34%)→네덜란드(23%)→오스트리아(15%)→미국(11%)→프랑스(9%)→기타(8%) | 제조업(46%)→은행·재정(12%)→교통·통신(12%)→서비스(11%)→부동산(11%)→기타(8%) |

<연도별 FDI 유치현황>

(단위 : 백만유로)

| 국가별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
| 체 크 | 1,140 | 1,152 | 3,317 | 5,933 | 5,404 | 6,296 | 9,012 | 2,289 |
| 헝가리 | 2,143 | 3,165 | 2,381 | 2,489 | 2,645 | 2,575 | 3,068 | 3,439 |

4) 기타(노동 · 교육 · 보건 등)

체크는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는 완전고용 상태였고 내국인 위주로 민영화 추진하였기 때문에 헝가리가 겪은 기업도산에 따른 대량실업사태와 같은 사회적 혼란이 없었기 때문에 전환초기에는 노동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최근에 와서 실업자 직업교육정책 등을 펴고 있지만 여전히 제한적이며 아직까지 정부가 뚜렷한 노동정책을 내놓고 있지는 못함.

- 1997년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가 본격화되면서 기업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문제가 대두되었지만 초기 노동조합 대표 등이 사회주의체제시절의 어용노조였기에 노조-기업-정부와의 관계가 대립적 관계가 아닌 협조자로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해 적극 지원하였음.
- 따라서 정부는 노조문제보다는 임금억제를 통한 인플레이 축소에 역점을 두어 2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정 3자간 임금인상 원칙과 사회보장 상한선을 정한 ‘일반협정’ 체결을 유도하고 임금인상을 생계비 지수 상승률에 연동시키면서 임금의 초과상승에 대해서는 조세를 통해 규제하는 정책을 폈음.

또한 가격의 대폭적 현실화와 임금상승 억제정책에 따라 의료, 임금, 연금 등의 실질가치가 하락하였지만 이를 정부가 보상해주지는 못하였고 1996이후 임금에 대한 정부의 중앙통제가 폐지되면서 개별 사업장별로 분야별, 직위별 차등적인 임금인상은 있었지만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임금수준은 못되고 있음.

체크의 사회보전 및 고용안전 체계는 1993년 1월 개정이 이루어져 국가 독점체계가 줄어들었고, 각종 질병과 연금, 근로자보험 등을 포함한 새로운 사회보전 및 고용안전 체계가 1995년 1월에 발효되어 체제전환 초기의 국민 생활수준 축소분을 일부 보상해 주면서 민간부문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음.

- 그러나 의료, 교육 등 사회주의체제부터 있었던 거의 무료로 가까운 제도는 계속 유지됨.

헝가리의 노동정책을 살펴보면 체크와 마찬가지로 임금과 물가상승의 악순환을 배제하기 위해 1991년부터 국유기업 임금인상을 조세제도로 규제했으며, 대량실업사태 등을 막기 위해 국유기업 매각시 주요 조건중의 하나로 고용승계와 재취업 프로그램제 실시를 권장하고 이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계속 고용을 위해 노력한 결과, 최근에는 체크에 비해 실업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안정적인 경제운용을 하고 있음.

헝가리는 위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연금소득자 소득감소나 실업자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부의 역할은 없었으며, 외국자본 유치로 일정부분을 해결하고자 하였음.

- 그러나 최근에 사회주의체제부터 존속해 왔던 의료, 교육, 연금, 주택 등 지나친 사회보장제도 때문에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여 자본을 축적해야겠다는 이윤동기가 유발되지 않아 국민소득 향상에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지나친 복지혜택에 대한 개혁이 요구됨.

<양국의 실업률 추이>

| 국가별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p) |
|-----|------|------|------|------|------|------|-------|-------|---------|
| 체 크 | 3.5% | 3.9% | 7.7% | 8.5% | 9.0% | 8.7% | 10.2% | 10.2% | 10.5% |
| 헝가리 | 9.9% | 8.7% | 7.8% | 7.0% | 6.4% | 5.7% | 5.6% | 5.6% | 5.7% |

라. 주요 경제지표 비교

1) 체제전환 전후 초기여건

| 국가별 | PPP기준 1인당 GDP (1989, 달러) | CMEA 교역의 GDP 비중 (1990) | 농업비중 (1989) | 전환전 외채규모 (1989,달러) | 전환전 연도의 외채/ GDP 비중(%) | 전환전 연도의 중등학교 등록률 |
|-----|-----------------------------------|---------------------------------|----------------|--------------------------|--------------------------------|---------------------------|
| 체 크 | 8,207 | 10 | 7 | 79억 | 12.2 | 0.91 |
| 헝가리 | 6,081 | 10 | 14 | 213억 | 64.0 | 0.75 |

주) CMEA :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COMECON

2) 양국의 현 경제지표

<체코 주요 경제동향>

| 구 분 | 2000 | 2001 | 2002 | 2003 |
|---------------|-------|-------|-------|-------|
| GDP(억US\$) | 514 | 567 | 726 | 895 |
| 1인당 GDP(US\$) | 4,932 | 5,593 | 6,815 | 8,400 |
| 가계소비증가율(%) | 2.5 | 3.6 | 4.0 | 5.4 |
| 경제성장률(%) | 3.6 | 3.3 | 2.7 | 2.5 |
| 물가상승률(%) | 3.9 | 4.7 | 1.8 | 1.6 |
| 평균이자율(%) | 3.9 | 4.7 | 1.8 | 0.1 |
| 실업률(%) | 9.0 | 8.5 | 10.2 | 10.4 |
| 임금증가율(%) | 4.8 | 7.0 | 6.2 | 5.8 |
| 평균환율(\$:Kc) | 38.59 | 38.04 | 32.74 | 28.23 |

<체코의 교역규모>

(단위 : 천US\$)

| 구 분 | 2000 | 2001 | 2002 | 2003 |
|------|---------|---------|---------|---------|
| 수 출 | 65,665 | 72,869 | 108,844 | 142,748 |
| 수 입 | 126,884 | 98,728 | 100,238 | 94,072 |
| 무역수지 | ▼61,219 | ▼25,859 | 8,606 | 48,676 |

<헝가리 주요 경제동향>

| 구 분 | 2001 | 2002 | 2003 | 2004(전망) |
|---------------|-------|-------|-------|----------|
| GDP(억US\$) | 522 | 598 | 828 | 857 |
| 1인당 GDP(US\$) | 5,157 | 5,908 | 8,181 | 8,466 |
| 실질경제성장률(%) | 3.8 | 3.3 | 2.9 | 3.4 |
| 물가상승율(%) | 9.2 | 5.3 | 4.7 | 6.5 |
| 재정적자(/GDP,%) | 4.7 | 9.6 | 5.9 | 4.6 |
| 실업률(%) | 5.7 | 5.6 | 5.6 | 5.7 |
| 임금증가율(%) | 18.0 | 18.3 | 11.5 | 8.0 |
| 평균환율(\$:Fr) | 286.6 | 258.0 | 224.4 | 210.0 |

<헝가리의 교역규모>

(단위 : 억US\$)

| 구 분 | 2001 | 2002 | 2003 | 2004(전망) |
|------|------|------|------|----------|
| 수 출 | 305 | 343 | 425 | 470 |
| 수 입 | 337 | 376 | 475 | 510 |
| 무역수지 | ▼32 | ▼33 | ▼50 | ▼40 |

<양국의 주요 산업구조>

| 국가별 | 산 업 구 조(%) |
|-----|---|
| 체 크 | 제조업(33), 재정·금융(16), 호텔등서비스(41), 건설(7), 농업(3) |
| 헝가리 | 제조업(29), 교통·통신(12), 농림(11), 관광(10), 건설(7), 기타(31) |

<양국의 주요 교역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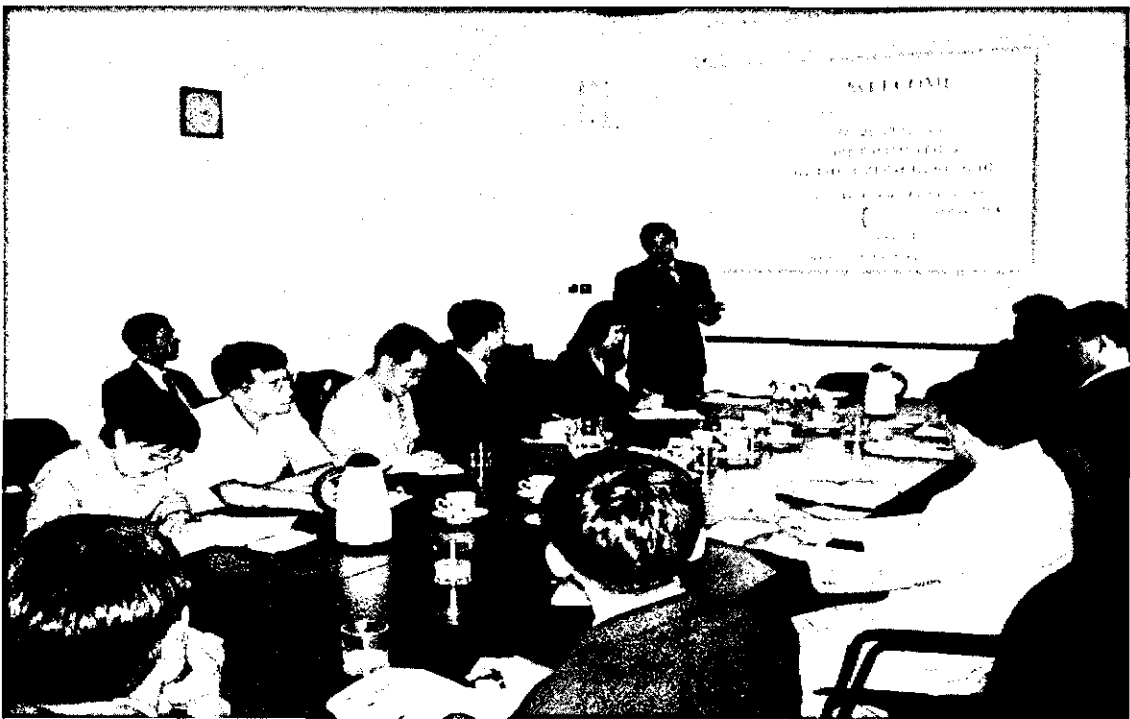
| 국가별 | 교 역 품 목 |
|-----|--|
| 체 크 | 수출 : 운송기기, 전동기기, 금속제품, 화학, 철강제품 등 수입 : 전동기기, 운송기기, 기계, 화학제품, 사무기기 등 |
| 헝가리 | 수출 :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류, 농산물 수입 : 부품 및 중간재, 기타 기계류, 광물류 |

Ⅲ. 방문기관별 면담 결과

1. 투자청

가. 기관개요

- 기관명 : 체크 투자청(Czech Invest)
- 기 능 : 1992년 산업무역부의 연계기관으로 설립, 체크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 등에 투자자문, 각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소재지 : 프라하(체크)
- 면담자 : Josef Lebl(Advisor to the CEO)
- 방문일 : 2004. 6.22(월) 14:15-15:30



(면담 모습)

나. 면담내용

<Josef Lebl 프리젠테이션 요약>

- 체크의 인구는 약 1,000만명, 실업률은 약10% 정도, 1인당 GDP는 5,484US\$이지만 실질 가처분소득은 약 15,800US\$임. 투자청의 임무와 역할은 외국자본 유치 지원과 국내기업 활동지원, EU 구조기금 (Structure Fund) 지원 등임.

○ 1993~2003년간 외국투자 유치 현황을 설명

- 1995~97년간은 외자유치 실적이 저조했고, 2003년은 체크텔레콤 사유화가 지연되어(네덜란드 회사에 매각) 낮았으나, 런던 EIU 전망에 의하면 2007년까지는 외자유치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외자유치는 국유화에서 사유화과정을 통해 가능했으며, 그 예로 전기회사를 들 수 있음. 2007년부터는 30억불정도의 투자유치가 예상되고 있음.
- 외국투자자본 유치 현황을 보면, 체크가 4,020EURO(1인당 기준)로 선두이며, 헝가리가 2,764EURO로 3위를 나타내고 있음.
(1인당 외국투자유치현황 : 체크→에스토니아→헝가리→슬로베니아→러시아)
- 93~03년간 사유화정책과 맞물려 투자·설비 포함한 외자유치를 국가별로 보면, 독일 32%, 네덜란드 13%, 오스트리아 11%, 일본 1%임.
- 외국투자부문별 현황은 제조업 33%, 은행·재정 20%, 교통 15%, 산업서비스 13%, 부동산 8%, 전기·가스 6%, 기타 5%임.
- 외국투자국가 중에서 투자청 프로젝트별 참여수준은 독일 24%, 일본 20%, 베네룩스 11%, USA 7%, 캐나다 4% 등임.
- 프로젝트 부문은 자동차 46%, 전기전자 17%, 화학·플라스틱 10%임.
- 그중 TOP 10 프로젝트는 ①도요타 PSA ②LG PHILIPS, ③SKODA AUTO, ④TORAY, ⑤DENS. O 등임.
- 2003년도 수출입 현황은 수출 69%(EU국), 수입 59%(러시아)임. 이중 러시아 수입의 상당량은 원유 때문임.

○ 왜 외국기업이 체크에 투자할까요, 조건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음.

- 중동유럽 자체가 빠른 성장세로 발전하고 있으며, 체크는 오래된 산업 전통을 갖고 있음. 예를 들면 자동차를 1897년도에 이미 생산했고, 현재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음.
-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능력있고 유연하며 효과적인 노동력의 지원이 가능함. 하청업 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음.
- 외국의 국내투자시 좋은 투자조건을 준비하고 있음.
- 세금과 관련한 투자조건이 좋음. 즉, 법인세 28%, 소득세 15~32%, 부가가치세 19~5%, 종량세(알콜, 담배, 가솔린), 주세 저렴 등

○ 법인세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국내 외국기업의 지원과 맞물려 제조생산 part 지원과 비즈니스 지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제조 생산 part 지원의 4가지 조건은

- ①세금 인센티브로 10년 동안 법인세 면제받을 수 있음.
 - 면제조건은, 3년 동안 최소투자액 200 mil czk(C,D지역)
150 mil czk(B지역)
100 mil czk(A): 실업률 높은 지역
- ② 제조업체 최소 40%이상 투자, High-Tech 최소 50%이상 투자
- ③ 노동자 재교육 학습에 개런티
- ④ 상징적인 가격으로 지원

o 투자청은 Business Support Service and Technology Centers의 기능을 하고 있음. 투자 환경, 조건은 기업의 투자 의도가 상공부에 의해 결정되며, 노동자의 재교육은 노동부에 의해 지원됨.

o EU의 관점에서 “2002~2006 EU 지침서”에 따르면 국가가 사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정도는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음. 발달된 도시 프라하는 20%이고, 보헤미아는 50%, 모라비아는 44%임.

- 외국투자 유망종목은 ①자동차, ②전자·반도체, ③기업지원부문과 기술센터, ④생명공학과 제약업
- 자동차의 경우 한국의 현대-기아의 경영자와 의논하면서 우리는 동쪽 지역을 제시하였으나 마지막에 투자지가 슬로바키아로 결정

o 성공적인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 도요타 푸조 : 1.5bil EURO(연간 생산액), 250ha 면적이며, 헝가리와 폴란드가 함께 유치하려고 했는데, 체크 프라하의 유리한 점을 설득하여 결국 유치에 성공하게 되었음. 소형자동차를 내년 초 출고 예정
- LG-필립스 디스플레이 : 동쪽 모라비 지역, 6억 2,400만불로 800만 브라운관을 생산할 예정이며, 90%를 EU에 수출
- Panasonic : TV 생산, 4개지역에 전자산업단지 오디오 시설로 2억5천만불 수출
- DHL : 전략적 서비스를 도와주고 있음. 세계에서 가장 큰 지점 설치 예정, 5억불 투자액과 1,000명 이상 고급인력 유치

o 아시아 프로젝트 : 대우 아비아, LG 필립스 모라비아 TV, 타이완 PC에 대한 투자, 옷감생산 등

- 한국인 투자에 대해 자문(교수와 의논중), 2004년 6월 15자 서울-프라하간 직항로 개설로 KAL 대표가 체크를 방문하였으며, 직항 Opening Ceremony도 개최하였음. 이는 비즈니스맨에게 좋은 소식이며 효과적임.

○ 외국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체크 투자청의 역할

- 외국투자자에게 조건 좋은 정보 제공, 상업지역 대상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 지역별 대상결정을 위한 D/B와 각 지역의 하청업자 명단(1,000여개)을 이미 D/B로 구축하고 있으면서 정부와 기업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정보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음. 투자자와 사업체간 연결능력을 갖고 있으며, 투자자 쪽에 서서 일하려고 함. 관료주의 제거 노력(red-tape 등), 정부기관 환경개선 노력
- 투자기업과 각 지역 대학이 협력하여 투자자에게 질 좋은 인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임. 마스시타의 경우 지역대학과 산학협약을 체결하여 대학기간 중에는 실습을 하고 졸업 후에는 곧바로 취업
- 투자 요청에 대해 연결시켜 주는 기관, 상공부에 요구 지지하는 역할, 투자청은 투자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과정에 지원하는 것임. 생산 확대, 하청업체 지원 등
- 투자청에 전문가가 있음. 상공부와 연결되어 일하는 에이전시로 외국기업에 제공한 서비스는 무료임. 기타사항은 웹사이트를 참고

<질문>

IBRD 등 외국기관을 통해 외자유치를 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

- IBRD 등 세계은행기구를 이용하지 않았음. EUDP에서 지원하는 폴란드-헝가리 경제구조지원(PHARE) 프로그램을 유용하게 이용, 에이전시가 EU의 PHARE에서 받았음. 돈을 개별 예산으로 사용, 에이전시가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임.

<질문>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외자유치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가?

<답변>

- 사유화 정책전환과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외자유치가 저조했던 것임. 이는 정부의 정치와 상당히 연관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국가기업이 외국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아 바우처에 의한 사유화를 진행하였지만 국내기업의 자본화가 안되어 외국자본을 유치하게 된 것임.

○ 외국 투자유치를 하는 것은 물론 경제가 중요하지만 정치적 안정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봄.

- 투자 인센티브시스템을 도입하여 외국투자자들의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99년부터임. 외국투자자본 증가이유는 정부의 긍정적인 관점의 변화임. 1998년 정권 변화시, 외국투자자에게 모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했음.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자세를 취한 결과임.

<질문>

Voucher(바우처) 제도에 의한 국내 사유화 실시에 대하여 평가한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답변>

○ 국내 사유화정책에 대해 성공적이지는 못했다고 봄. 실제로 사유화정책은 1,000만명이 참여하는 정책으로 너무 넓은 범위의 참여이다 보니 기업의 결정력이 떨어졌음. 사유화 정책은 성공적이지 못한 사례였음.

- 성공적인 모델은 현금·현물방식으로, 사유화를 원하는 능력 있는 대상에게 매각하는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봄. 사유화 과정을 대상에게 보여주고 후원자를 뽑아서 넘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

<질문>

미래의 통일된 한반도를 위해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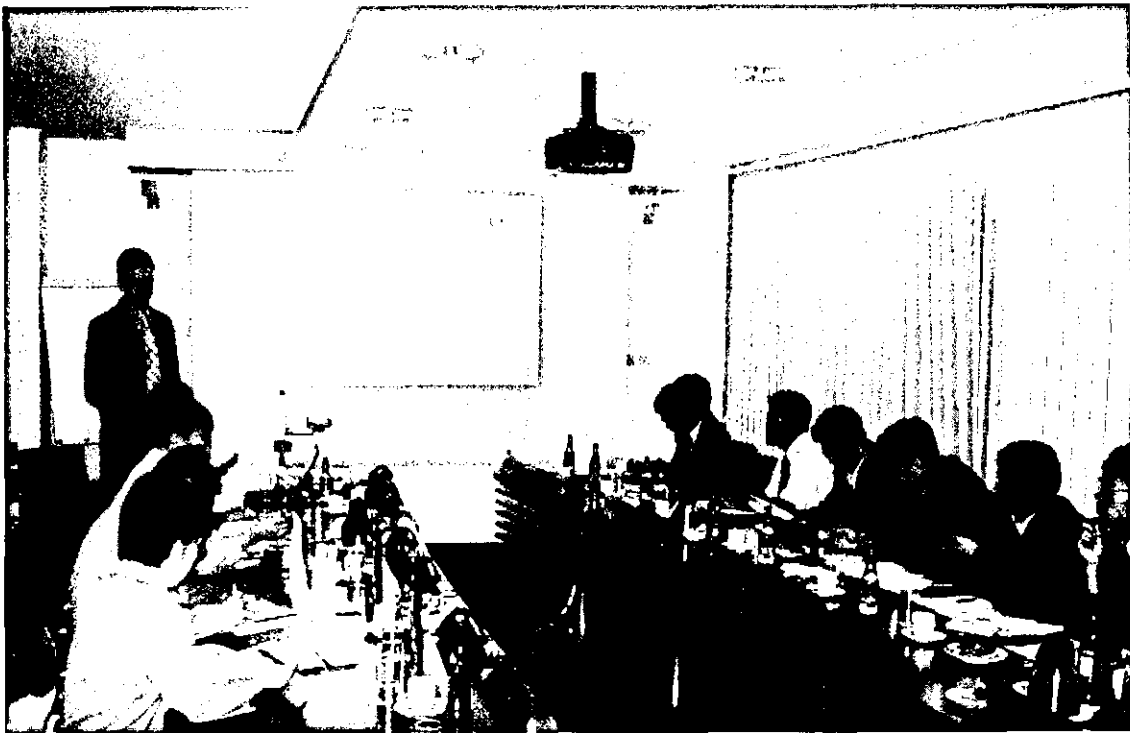
○ 체크는 개혁 15년이 되었음. 미래 한국에 대해 통일된 독일의 예를 비교하면 좋을 것 같음. 개인적으로 서독과 동독에 많은 친구가 있음. 서독 정부가 많은 실수를 했다고 토로하는 것을 보았음.

- 동독의 우량기업까지 지원을 하지 않아 파산했으며, 오히려 파산을 유도했기 때문에 현재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당분간 어려울 수 있지만 북한이 경제를 일으키려 할 때 남한이 도와서 일으켜주어야 하며, 모든 분야에 대대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봄.

2. 스코다 자동차

가. 기관개요

- 기관명 : 스코다 자동차(Skoda Auto)
- 기능 : 1905년 설립된 체크의 대표적인 자동차회사, 1991년 4월부터 민영화(현재는 독일 Volkswagen社에서 운영)
- 소재지 : 프라하(체크)
- 면담자 : Roman Kubista (생산부장)
- 방문일 : 2004. 6. 23(화) 10:00~11:30



(면담 모습)

나. 면담내용

<스코다 자동차 개괄적 설명>

- 오늘 프리젠테이션은 스코다 자동차의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변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스코다 자동차는 1895년 로린과 클레망에 의해 설립되었고 1905년에 첫 자동차를 생산하였으며, 1925년에는 스코다 플젠과 합병 현재의 스코다로 출발하였습니다.

- 1991년 30%지분을 폴스바겐이 인수한 후 매년 지분매입을 늘려 2000.5에는 지분100%를 폴크스바겐이 취득, 실질소유주임.

<스코다는 어떤 회사인가>

o 스코다는 세계3대 오래된 자동차 회사의 하나로서 체크 내에서 가장 큰 산업회사이자 가장 큰 수출회사로서 전 세계적으로 1000만이 넘는 고객을 두고 있음.

- 스코다는 지역의 생산자에서 글로벌 활동을 하는 가장 성공적인 변혁을 이룬 사례임.
- 이곳 플라다 블레슬라프 등 체크내 공장의 근로자는 23,500명, 생산량은 일일 1,820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보스니아, 우크라이나, 인도의 현지공장에서 연 11,000대의 차량을 생산하고 있음.

o 고객만족을 위해 생산과 공정, 서비스 공급 등을 확대 고객의 만족을 드리는 것임.

- 체제변혁이후 불량지수(만점 1.0)가 91년 4.8에서 2003년 1.1로 대폭 향상되었음.

o 2004년에 스코다는 소형 파비아, 중형 옥타비아, 대형 수퍼브 등을 연간 45만대를 생산하여 수출 84%, 내수 16%에 이르고 있음.

- 체크 총수출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수 시장점유율은 48%
- 판매지역도 91년에는 서유럽위주이던 것이 2003년에는 러시아, 중국, 중동, 남미 지역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음.
- 회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과거의 싼 가격브랜드 이미지에서 현재는 가격과 가치를 지닌 브랜드로 변화 중

o 스코다의 목표

- 프로필과 위치 강화
- 소비자 감성강화
- 브랜드 이미지 강화
- 브랜드 로열티와 뉴옥타비아의 이미지 조성,
- 브랜드 질 강화를 위해 생태학적인 관점을 강화하고 있음.

<질문>

최근의 북한이 조심스런 개혁개방을 하고 있는데 체제전환이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과정을 배워 갔으면 좋겠음. 먼저 질문은 80년대 중반의 체제 전환전의 스코다의 모습과 문제점, 그리고 원인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단편적 비교는 어려움. 개혁 전은 국가소유 독점자동차 회사로 국내시장에 주력하였으며 판매망은 없었고, 생산의 문제점은 질적인 문제였음. 1989년과 현재의 작업장 모습을 비교해 보면 짧은 기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당시는 공급의 문제도 존재했음. 실질적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관계유지가 없었음이 문제였으며 질과 공급적인 차원이 큰 문제였음.

<질문>

민영화과정에서의 정부의 직접지원이 있었는지와 유로국가 이외의 국가들의 경쟁을 위한 공정한 제도가 있는지

<답변>

○ 정부가 재정지원을 담당하고 상공부가 전략적 파트너를 발굴하는 체제임. 물론 상공부안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기업경쟁보호국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동차 시장은 국영기업과 개인기업이 자율적으로 경쟁함.

<질문>

스코다 매각과정과 폭스바겐사의 인수시 발전전략은 무엇이었는가.

<답변>

○ 1990년대 매각외국투자회사 24개가 신청했고, 최종적으로 르노와 폭스바겐이 선정되었음. 두 회사 중 노동자 감축문제, 생산성 향상방안, 기술적 지원, 상표유지 등 여러 면에서 폭스바겐이 투자제시조건이 우수해서 폭스바겐으로 결정되었음.

- 24개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서유럽회사들이 동유럽 시장 점유율 향상을 위해 참여한 것임. 체코 국민들의 소비욕구, 스코다의 동유럽 시장점유율이 높아서였음.

○ 폭스바겐사 인수시 발전전략은 중저가 시장점유율 전략이었음. 당시 스코다가 동유럽시장 점유율이 높았음.

<질문>

체제전환이전 근로자들의 나태, 소극적인 행태를 적극적으로 바꾼 전략은

<답변>

- 체제전환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국가가 배치했지만 체제전환이후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함. 국가는 분위기 조성만 하고 있음.

<질문>

스코다를 외국기업에 매각하는데 대한 노동조합의 반대는 없었는지, 그리고 체제전환이후 높은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인상요구가 컸을 텐데 그리고 현재의 노조와 사용자간의 관계는 어떤가

<답변>

- 「코보」라는 노조가 조직되어 있었으며 체제전환 이후 노동자들이 시야가 넓어졌고 자신의 회사제품이 경쟁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음. 그래서 노조도 기꺼이 동의를 했으며 노동자들도 회사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했음.
- 인플레이션 문제는 매년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음. 매년 인플레이션과 비례해서 임금을 인상하고 있음.
- 현재 회사와 노조는 감원 등 주요사안에 대해서 노조와 협의하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음.

<질문>

북한에 대한 조언은

<답변>

- 북한도 가능성 있는 시장임. 그들이 스코다를 찾아와서 배우겠다면 적극 도와주겠음. 북한에 조언하고 싶은 게 있다면 준비 없이 국유재산을 팔기보다는 법적인 제도적인 준비 후 차근차근 하는 게 좋다고 봄. 폭스바겐이 왜 스코다를 사려고 했는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는 게 중요함.

<질문>

연간 판매량 추이를 보니 자동차 판매감소는 전반적인 침체인가

<답변>

- 유럽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시장 수요가 10% 감소하고 있기 때문임.

3. 노동사회연구소

가. 기관개요

- 기관명 : 노동사회연구소
(Research Institute for Labour and Social Affairs)
- 기능 : 1919년에 설립된 노동사회부 산하 연구기관, 지역·국가·국제 수준의 노동사회문제 연구
- 소재지 : 프라하(체크)
- 면담자 : MGR ALES KROUPA(부소장) 등 2명
- 방문일 : 2004. 6.23(수) 15:00~16:40



(면담 모습)

나. 면담내용

<체제전환기의 일반사항에 대해 개괄적 설명>

- 노동사회연구소는 노동사회부 산하로 국가기관 등에 분석서비스를 해주며, 노동사회부 지침에 따라 1919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는 연구기관임. 주요활동 프로젝트는 임금, 노조, 노동, 사회복지, 사회보장 등에 대한 것들임.

- 1989년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체크의 주요변화를 들면 민주사회라는 제도적 변화와 가격의 자유화, 노동시장의 자유화, 임금의 자율조절 등을 들 수 있음.
 - 가격의 자유화는 의료, 교통정책 등에서 완전히 자유화되지 않았음.
- 사유화는 소사유화와 대사유화로 구분되어 있는데 대사유화는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판매를 통해 사유화를 한 것을 말하며, 소사유화는 쿠폰형 사유화임. 쿠폰의 소유자가 기업의 주주가 되면서 사유화가 이루어짐.
 - 대사유화의 매개는 펀드와 은행의 역할이 중요했으며, 외국 투자가가 증가해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 투자도 이루어짐.
 -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실업률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사유화가 후반기에 접어들어 기업 구조조정에 의한 인력퇴출이 있어 EU국가중 체크는 실업률이 높은 수준임.(중부유럽 국가 대부분에 해당됨.) 1990년대 초기에는 2~3% 수준이었으나 90년대 후반 급속한 변화에 의해 10%가 넘는 실업률이 발생하였음.
 - 그 이유는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 인력이 필요 없게 되었고, 신규 투자는 기계화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EU국가 중 체크는 수출 중심 국가였는데 사회주의 체제의 동맹국들과의 수출이 감소해 실업률이 증가하게 됨.
 - 90년대 초에 외자유치 등에 따른 사유화를 하면서 사회보장장치를 마련해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더 많은 외자유치와 조기에 사유화를 완료하기 위해 정부가 수동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능동적인 행동들은 없었음.
 -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직업 재교육 등은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음. 즉 이제는 국가가 개인적 문제까지 챙겨주는 능동적인 정책으로 변화함.
 - 노동시장 중 노령자, 장애자, 사회복지 중 현실적으로 노동에 참여가 어려운 시민은 정부가 지원함. 동시에 체제전환기에 중요한 것은 국민 연금 개혁을 들 수 있음. 과거는 낡았기 때문에 현대적 방식으로 고쳐야 함.
- 1989년 이후 중요변화를 이야기한다면 체제전환과 동시에 사회적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긴장감 없이 이루어지게 됨. 경제개혁을 하면서 대화 부분을 두어 노동자-정부-기업이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를 마련함.
 - 특히 3자 참여자들이 적절한 의견개시가 가능하도록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중재기관을 만들. 당시 체크와 슬로바키아 연합국이었기 때문에 세 참여자가 연합하여 체크와 슬로바키아까지 참여함.

- 연합민족 대화를 통해 일반협약이 만들어져 신사협정을 이루었는데 이를 정치형태 행위라고 말함. 참여자 모두가 임금과 고용 등의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였음. 서유럽의 모델을 이용해서 현대적 기관으로 만들어졌으며, 참여자들의 의장은 정부가 함.
- o 기업가들의 연합은 산업연합과 교통연합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독립적 기관으로 운영되어짐. 전체기관 속에 자동차 등 소기관이 참여하는 형태로, 전자연합, 기계연합 등을 들 수 있으며, 전체기관들은 자유의지에 따라 유지됨.
- o 노조는 체크모라비아노조연합이 있는데 30개정도의 노조단체로 형성된 전문 노조연합그룹임. 상호 노조단체들간에 관계를 형성하면서 양분되어 있음. 작은 것은 자유노조연합이며, 다음은 예술·문화연합 노조임.
- 노조운동은 기업 노동자가 약 30%정도이고 노조에 소속된 사람은 약 100만명 정도임.

<질문>

체제전환기에 체크가 추진한 단계적 사유화에 대해 설명해 주기 바람.

<답변>

- o 사유화는 소사유화를 먼저 실시(상점, 주택, 토지 등)하고 모든 것에 제한을 두었는데 목적물이 있었을 때 소/대를 결정해야 함.
- 소사유화는 1990~1991동안 대상물을 사유화하였음. 하지만 처음에는 개인 소유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함.
- 대사유화는 속도가 느림. 3단계로 구분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음. 대사유화 대상은 1990년대 초에 대부분 해결되었음. 대사유화는 정치적 결정에 큰 영향을 받으며, 책정가격은 쿠폰형으로 판매되고, 주민들은 주식시장과 같은 공개시장을 통해 구입함.
- 현재까지 잘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토론이 계속되고 있음. 대기업의 일 정부분은 아직까지 정부가 갖고 있음. 정부가 갖고 있는 부분은 전기, 원료, 통신, 의류 등을 들 수 있음.(공공재 성격)
- o 사유화는 재등록과정인데 법률적으로 국가소유에서 개인소유로의 변환을 의미함. 중요한 기업들은 1991~1993년까지 대부분 사유화됨.
- o 대사유화에는 세 분야가 있는데 쿠폰형 사유화를 하면서 공개경쟁 판매를 하는 과정이 세 물결로 이루어진다는 뜻임.(행정처리 절차 등)

<질문>

먼저 설명한 자료 중에 가격자유화의 단계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들에서 단계적 가격자유화가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기 바람.

<답변>

- 우유값을 예로 든다면 1990년대 중반까지는 가격결정이 정부의 지침대로 행정적으로 결정되었음. 사회주의 체제당시 식료품과 생활물품 등 경공업 분야의 물건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유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정부가 가격을 통제 한 것임. 이처럼 공급량이 충분해 졌을 때 시장기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임. 물건종류나 수요와 공급 규모에 따라 차차 가격자유화가 실시됨.
- 주거비, 의료비, 교통료는 아직까지 국가가 가격을 결정하고 있음. 가격자유화는 식료품과 소비재 두 단계로 자유화가 이루어짐.

<질문>

체제전환 전략은 속도, 범위, 정책순서에 따라 급진적 개혁과 점진적 개혁으로 구분할 수 있음. 체크는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급진적 개혁을 선택한 이유와 급진적 개혁에 따른 문제점 및 극복방안을 말씀해 주기 바람.

<답변>

- 체제전환기에 가격변동이 심했음. 정부가 조정하면서 시장에 대응했다는 점임. 문제점을 들면 사유화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체크형을 쓰면서 경제단위가 너무 작은 것에 있었음. 바우처에 의해 엄청난 주주가 생겨나면서 개인들이 주주권을 일일이 행사하려 해서 문제였음. 물론 현재 까지도 마찬가지임.
- 1990년대 초반 5년 동안 주요역할을 수행자는 은행이었음. 물론 은행들은 예외 없이 정부의 소유였음. 사유화 모두가 정치적 결정에 의해 될 수 있었음. 개인이나 단체가 기업을 인수하려 할 때 기업형을 시도했지만 은행자체가 판단하고 정부가 개입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해 특별기관이 만들어지게 되었음.
- 어떤 경우는 사유화가 됐지만 개인들이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었음. 경쟁에 의한 사유화가 아니었기 때문임. 은행 자체가 경영이나 이자 지불 여부 등을 판단할 능력이 없었음. 정부의 매각 프로젝트 결정에 대해 판단력이 떨어짐. 은행형 자본주의화가 됨. 다시 구 기업가를 끌어들이어 경영을 맡기는 악순환이 반복됨.

- 따라서 국가소유에서 이성적 새 소유자를 찾는 것이 큰 문제였음. 이런 과정을 통해 경영능력을 배움. 모든 과정이 뇌물 등 범죄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컸으며, 이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했음.
 - 주주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올바른 권리행사를 못하였음. 대리기관을 통해 행사하다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함.
- 1990년대 초 쿠폰형 사유화는 실패하였다고 말할 수 있음. 그래서 외국 자본가에 의한 사유화가 생겨났음.
- 1990년대 초를 보면 정치·경제적 개혁에 시민 모두가 동의를 하였음. 1989년 말에 일어난 체크의 벨벳혁명이 그 증거임. 시민, 노동자, 농민 등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선두에 나섰다. 그렇지만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일부에서 변화가 생겼음.
- 사회 실업률 증가로 정부의 노동정책 결정에 논란이 많았고, 정치에 있어서도 사회민주주의가 등장하였음.
- 시민들은 EU가입에 대하여 일치된 의견을 보였으며, 전체적인 방향감각은 개혁적이었음. 교육과 임금과의 관계도 재조정됨. 교육, 의료기관 등 중간계층은 외국기업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은 편으로 빈부격차가 나타났음.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적 결정을 못하고 있음.

<질문>

체크의 체제전환시 체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안정적인 체제전환의 핵심요소로 알려져 있음. 체제전환시 문학작가인 하벨이 이끄는 「시민포럼」 등 시민단체의 역할과 이후 새로운 체제에 정착되기까지의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해 주기 바람.

<답변>

- 벨벳혁명과 국민총선을 거치면서 1990년초 이후부터 시민단체 활동이 다양해 졌음. 복지부문, 정치화 등으로 변화하여 입법과 관련해 새로 설립된 단체의 역할이 컸음.
- 외국인단체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단체가 많았음. 시민단체들은 사회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성장해 나갔음.
 - 또한 정부와 법적인 배경을 만들어서 다양한 분위기를 만들어 감. 시민단체가 사회복지의 역할을 수행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음.
 - 1990년 이후 시민단체의 활동의미는 자유경제체제하에서 정치 분야의 영향력 축소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

- 대통령은 완벽히 질적으로 갖추어진 사회를 주장하나 결정된 것은 아니며, 시민단체는 사회구조를 풍부하게 하여 시민의 활동영역을 넓힌 것임. 예를 들어 국민투표를 실현시켜 사람들의 정치적 참여가 간접 참여에서 직접참여가 가능토록 했다는 점임.
- 시민단체의 활동 중에서 부정적인 문제점은 없었으며, 오히려 소수 이익집단이 문제였음.
- 사회민주당이 집권하여 활동할 때 시민단체와 대화해서 법률개정 등을 해결하는 것들임. 다양한 부분에서 시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임.

<질문>

체제전환 이후 민영화가 가속화되면서 대량해고에 따른 실업발생과 복지혜택의 감소로 이어져 노사갈등이 발생했을 것이며, 이런 문제들이 경제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노사갈등 및 사회적 불안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있었는지 설명해 주기 바람.

<답변>

- o EU의 모델을 따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하여 노사정 협약서 노동자가 해고당하는 것에 대해 구제역할을 하지 않았음.
- o 은행자본주의가 기업가를 결정할 때까지는 고용률이 100%였음. 체크노조는 정부의 반대론자가 아니라 협력단체였음.(사회주의체제 속에서 노동조합은 정부의 대변자 역할이며, 약 40년간 지나면서 고정화 됨.)
- 체제전환 이후 결성된 1세대 노조는 우익대표들이었기에 파업 등은 거의 없었음.

<질문>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국가지시나 지침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동적 체제였으나 기업 스스로 생산목표를 결정하고 이익을 창출해 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변해 가면서 노동생산성 증가에 따른 임금수준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답변>

- o 1994~1995년까지 임금결정은 정부가 결정하는 중앙통제였음. 첫 2회 정도 실질임금이 30% 떨어졌고, 연금수준도 하락하였음. 1994~1995년 이후부터 임금인상이 급격히 있었지만 분야별, 직위별로 차이가 생김. 이러한 발전이 불안정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서유럽과 질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음.

- 사회주의체제 시절에 체크는 가난한 국가가 아니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전통적으로는 공업이 발달하였고, 교육을 잘 받은 질적으로 우수한 노동력이 있었으며, 문화적으로도 수준급이었던 지역임. 중부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발달한 국가였음.
- 국민들의 경제적 참여도는 능동적이었고 체제전환 이후에도 쉽게 적응이 가능했음. 사회주의 체제 때 비생산적 경향에 대해 경멸하는 사회풍토가 있었음.
- 체크 시민들은 사회주의에서 사기업 경영을 경험할 수는 없었지만 개인적으로 집도 지으면서 경제문제에 대한 경험을 쌓아왔음.

<질문>

북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개방정책과 경제개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 우리보다는 독일의 경우와 비슷함. 북한은 전통적인 문화적, 경제적 체구조가 존재할 것임. 북한 참여자들이 남한 사람들과 교류 중에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북한 사람들이 남북협력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해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함.
- 경제적 발전은 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나 정부 관계자 모두에게 발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 분명한 것은 특구지역에 거주하는 노동자나 주민들은 정부의 틀 속에 있다는 점임.

<질문>

근로자들의 노동3권 보장정도와 체크 공무원 노조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바람.

<답변>

- 국가공무원 단체협약은 가능하지만 사법부와 관련된 것은 안됨. 노조의 권리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 직급과 직위에 관계없이 전직원이 노조에 참여할 수 있음.
- 노동법이 있지만 노사간 단체협약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함. 최근 입법에 노사간 단체협약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음.

4. 경제교통부

가. 기관개요

- 기관명 : 헝가리 경제교통부
(Ministry of Economy and Transport in Hungary)
- 기능 : 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 경제개혁 및 환경보호분야, 소비자보호 및 무역분야 등 업무 관장
- 소재지 : 부다페스트(헝가리)
- 면담자 : Mihaly I. Sipos(Depart of Industry director)
Rovid Levente(전문가)
- 방문일 : 2004. 6.28(월), 10:00~11:40



(면담 모습)

나. 면담내용

<Rovid Levente 프리젠테이션 요약 >

- 헝가리는 국가경쟁력과 외국인 직접투자의 상승에 노력하고 있으며, 유럽의 중심으로서 매력적인 투자지역임을 강조(* 첨부자료 참고)

- 특히 지정학적 위치상 남동유럽의 관문으로 외국인 투자에 이상적이며, 세계 100대기업 중 53개 기업이 지사를 갖고 있음.
 - 정치·경제가 매우 안정적이며 파업이나 산업위험, 재정위험이 없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음.
- 헝가리의 경제정책 프로그램인 ECOP(Economic Competitiveness Operative Program)을 설명
- 1순위 투자증진, 2순위 중소기업(SMEs)의 발전, 3순위 연구개발비(R&D)와 혁신, 4순위 정보사회와 경제발전
 - 우리는 EU제도에 부합하는 투명성, 효율성, 예측가능성을 갖고 있음.
- 세금과 관련된 간접적인 인센티브 제도 설명
- 법인세 16%~18% 감면, 유럽에서 가장 최저
 - 주요 투자기업에게 10년 동안 법인세 혜택을 80%까지 지원
 - 유럽에서 좀더 유리한 부가가치세 제도중의 하나
 - 법인세를 지방세의 25%까지 지원
 - 기업의 R&D와 혁신을 위한 보조금 지급
 - 근로자 연수를 위한 세금관련 인센티브 제공 등
- 2006년까지 431km의 고속도로 건설을 완료할 예정임. 425km를 현재 건설 중이며, 2015년까지 Network를 유럽수준으로 건설할 것임.
- GDP 성장률은 2000년도 6.8%로 최고점에 있다가 2003년 3.5%까지 하락 하였으나, 2004년도 상반기 중 조금씩 상승세로 반전하고 있음.
(EU와 비교해 성장률은 좀더 높지만 겹은 상당부분 존재)
- 개인별 가처분소득은 1996년 이래 계속 조금씩 성장하여 2003년 기준으로 실제 17,000유로 정도임.
 - 외국인자본의 역할은 성공적인 경제 체제전환에 결정적이었음.
 - 외국인 직접투자가 꾸준히 높으며, 2003년도 3,439백만 유로임.

<Mihaly I. Sipos 프리젠테이션 요약 >

- 1989~2003년간 헝가리가 진행 중인 산업의 체제전환에 대한 설명하면 1990년대 초기의 상황은 눈물겨운 밑바닥 경제였음.
- 심각한 위기, 급진적인 생산 감소(산업생산액 45% 감소, 가공생산물의 60% 감소)

- 산업수출 30% 감소, 소득과 부의 심각한 감소, 심각한 산업생산성 감소
- 좌절의 주요 이유는 코메콘의 탈퇴, 시장 실패, 서구시장에 적응할 수 없는 기업, 주요기업의 불안, 대다수 기업이 부도, 본질적인 생산구조의 왜곡
- 가공산업의 생산과 판매의 지표는 1992년도 최저수준인 -60%의 감소였으며, 차츰 증가 추세로 전환

○ 1990년대 중기 이후의 상황은 급속도의 발전을 이룬 시기로 주요 경제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지주회사의 산업구조 조정(규모, 생산구조), 기계류 산업을 높은 FDI flow에 맞춤. 자동차 생산을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 전자산업의 제도약, 기계류 산업을 경제의 원동력으로 여김. 강한 수출지향적 정책 등

○ 동 기간 중 부문별 FDI(외국인 직접투자)는 산업(제조) 46%, 교통통신 12%, 금융 12%, 부동산 11%, 기타 19%임.

○ 동 기간 중 국가별 FDI는 독일 34%, 네덜란드 15%, 오스트리아 11%, 미국 9%, 프랑스 6%, 기타 25%임.

○ 산업에 있어 구조변화 비교

| 연도 | 기계류 | 금속류 | 비금속류 | 화학제품 | 목재류 | 섬유류 | 기타 |
|------|------|------|------|------|-----|------|-----|
| 1990 | 25.6 | 16.9 | 5 | 33.5 | 6.4 | 10.2 | 2.4 |
| 2001 | 55.7 | 9.6 | 3.4 | 18.4 | 6.6 | 4.5 | 1.6 |

○ 2003년도에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비율은 43:57임. 기계류는 자동차 33%, 기계류 11%, 전자공업 56%임.

<질문>

북한과 다른 상황이지만, 헝가리는 체제전환 전에도 민영화율이 높았다고 알고 있음. 민영화의 영역이 넓어지는 과정과 남북관계에 있어 북한의 개방과 관련된 시사점, 체제전환 초기단계에 있어 과정과 문제점 등을 설명(민영화의 큰 줄기) 바람.

<답변>

○ 15년 전 체제전환의 사정이 북한과 다름. 92년 총생산 30% 하락, 실업률 25%인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음.

- 1995년부터 외국자본 유입이 시작되었는데 우선 생산조립부문 등 부가가치가 아주 낮은 분야(1인당 생산성)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순조롭게 진행되었음.
- 95~96년 연구개발비(R&D)가 낮은 분야에 외국회사들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갖고 와서 생산, 생산성이 높고 부가가치가 높아져야 소득증가가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헝가리 국민들의 소득증가 압력이 커졌음.
- 외국회사들이 생산성이 낮은 것은 R&D의 투자율이 낮은 결과이며, (EU 국가에 비해 40%정도) 연구개발비가 GNP의 예산규모상 1%임.
- 생산성이 높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외자유치 정책을 펴고 있음. 헝가리는 EU에 비해 1인당 GNP가 56% 수준이며, GDP 증가율은 2배정도이고, 이정도 수준으로 계속된다면, EU에 도달하는 데 30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체제전환 이전부터(89년) 민영화 영역이 차지하는 역할은 사경제로 Small Farm 소유와 68년 신경제체제(New Economic System) 도입, 자유경제체제인 Western Economy가 개인기업을 충족(1980년), 1992년~1994년 Fresh Economy 체제로 성숙되었음. 북한과는 사정이 다르지만 북한도 외자유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질문>

체제전환 후 투자유치 전략 설명 바람.

<답변>

- o 경제체제 변경시 특별프로그램은 없었음.(학교 등) 대학이외 경제단체들이 자본주의 경제교육 기능 수행했고, 회사 관리자들이 경제대학에 다니며 민영화 과정을 배움. 문제는 돈이 없었음. 그래서 94년부터 외자유치를 하게 되었는데, 주로 재정적자를 메우는 데 주로 사용되었음.

<질문>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사유화 과정으로 변경하게 될 때 특별히 충고해 주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기바람.

<답변>

- o 헝가리는 1953~54년 군사부문 투자를 중시(56년 혁명이전)하였으나, 체제전환 후 군비 생산공장을 민간 소비재용 생산공장으로 변경하였음.
- 미국과 경쟁해서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사회주의권 붕괴됨.
- 북한은 군비축소, 시장경제 경제방식 도입, 개인경제 몫이 커지도록 (민간경제 부문) 노력해야 할 것임.

<질문>

- 북한은 유사한 사경제 일부를 도입중임. 체제전환과정에서 있었던 사회 문제(정신적 공황상태 등)의 극복방법을 말씀해 주시기바람.

<답변>

- 60년 동안 사회주의 체제에 익숙한 상태에서 갑자기 시장경제체제로 변환하면 사회복지가 축소되고 이에 따라 개인이 불행하게 느낌.
 - 12년 동안 교육(공산주의 우월) 받았던 것보다 더 좋은 체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됨.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함.(개인적으로 배움에 적극적이고, 적응을 잘하기 때문임)

<질문>

실업률 상승, 연금하락에도 불구하고 체제전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에 대한 설명

<답변>

- 연금생활자 일부소득 가치 감소, 아주 많은 공장이 문을 닫음. 일자리가 없어지는 등 불안
 - 연금소득자 소득감소, 실업자문제 등을 해소하려는 구체적인 정부 역할은 없었음. 외국자본이 많이 들어옴으로써(노동집약적 산업) 어느 정도 실업 해소
 - 지금 현 정부는 물론이고 10년 동안 연금수급자의 가치가 유지토록 함. 1994~95년에 인플레이션 35%인 가운데 실질가치가 유지되도록 노력했으며, 사실상 연금정책이 실질연금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임.
- 국민들이 사회주의 체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정부정책에 동의하며 잘 따라왔음.
 -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10위정도이고, 1992~94년 데모 스트라이크 발생으로 경제가 악화되기도 하였으나, 공산당과 야당이 합의(사회적 합의)하여 불만표출이 별로 없었음.(1~2번 정도의 가벼운 시위)
 -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체제전환 후에도 교육제도는 그대로임. 16세까지 의무교육제도이며, 대학은 졸업할 때까지 재정지원으로 무료이며 수업료는 자부담 내지 기업보조로 이루어짐. 의무교육을 18세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음.

5. 무역투자진흥청

가. 기관개요

- 기관명 : 헝가리 무역투자진흥청
(The Hungarian Investment And Trade Development)
- 기능 : 투자 촉진과 무역 진흥을 위한 투자전략 상담,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이용한 포괄적 사업관련 서비스 제공
- 소재지 : 부다페스트(헝가리)
- 면담자 : Spanyol Peter 청장
- 방문일 : 2004. 6.28(월) 15:00~16:40



(면담 모습)

나. 면담내용

<프리젠테이션 요약>

-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헝가리는 이미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경험하였으며, 전후 소련 점령에 따른 사회주의 체제를 거쳐 1989년 이후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전환하였음.

- 1956년 헝가리의거 당시 소련이 군을 동원해 진압하였지만 헝가리 민족의 자본주의적 사고를 억누를 수는 없었음. 1968년에 사회주의 계획 경제하에서 신경제메카니즘 도입에 의한 1차적 경제개혁이 이루어졌으며 이때 처음으로 경제에 이익개념이 도입됨.
- 이러한 것들이 피를 흘리지 않고도 자유세계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된 배경이 되었으며, 헝가리 노동당이 기존 사고를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됨.
- 1980년대 상황은 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재정지원으로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하였고, 소련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에 따른 소련군의 일방적 철수, 공산당 일당독재 시의 불법적 야당세력 존재 등임.
- o 1989년 이후가 되면서 공산당의 일당독재가 철폐되고 다당제와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도입되었고 이때에 국유화한 재산의 처리가 큰 문제로 대두됨.
 - 국유재산의 처리방법은 외국자본 등에 의한 직접매각방식과 내·외국인을 상대로 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이 있었음.
- o 헝가리는 1990~1997년까지 민영화 시기가 지속되었으며, 1998년부터 GNP의 80%를 민간부문이 차지하게 됨. 다른 중유럽 체제전환국들은 바우처에 의한 매각방식을 채택했다가 실패를 인정하고 헝가리의 방식을 모방하였음.
 - 바우처에 의한 방식은 주식의 지나친 분산으로 책임경영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움.
 - 헝가리는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공장가동의 계속과 고용승계 여부를 기준으로 직접 매각하는 방식을 택하였으며, 그 결과 재정 수입이 늘고 노후화된 공장시설의 현대화와 새로운 기술 채택으로 수출능력이 제고되었음.
 - 1990년대 초 수출은 100억 달러가 채 되지 않았지만 2003년에는 400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 o 사회주의는 완전고용상태였으나 비경제적 고용상태였으며, 민영화 과정에서 실업률이 증가하였음.

- 외국기업주는 비효율 부문을 줄이는 과정에서 고용 인력을 해고하여 실업률이 EU보다 높았음.
 - 민영화와 함께 친환경분야나 전자업종 등에 새로운 투자도 동시에 이루어 졌음. 신규투자는 값싼 노동력, 고등교육을 받은 우수 인력의 존재 등 투자를 위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임.
 - 제너럴일렉트릭사의 경우 전구와 연구소가 동시에 가동되고 있으며,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삼성은 3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이는 공해를 유발하지 않고 신규고용을 창출했음.
- 헝가리 실업률은 6%이며 현재까지 310억 달러의 외자가 도입되었음. 3,200개 외국자본 기업이 운영중이며 2004년 5월 1일부터 EU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여 국민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안정효과를 주고 있음.

<질문>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전의 헝가리에 대한 외국인 투자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람.

<답변>

- 외국자본의 헝가리 투자는 1970년대 중반부터 가능하였으나 엄격히 말하면 정치적 의도의 협정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탈리아의 경우 사회주의 정당이 집권하고 있어서 아귀바나 애니 같은 화학업체가 헝가리에 진출하였음
- 양국간 협정형태가 아닌 외국 협력방식에 의해 외국인이 법적으로 헝가리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은 1980년대이며, 1987년부터는 법적으로 외국회사도 설립이 가능해짐.(셀, 웨라톤 호텔과 같은 외국기업도 헝가리에 있었음.)
- BMW, 피아트가 경화로 받고 자동차를 판매했는데 주로 외교관 등 특권층만 이용했으며 1956년 헝가리의거 때 국외로 탈출한 사람들이 모국에 송금을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구입했음.
- 소비재시장에서는 구매욕구가 강해져 암시장이 발달하게 됨. 일반주민들은 일반상점을 통해 외화를 구입할 수 없었으나 암시장을 통해 외화 거래가 가능해짐. 이것이 상거래 허용의 계기가 되어 소비자가 물건에 접근하게 되었고, 정부는 더 이상 금지하지 못하고 허용하게 되었음.

○ 개혁이 가능하게 된 배경이 된 것은

- 첫째는 1970년대에 1년에 3번까지 외국여행이 가능해져 오스트리아 등 주변 나라의 자본주의 운영방식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다는 점이며
- 둘째는 이 때 헝가리에서 살 수 없었던 물건들을 사가지고 들어오게 되어 많은 주민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러한 요인들이 사회주의 체제를 느슨하게 만들었다는 것임.
- 셋째는 엄격한 검열이 있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라디오나 TV를 통해 이미 서유럽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는 점임.

○ 언어학습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러시아어는 의무였으나 체제전환기에는 젊은층의 영어 배우기 열풍이 일었고 유럽방송을 통해 자국방송에는 없는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됨.

- 이러한 일련의 내부 변화가 러시아의 개혁개방과 맞물려 체제전환이 이루어지게 됨.

○ 과거에는 국가가 허용한 기업만 들어올 수 있었으나 1989년부터는 어떠한 외국기업도 들어올 수 있게 됨.

<질문>

국유화된 토지의 사유화 과정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해 주기 바람.

<답변>

-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개인소유의 토지가 존재하였으나, 전후 강제적으로 협동농장이 설립되어 1962년까지 모든 토지가 국유화됨.
 - 1963년도에는 경작지 중에 민간소유는 하나도 없게 되고,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의 토지만 있었으며 이는 1980년대 말까지 유지되었음.
- 체제전환 이후에 원소유자에게 토지를 돌려준 것이 아니라 보상채권을 발행하였는데 이는 사유지 인정과정의 시작이었음.
 - 1993~1994년부터 영세한 규모(2~3ha)로 경작지 소유가 가능하게 되면서 부터 협동농장이 완전 폐지되고 국가소유의 토지도 점차 없어짐.

- 그러나 지금은 EU국가와 경쟁하기 위해선 기계화와 넓은 경작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유화한 땅을 나눠줄 때 영세한 규모로 나누어 준 것을 후회하고 있음.
- 헝가리의 평균소유 경작지 면적은 7~8ha인데 EU국가와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선 300ha의 면적이 필요함.
- 영세한 규모의 경작지로는 기계화하기에 규모가 너무 작고, 효과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됨.
- o 헝가리에서도 1인이 경작할 수 있는 경작지 면적이 넓어져 4,000~5,000ha를 소유한 사람도 있으며, 계속적으로 소유면적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물론 여기에는 자본이 필요하며, 법적으로 외국인은 경작지를 소유할 수 없으나 실재는 소유하고 있음.
- o 돌이켜 보건대 가장 좋은 방법은 협동조합 형태로 개편해 조합원들이 계속 소유하고 있으면서 토지를 경작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임.
 - 기계화 측면에서 볼 때 협동농장을 좋게 평가함. 그 시절에는 농기계도 많았고 기계사용이 용이하였으며, 비료 등 원재료를 공동구입·사용함으로써 생산비를 줄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량판매가 좋았다고 생각함.

<질문>

체제전환 이후 성공적인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과 이에 대한 극복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기 바람.

<답변>

- o 체제전환 과정 중에 일어난 부정부패와 국내자본의 외국자본 유출에 대하여 국민들의 불만이 있었음.
 - 국영기업은 기술이 노후되어 있었고 새로운 기술로 대체하는 데는 많은 자본이 필요하였으나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여 부자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소유 기업을 외국인에게 팔 수 밖에 없었는데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었음.
- o 외자유치 과정에서는 상호이익이 충돌하게 되어 경쟁입찰 과정에서 떨어진 기업이 뇌물문제를 제기하는 등 부패문제가 뒤따랐음.

- 민영화 과정에서 부패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나 부패한 방법으로 기업을 인수했다라도 결국 세금을 내게 되므로 경제부문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음.
 - 민영화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인 국가민영화관청이 있었으나 어떤 회사를 매각할지는 정부에서 결정하였으며, 헝가리 관료나 외부인이 간섭할 여지가 없었음.
 - 회사 매각시 중요하게 여긴 것은 단순히 수입이 얼마나 될까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고용자를 계속 고용할 것인지를 중요요소로 고려, 아주싼 값에도 매각함.
 - 해고시 대량 실업수당지급 문제가 발생할 것을 고려해 고용승계시 가격을 할인해 주거나 정부지원금을 책정하는 방법을 사용함.
-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체제전환이후 3년 이내로 국가소유 대부분의 기업매각이 가능했음.

<질문>

공산주의가 엄격할 당시 시장형태는 어떠했으며, 자유시장 기능이 작동하게 된 과정을 설명해 주기 바람.

<답변>

- 1990년대 초에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제가 시작되었으며, 그 전까지는 바르샤바조약기구와 COMECON 회원국으로서 매년 1번씩 회원국간 회의를 통해 각국의 생산품목을 결정해 물물교환방식으로 운영됨.
- 예를들면 폴란드는 자동차를 생산하여 헝가리에 주고, 헝가리는 버스를 생산해 폴란드를 주는 방식임.
 - 국가간 채무 같은 것은 루블로 지불하였으며 실제 돈이 움직인 것은 없었음. 자동차 등을 수출하면 실물건이 건네지기까지 5~6년이 소요되었고 물건교환을 요구하면 2년이 더 소요되었으나 은행이자가 없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같은 것은 없었음.
- 좋은 품질의 상품이 부족하였지 중간정도나 낮은 정도 품질의 상품은 시장에 많이 있었음.

- 헝가리가 인근 국가와 달랐던 점은 이미 1960년대 초반부터 식료품은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어 “브이아시 스프경제”라는 말이 붙여지기도 함.
- 협동농장을 제외하고 개인은 일부 경작지 소유가 가능했고 경작지 작물은 개인선택이 가능해 시장판매제도가 시행됨.(텃밭개념)
- 헝가리 살라미는 너무 유명해 헝가리 주민들은 먹을 수가 없었고 특정 가게에서만 판매하였으며, 외국인들은 구입할 수 있었음
- 1970년대부터 외국차가 들어와 있었으나 컴퓨터, 로봇, 전자제품 등 첨단제품은 접할 수가 없었음.

<질문>

개성공단 개발에 성공하기 위해 북한 정부에 조언해 준다면 무엇이 있는지와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남쪽 기업이 성공하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기 바람.

<답변>

- o 처음부터 북한에 없는 최신기술 도입이 필요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함.
- 중국에서 자본이 도입되는 과정을 돌아보면 노동자가 고용되어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임.
- GE의 경우 운영되고 있는 회사를 구입한 후 노동자들과 접촉하면서 사업을 확장하였던 것임. 처음에는 자동차용 전구를 생산하다가 현재는 X-Ray 장비를 생산하는 등 타 기계부문까지 생산하게 됨.
- 단순 조립부터 출발하여 기술개발이 가능할 때 상호 연관성 있는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함.(부가가치 창출분야로 확대) 즉, 노동자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한 분야부터 시작하여야 함.

<질문>

북한에는 승리자동차 등 작동은 잘 되지 않지만 규모가 큰 공장들이 있음. 북한이 만약에 전면적으로 개방을 하게 되어 매각을 한다면 외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투자를 하려고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 바라며, 기회가 된다면 북한관료에게도 헝가리의 투자유치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면 감사하겠음.

<답변>

- 외국자본이 도입되기 위해선 체제안정이 가장 중요함. 이는 정치·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매각대상이 되는 공장이 내부적으로도 안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항구적 긴장상태에 있는 북한에 외국기업의 투자는 곤란하다고 생각함.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간 긴장관계가 해소되며 정책결정 방향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되면 북한에서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함.
 - 북한의 항구적인 안정상태가 명백하게 된다면 연간 5,000~6,000만 달러의 외자가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 북한에 “승리자동차”와 같은 자동차공장도 매각이 가능할 것임.
- 외국기업이 자동차 제조공장을 구입하는 것은 공장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임. 대우가 폴란드의 자동차 회사를 구입한 것도 자동차 공장이 욕심이 나서가 아니라 동유럽 시장이 탐이 나서임.

<질문>

IMF/IBRD 등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헝가리의 외자유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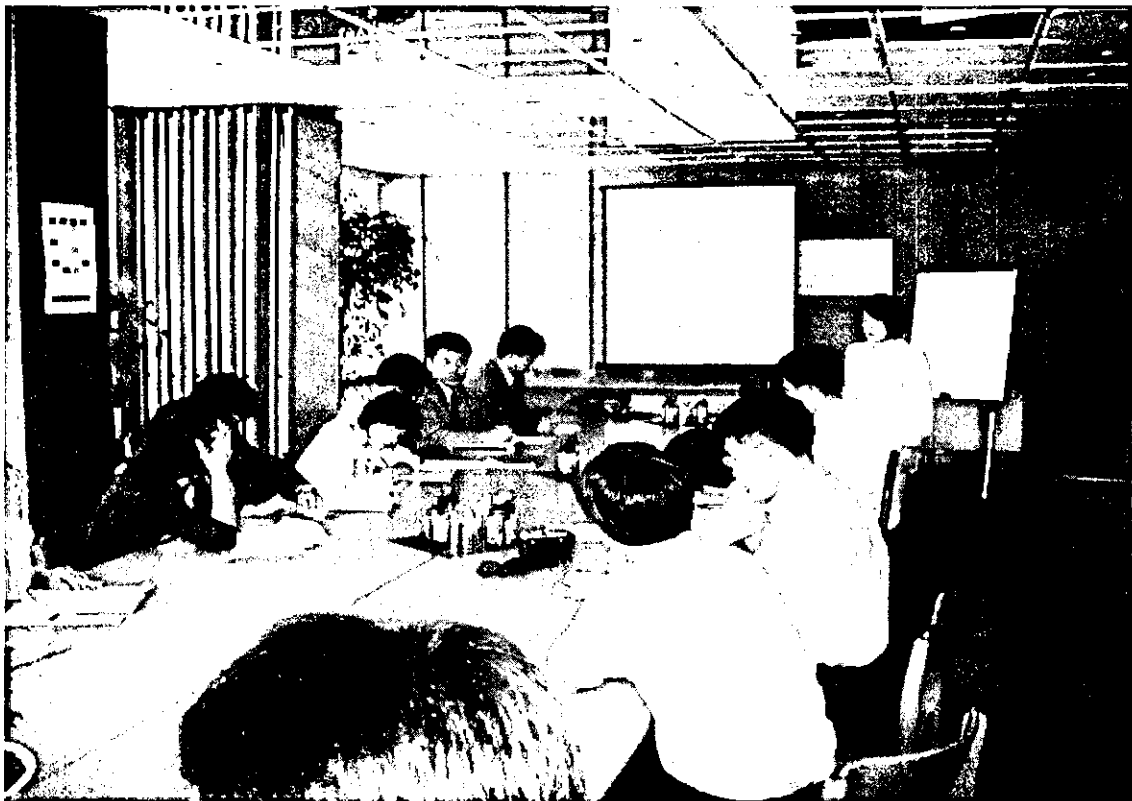
<답변>

- 현재까지도 국제기구로부터 차관을 제공받고 있음. IBRD로부터는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같이 즉각적 상황이 곤란한 분야에, IMF는 국가재정 필요시 공여 받고 있음.
 - 문제는 헝가리의 소비지수가 높기 때문에 능력에 비하여 너무 많이 소비(대출 등)한다는 점임.
 - 정부가 정책을 시행할 때 국제금융기구가 조언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헝가리 정치인들도 IMF보고서를 신뢰함.

6. 민영화청

가. 기관개요

- 기관명 : 헝가리 민영화청(Hungarian Privatization and State Holding Company)
- 기 능 : 국유재산 민영화 업무 담당
- 소재지 : 부다페스트(헝가리)
- 면담자 : Erzsebet Lukacs (국제국장)
- 방문일 : 2004. 6. 29(화) 09:30~11:30



(면담 모습)

나. 면담내용

<민영화(사유화) 과정 설명>

- 먼저 헝가리에서의 민영화가 어떠한 정치경제적 상황아래에서 일어났는지가 중요함. 1960년대말에 초기 개혁의 단계가 있었으며, 이미 1972년 합작회사(Joint venture)에 관련규정을 포함한 법안이 제정되었음.
 - 1984년에는 국가기관의 감독하에 있었지만 재량이 많았으며 의사결정권은 회의체에 주어졌음.

- 이 법에 따라 민간은행과 중앙은행 시스템 도입, 가격, 임금 자유화, 개인소득세, 경제독점방지 도입 등이 가능하였음.
- 1988년에는 회사법이 도입되었는데 이법은 원래 1875년에 이미 있었던 법을 조금 개정해서 도입한 것임.
- 이 법으로 유한회사, 주식회사 개념이 도입되고 외국자본과 합작회사 설립 가능, 민영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회사를 매각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임.
- 법 시행이후 헝가리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함.
- 첫째, 매각회사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척도가 없었으며 경영층이 단기적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냄. 둘째는 중요 기간산업 부분의 매각문제, 마지막으로 반쯤의 기업개혁으로는 기업이 완전한 자본주의 기업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의 문제였음.
 - 예를들면 유명제과점 제르본이 국내 합작조건으로 1억포린트에 외국인에 매각됐는데, 실제가치는 60억포린트였음. 투자 외국인은 자산가치를 알고 사서 2년후 60억포린트에 팔았음.
 - 또다른 문제는 기존회사에 있던 경영자측에서 직장을 잃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단기적 이익실현만을 중시했음.
- 이런 방식으로는 회사일부는 개편할 수 있었지만 전체를 개편할 수는 없었기에 1980년대 말에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음.
- 절반정도의 시장경제를 도입해서는 안되고 완전한 시장경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정치적 변동이 불가피해졌음. 즉 정치변화가 먼저 일어난 것이 아니고 경제변화가 정치변화를 초래했다는 것이 중요함.
 - 또한 대다수를 국가가 소유한 채로는 완전한 의미의 시장경제체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임. 즉 국유재산이 85% 사유재산이 15%인 국가에서는 시장경제체제 작동이 불가능함. 사유재산이 85%, 국유재산이 15%로 정반대 체제로 바뀌야 했음.
 - 마지막으로 책임 있는 회사 소유자가 필요하다는 것임. 우리는 85% 사유재산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3가지 방법을 병행했음. 즉 국유회사의 민영화, 개인회사의 설립지원, 친환경사업과 합작회사의 설립 지원임.

-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인이 자기취향대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임.
- o 민영화의 경제적 배경은 소련시장(코메콘)의 붕괴와 국가예산 삭감에 따른 회사지원 축소임. 시장경제체제인 영국도 물론 민영화가 있었지만, 동서독의 경우는 서독이 동독을 지원했고, 한국이 북한을 지원하고 있지만 헝가리는 지원받을 데가 없었음.
 - 그래서 민영화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곤란했음. 중요한 것은 회계장부에 기록된 자산가치가 아닌 실제 가치를 평가해서 매각하는 것이 중요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법적인 배경이 필요했음.
 - 그래서 1989년에 Transformation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안에 의해 국영회사가 유한회사나 Public United Company 형태로 변경되었는데, 예를들면 회사 일부만 개편할 경우 부채·비서·책임자만 남은 껍데기회사가 많았다는 점임.
 - 그래서 1990년에 재산정책 가이드라인을 입안, 국회에서 승인이 되었으며 여기에서 민영화의 목적과 설립근거가 마련되었음.
- o 이에 따라 민영화 기관인 Legal Successor of The Former State Property Agency가 설립되었으며, 이는 정부부처가 아닌 에이전시 형태였으며 국가가 직접 협상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의 KOTRA와 같은 형태의 기관으로 출발한 것임. 기관의 임무는 민영화 절차가 재가치화 되도록 평가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임.
- o 이후 상업,接客업소, 서비스 관련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민영화 전 단계 법안으로 생각함.
 - 법에 따라 영세상점 10,000여개가 민영화되었는데, 이 중에서 종업원 수가 상점은 10명, 식당은 15명 이내인 경우 경매시 종업원에게 우선매입 권리를 부여하였음. 여기에서 헝가리 정부는 100억포린트의 수입을 획득함.
- o 1992년에 모든 것을 팔아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음. 그래서 국가소유 회사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청을 설립하게 되었는데 '헝가리 국영지주회사'가 그것임.
 - 이에 따라 어떤 부분이 국가소유로 있어야 되는지를 정부에서 명령, 지정하였으며, 초기에 170개회사를 국가가 소유키로 결정하였으며 현재는 38개회사로 줄었음.

- 민영화나 국가소유기업 관리를 위해 별도조직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이후 생겨나 1995년에 두개 기관을 합병, 현재의 조직인 '국가민영화 재산관리청'이 생겼음.
 - 주주총회의 권한은 재무장관이 행사하며, 이사회 구성원은 정부가 선택, 감사위원회는 의회, 정당이 지명하며 정부가 임명함.
 - 감사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식의 합의체로 사용자, 고용자 측 1명씩이 참여함. 헝가리 감사원이 매년감사를 하고 연간보고서는 의회가 승인
- 민영화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①사적소유에 기반한 효율적인 시장경제 설립 ②자본부족 완화, 신기술 도입, 시장 관리기술, 국제자본, 다국적 기업 유치 ③내국인 지분 소유계층을 늘리는 것이며, 그 외에도 고용수준, 국가수입 증대, 독점 감소 등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
 - 매각할 회사를 재구조화하려면 많은 자본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각할 회사를 재구조화하는 것보다는 빨리 매각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봄. 다만 은행은 예외임.
- 그래서 헝가리 민영화방식은 시장에 기반한 민영화이며 인근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싼 값에 집단적으로 배분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수요에 따라 민영화를 추진했다는 것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국유재산 매각에 참여한 자는 자기 돈을 투입하니까 책임의식을 느끼기 때문임.
 - 그런데 독일에서는 매각할 때 싼값에 매각하지만 정부가 전혀 보증을 서지 않았음.
- 또다른 문제는 외국투자자가 회사 자체의 운영보다는 건물 등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 응찰하는 경우가 있었음. 그래서 일정기간 내에 재매각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하게 되었고 건물이나 토지 임대만으로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재정하였음.
 - 예를 들어 건물을 5년 안에 매각하면 50%를 세금으로 국고 환수한다는 계약규정과 함부로 매각하지 못하도록 소유권은 국가가 계속 행사함.

<질문>

사회주의체제하에서 국가가 몰수한 민간재산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 졌는가

<답변>

- 무상 반환이 아니고 법률에 따라 국가가 사유재산을 국유화했다는 사유 재산 증명을 하면 보상채권을 지급함. 보상금은 1인당 500만포린트까지 가능했음. 2사람이 공동소유일 경우 1/2씩 나누어 지급함.
 - 이러한 보상표로 자치단체 소유 주택구입이나 토지경매 응찰, 증권시장 매매가 가능하였으며 재산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표를 연금 방식으로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었음. 교회나 성당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그대로 돌려줌.
-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사회기금을 재투자하여 이익을 창출한 것이 아니라 대신에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임. 중요한 것은 국내 소유계층이 형성되도록 피고용자들이 회사 소속이면 유리하게 대여나 주식구입이 가능하도록 시행한 것임.
- 국가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38개 사업은 수도, 전기, 전력 등 국가기간 산업으로서 국민경제 관점에서 볼 때 전략적 중요성이 있는 회사들이거나 국방 등 특별한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임.
 - 이러한 회사들에서 경영권 확보차원에서 과반수+1 유지하거나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다(25%) 1표를 더 가지는데 EU 가입 후 철폐해야 함.
 - 100% 국가소유 23개, 50+1%표 3개, 25+1% 3개, 1% 경영권 확보 9개
- 민영화 대상 1,859개 회사의 재산가치는 1조 6,700억포린트임. 1,288개 회사를 매각하고 552개가 남아있다는 것은 아님. 실제로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함. 여러 회사 경쟁에 의한 파산, 국가가 공장을 폐쇄한 경우, 또는 국가기관 소유회사들이 민영화청으로 들어오거나 반대로 된 경우 등 지속적 변화의 결과임.
 - 완전매각한 부분이 있고 국가소유기업 지분도 일부분만 매각하는 등 다양(화학, 전기, 식료, 맥주, 인쇄, 은행, 전화, 호텔)

<질문>

체제전환전 민영화된 부분이 30%정도 되었음. 사유재산이 85%가 되어야 시장경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떠한 이론이 있는지

<답변>

- 헝가리 사회주의체제에서도 소부분일지라도 사유부분이 있었음. 그 당시에는 농업조합 형태나 2~3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상점(신발가게, 버섯가게) 등 아주 제한된 규모로 인정되었고 회사의 경우 경제노동공동체 같은데서 자체적으로 정한 생산량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 팔 수가 있었음. (체제전환전 「협동조합」에서 부차적인 민간경영 부분은 15% 정도)

<질문>

초과생산량 판매 시스템은 언제, 왜 도입했는가. 보상표는 어떠한 경우에 발행했으며, 정부예산이 부족했을 텐데 어느 정도 규모로 발행·지급했는지

<답변>

-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는 의미로 1980년 초에 도입했으며, 「코루나야누시」는 자신의 책에서 “사회주의의 제1의 문제는 결핍이다”라고 지적했음.
- 보상표는 법률규정에 따라 발행, 국가가 국유화했으니 당연히 보상해야 하며, 국가가 부담을 해야 함. 토지 원소유자, 건물, 주택, 종교재단 소유건물에 보상표를 발행했음.

<질문>

민영화 작업을 다시 추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 민영화 과정에서는 이익 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며 공평한 분배는 이루어 질 수 없음. 결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게 할 수는 없음. 인근 국가에서는 국민에게 무상배분 했는데 큰 문제가 발생했음. 지금은 정상적인 절차를 선택하고 있으며, 헝가리가 잘 했다고 생각함.

<질문>

민영화과정에서 실업자 증가 등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텐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람.

<답변>

- 가능한 한 매각 계약시 피고용자를 고용승계토록 하고, 해고시 직업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계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했음.

IV. 북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북한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동유럽 국가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개혁의 기반을 앞으로 북한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이 중요함.

- 먼저 남북간 다양한 접촉을 통해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 지도층의 인식 변화 유도, 둘째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가들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호의적인 태도가 되도록 남한이 주도적으로 주변 환경 조성 필요, 셋째 일관된 평화 변영정책 추진 등 대내외적 여건을 잘 관리해야 할 것임.

동유럽의 체제전환은 ① 선진 서유럽과 근접하고 있다는 지리적 이점 ② 체제전환 이전 '60~'70년대부터 초기 시장경제 경험 ③ 독재정치의 수준이 낮았다는 점 등 북한의 상황과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음.

- 공산주의 체제로 진입하기 이전에 이미 상당수준의 공업발전을 경험, 공산 체제에서도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 부족은 심각하지 않았음.

현재 북한의 초기 개혁개방 여건 조성과 관련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 첫째, 초기 개혁시 경험하게 되는 가격자유화, 주민 의식 변화, 대외환경 개선 등 시장경제 경험의 누적이 본격적인 체제전환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함.
- 둘째, 체제전환 초기에 겪게 되는 자금난은 IMF, IBRD 등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이 재정안정 및 SOC 건설 등 경제부흥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들 기구들과 원만한 협조가 필요함.
- 셋째, 북한에서 2002.7.1부터 시행중인 경제개선조치(시장화, 경제특구 등)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자본주의 경제를 체험, 점진적으로 시장경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남북간 경제협력 프로그램인 개성공단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기타 지역의 경제특구도 적극 참여하여 북한의 경제기초를 착실히 다져나가야함.

- 넷째, 북한의 바람직한 개혁·개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군수부문의 민수 전환, 시장경제요소의 확대, 민간경제 활성화가 요구됨.

체제전환지역의 민영화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은 취약한 기업지배구조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시장제도의 기반이 취약하여 민영화된 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제고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앞으로 북한의 국유재산 사유화 추진시 급진적인 외부매각이나 대중 사유화(바우처) 실시보다는 먼저 법제도를 비롯하여 좋은 투자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국내자본 축적여부에 따라 사유화 방식을 결정하여야 함.

- 국내자본 축적이 미약할 경우 대중 사유화와 외부자 매각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해야 함.(바우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사고는 곤란)

투자유치를 위해 당국의 결단이 필요, 투자인센티브, 국제수준의 법·제도 등 투자환경을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함.

- 초기 외자유치는 고부가가치 산업은 지양하고 북한 노동자 수준에 맞는 단순기술과 저임금을 위주로 하는 업종의 유치가 바람직하며, 기술 숙련도에 따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대 필요
-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 수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필요, 내부적 소비 시장 확대 등을 통한 외국인 투자시 이윤창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야 함. (북한투자 성공사례를 시급히 발굴하여 널리 홍보 필요)
- 특히 외자 유치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한 국제 평화를 지향하는 이미지 개선 노력이 중요함.

동유럽 체제전환 국가들은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며 EU에 가입했지만 서유럽 수준의 경제력에 도달하기까지는 2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전망, 체제전환은 어렵고 장기적인 과정임.

- 동유럽의 경우, 서유럽 국가들의 적극적인 투자 및 소비가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음.

북한이 체제전환을 할 경우, 독일 통일 사례를 되새겨(우량 동독기업이 지원을 하지 않아 대부분 파산했음) 북한의 우량기업이나 성장가능성이 많은 기업들을 과감히 지원하여 경제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임.

- 남북간 경제협력 및 지원은 “퍼주기 식”으로 비쳐질 수도 있지만,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며, 북한이 점진적인 체제전환을 할 수 있는 자생력 있는 경제여건이 조성되도록 직·간접적인 협력이 필요함.
- 북한이 국제사회에 협력 기반을 갖추어 역량이 부족하므로, 남한이 우선적으로 북한 경제관료들을 체제전환 성공국(체코, 헝가리 등)에 파견하여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필요

최근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로 인해 주민들의 시장경제 마인드가 조금씩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봄. 향후 북한 당국이 시장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되며, 동유럽의 체제전환 성공사례를 모델로 투자청이나 민영화청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각종 남북한 회담시 건의 등 제안

- 북한이 이에 대해 동의하고 투자청 등을 설립할 경우, 남한 정부나 기업에서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을 활용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체제전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 특히 개성공단개발은 남북당국이 협력하에 이룩한 성공사례로서 남북양 측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며,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이 북한에게 경제적 실익을 가져다줌으로써 북한의 정치·경제적 안정과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다 줄 것임.

개혁개방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족한 투자재원의 외부조달을 위해 체계적인 제도기반을 구축하고, 투자환경 개선, 전략적 투자자에 대한 투자기회의 확대 등이 요구됨. 이런 측면에서 북한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남북공동 경제 재건단」을 창설하여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조치가 긴요함.

더불어 북측 내부의 책임회피형 관료주의 변화, 의사결정의 분권화와 자본주의적 경영방식의 도입과 같은 시장경제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동유럽 체제전환의 성공요인은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이라는 목표에 대해 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한 것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북한의 개혁·개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북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해야만 지속적인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임.

참고 문헌

1. 진승권, “동유럽 탈사회주의 체제개혁의 정치경제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2. KOTRA 해외조사팀, “세계비즈니스정보(체크)”, 웹사이트, 2004
3. 연수자료, “동유럽국가의 개혁 및 체제전환 전략”, 2003
4. 부다페스트 무역관, “월간통상정보”, 2004.5
5. 체크 노동사회연구소, “인문사회발전 보고서”, 2000
6. 장상식, “새로운 EU의 중심 헝가리”, 한국무역협회, 2004
7. 부다페스트 무역관, “헝가리 경제동향 및 우리와의 교역·투자현황”, 2004
8. 체크 투자청, “체크공화국의 투자환경”, 웹사이트, 2004
9. 주체크대사관, “체크정세 및 한·체크관계”(자료), 2004.6
10. 한국무역협회, “각국별 투자현황”, 웹사이트, 2004
11. 서석형, “중동구·구소지역 체제전환기 성장과 과제”, 수출입은행, 2000
12. 고재호, “체제전환지역 민영화의 특징과 문제”, 수출입은행, 2000
13. 체크 스코다자동차, “Welcome at SKOTA AUTO”(프리젠테이션 자료), 2004
14. 헝가리 경제교통부, “산업의 체제전환 과정 1989~2003”(프리젠테이션 자료), 2004
15. 헝가리 경제교통부, “헝가리에서 경쟁과 투자 프로모션”, 웹사이트, 2004
16. 헝가리 무역투자진흥청, “헝가리 2004”(팜플렛 자료), 2004
17. 헝가리 민영화청, “헝가리 민영화 과정”(프리젠테이션 자료), 2004
18. 헝가리 민영화청, “헝가리 민영화과정과 보유기업 현황”(자료), 2003

(붙임1)

헝가리 진출 한국경제인 면담결과

1. 일반현황

- 일 시 : 2004. 6.28(월) 19:00~22:00
- 장 소 : 헝가리 부다페스트 시내음식점(서울의집)
- 참석자 : 9명
 - 경제인 : 김상철·김명수(KOTRA),
이회동·최기선·김규봉(현지 기업인)
 - 연수단 : 황부기(단장), 한재현·김미옥·이해준(단원)

2. 면담내용

<헝가리 EU가입 관련>

- 2004년 5월 1일자로 헝가리 등 중·동구 유럽권을 포함한 10개국이 유럽 연합공동체(EU)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EU 전체 회원국은 25개국으로써 세계최대 규모의 단일시장으로 확대·출범하였음.
 - EU는 인구 4억5천만명, GDP 9조달러, 세계무역의 19%를 차지
- 헝가리가 EU가입으로 매년 GDP의 1.1%(2004년도 554백만유로)를 EU에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농업보조금과 재정지원 등 2007년까지 EU로부터 31억 유로를 지원 받게 됨.
 - 그러나 주민들은 EU가입으로 지나친 물가상승과 낮은 임금수준 및 노동력 이동제한 등에 따라 우려에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단기적으로 주민들의 불만은 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헝가리의 EU가입이 자국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됨.
- 회원국들간에 기업의 시장파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각 정부간 노력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 독일노조는 자동차공장의 신생 EU국 이전을 저지하기위해 임금동결 조치와 함께 이전을 고려할 때 노조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노사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영국을 제외한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은 신생 가입국의 노동자와 상품반입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있음.
- EU정부가 각국의 산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2+3+2제도시행을 허가 하였음. 2년이 경과된 후 평가를 해서 3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3년 후에는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7년동안 제한할 수 있음.
- o EU에 진출해 있는 우리업체들은 물품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인하 등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
- o 헝가리는 체제전환이후 재정적자가 매년 누적되어 GDP 대비 최대 10%까지 확대되었으나 EU가입 조건의 걸림들로 작용해 2003년에는 5.9%로 낮아졌고, 올해에는 5% 이내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 EU가입에 대한 재정적자 조건('마스트리히트 조약')은 가입 2년 이내에 재정 적자를 3% 이내로 축소하는 것으로 헝가리 정부는 2004년 4.6%, 2005년 2.8%, 2006년 2.5%라는 재정적자 목표를 설정
- o 헝가리는 자국시장에 유로화 완전 유통시기를 2010년으로 잡고있음.
 - 현재 헝가리는 주요 관광지에서는 자국화폐인 포린트(FT)와 유로화 (EUR)가 함께 통용되고 있으나 자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장이나 할인상점, 교통요금 등은 포린트만 사용되고 있고, 관광지에서도 자국화폐보다 유로화를 낮게 평가해 주기 때문에 유로화보다는 포린트 환전이 필수적임.

<체제전환이후 헝가리 변화모습>

- o 20~30대 초반 젊은이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전환에 따른 최대가치가 돈이라고 인식하고 보dana은 직업이나 부의 축적을 위해 영어습득이나 서구의 교육제도 이수 및 합리적 사고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 사회주의체제를 경험한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마음자세가 크게 부족하고 현재까지도 수동적인 일처리 방식이 상존하고 있음.
 - 예를들어 상점점원에게 심부름을 시킬 경우 특정물건에 대한 지정상점에 물건이 없을 경우 옆가게 등 다른 곳에서 찾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돌아온다거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철저히 챙기면서도 야근 등에 대해서는 되도록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음.

- 과거에는 오후 4~5시 철시와 금요일 오후 2시 이후 철시가 철저히 지켜졌으나 요즘은 저녁 내지 24시간 영업하는 상점들이 많아졌음.
 - 대표적인 관료집단으로 매도되었던 공공기관도 과거 수동적 자세에서 적극적 민원해결 방식으로 변화함.
- 체제전환 이후 민영화 과정에서 부를 축적한 계층이 있는 반면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한 국민들이 많이 생겨나는 등 체제전환 초기에는 없었던 실업문제, 빈부격차 등이 심해졌음.
 - 특히 사회주의 체제 향수에 젖어있거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적응하기 못해 길거리 부랑자나 알콜 중독자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음.
 - * 헝가리 중심거리에서도 저녁에 부랑자들이 구걸을 하거나 길 옆에서 누워 있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음.
- 헝가리 인구 1천만명에 대한 공무원 수는 비슷한 인구의 그리스에 비해 2배가량 많다고 함. 사회주의 체제전환시기에 상대적 구조조정을 거치지 않아 공무원 수가 많아서 정부의 재정적자의 해소를 위해 인력 슬림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함.

<민영화 및 외자유치 관련>

- 체제전환기에 내부자 매각이나 외자유치 과정에서 관료와 내부자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하였고, 특히 정치인들의 부패가 심하였음.
- 민영화 초기 헝가리는 내부자 매각이나 외자유치시 체크 등이 채택한 바우처방식이 아닌 공개매각방식이나 원소유자에 대한 채권형태 반환을 통해 성공적인 민영화와 다른 중동구권 국가들보다 많은 외자유치를 성사시켰으나 최근 외자유치에 대한 기관들의 자세가 많이 나태해지고 집권당에 극우 민족주의 정당이 들어서는 등 정치적 불안이 겹쳐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 4년마다 정권이 바뀌는 등 정쟁이 심해져 외국 경제인들이 지속적 경제 안정정책 추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있음.

- 최근 집권한 청년민주동맹은 옛 헝가리 제국의 영광 재현과 사회보장 제 강화, 공무원 보수 2배인상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하였음.

<기타사항>

- o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싼 물건만 찾지 않고 브랜드 위주의 구매를 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기업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져 우리제품 판매가 잘 안 되고 있음.
- o 과거 사회주의권 시절에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헝가리에 유학을 많이 보냈으며, 이들 중 본국으로 귀국않고 헝가리에 정착한 유학생이 중국은 3만명, 베트남은 1만명 정도로 이들이 헝가리의 도매나 소매상권의 상당부분을 장악하고 있음.
- o 헝가리 인구가 1천만명인데 한해에 3-4천만명의 관광객이 들어오고 있음. 우리나라도 관광자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펴야 함.

<체제전환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o 시장경제체제 정착과 개인의 근로 인센티브제가 정착되어 생산성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과거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지나치게 혜택을 누려왔던 무상교육, 무상의료, 연금제도 등이 대폭 축소되어야 하나 오히려 현재까지 존속되거나 어떤 제도들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노동자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는 풍토가 쉽게 형성되지 않고 있음.
- 근로자들이 자신이나 가족의 미래를 위해 부를 축적해야 한다는 자본주의 논리가 정착되도록 하기위해 사회보장제도 축소는 필수적임.
- 재정지원 폐해를 예로들면 여자가 아기를 출산하면 3년간 휴직이 가능하고 정부가 월급의 대부분을 보조해 주고 있어 어떤 사람은 10년 이상된 회사동료가 아직 얼굴도 모르는 직원이 있을 정도라고 함.(3년마다 아기를 출산하여 출산휴가를 계속사용)
- o 정부의 과도한 사회보장제도 확대에 의해 누적되고 있는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내부자 매각이나 외자유치 등으로 벌어들인 재정수입을 사회간접자본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사회복지혜택(주택, 의료, 교육, 연금분야)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축소해야 하며, 공무원 인원축소와 조직에 대한 직제개편이 필요함.

- 막대한 통일비용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이 체크, 헝가리 수준으로 체제가 전환되었을 때 통일을 이루는 실리적 접근을 해야 함.
 - 북한지역을 남쪽의 생산기지화로 삼거나 자체 경제개혁을 적극 지원하여 개혁·개방을 유도해야 함.
 - 북한을 중국과 일본의 허브(무역창구)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중국식 개혁·개방을 모델로 삼아 사회주의체제를 가지면서 경제개혁을 추진하도록 지원
- 남한기업의 북한투자 장려를 위해서 경제적 요소(인건비 등) 뿐 아니라 정치적 요소(불확실성 만연)가 충족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하며, 우리 기업인의 북한진출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홍보한다면 기업인의 불안감이 해소되어 보다많은 투자가 이루어 질 것임.
- 우리기업의 북한투자 확대를 위해서 과거 헝가리에서 그랬듯이 남한 정부가 직접 나서서 것을 북한이 꺼릴 것이므로 민간부문에서 무역관 개설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진출기업에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함.
- * 1889년 2월 한-헝가리 수교전에 KOTRA가 1987년 12월에 무역관을 설치하여 정부의 역할을 대행

(붙임2)

방문기관별 수집자료(원문)

1. 체코 투자청

Investment Climate

POLITICAL AND ECONOMIC STABILITY

The Czech Republic is a fully-fledged parliamentary democracy, one of the most advanced transition economies and one of ten new members joining the European Union on 1 May 2004. Economic policy is consistent and predictable. A strong and independent Central Bank (Czech National Bank) has maintained an extraordinary degree of currency stability since 1991. The Czech Republic was the first CEE country to be admitted into the OECD. The country is a member of NATO and is fully integrated into other international organisations such as the WTO, IMF and EBRD.

EU legislation has been adopted in preparation for EU accession. Commercial, accounting and bankruptcy laws are compatible with Western standards.

The Czech koruna is fully convertible. All international transfers (e.g. profits and royalties) related to an investment can be carried out freely and without delay.

NON-DISCRIMINATION

Under Czech law foreign and domestic entities are treated identically in all areas, from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to investment incentives. The government does not screen any foreign investment projects with the exception of the defence and banking sectors.

As an OECD member the Czech Republic is committed not to discriminate against foreign investors in privatisation sales, with the same exceptions.

INVESTMENT PROTECTION

The Czech Republic is a member of the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protection of investment belonging to the World Bank-IMF group. The country has signed a number of bilateral international treaties which support and protect foreign investments, for example with the United States, Germany, UK, France, Austria, Switzerland, Italy, Belgium, Luxembourg, Netherlands, Finland, Norway and Denmark.

The treaties provide that each party shall permit and treat investments and associated activities of the other party's residents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and guarantee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by law. The full text of the respective treaty is available in Czech and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other country only. The Czech version can be obtained from the Collection of Laws of the Czech Republic. The other language version is available from the authorities of the other country such as the embassy.

The Czech Republic has also concluded agreements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 see the section Repatriation of Profits below.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The Czech Republic is a signatory to the Bern, Paris, and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s. Existing legislation guarantees protection of all forms of property including patents, copyrights, trademarks, and semiconductor chip layout design. Trademark law and copyright law are compatible with EU directives.

The only case where the property of a foreign person or entity could be expropriated in the Czech Republic would be on public interest grounds that could not be satisfied by other means, which would then have to be through an Act of Parliament and with full compensation at market value. No expropriation of the property of a foreign investor has taken place since the velvet revolution in 1989.

REPATRIATION OF PROFITS

No limitations exist concerning the distribution and expatriation of profits by Czech subsidiaries to their foreign parent companies, other than the obligation of joint stock and limited liability companies to generate a mandatory reserve fund and pay withholding taxes (for details see Corporate Tax and Depreciation Factsheet).

The Czech Republic has treaties to prevent double taxation with many countries, including all EU countries, Switzerland, the USA, Canada, Japan, and Australia. A full list of countries is available from the Ministry of Finance.

Double taxation treaties cover taxes on dividends, interests and royalties. Actual rates of withholding tax are determined by the treaty and range from 0 to 15 per cent. The exact method of double taxation prevention must be determined by reference to the actual treaty between the Czech Republic and the other country.

INVESTMENT RISK

An open investment climate has been a key element of the Czech Republic's economic transition. The country's investment grade ratings from international credit rating agencies and its early membership in the OECD testify to its positive economic fundamentals.

Investment Risk Ratings

| COUNTRY | STANDARD AND POOR'S | MOODY'S | FITCH-IBCA |
|----------------|---------------------|---------|------------|
| Slovenia | A+ | Aa3 | A+ |
| Czech Republic | A- | A1 | A- |
| Hungary | A- | A1 | A- |
| Poland | BBB+ | A2 | BBB+ |
| Estonia | A- | A1 | A- |
| Slovakia | BBB | A3 | BBB |
| Romania | BB | B2 | BB- |
| Russia | BB | Baa3 | BB+ |

Source: Czech National Bank, December 2003

ACQUISITION OF REAL ESTATE

Any company registered in the Czech Republic may acquire real estate without any limitations. Any purchase or transfer of real estate must be registered with the relevant Land Registry. The real estate transfer tax is 3% of the selling price or the officially assessed value, whichever is greater, and is paid by the seller.

Investment Incentives

I. MANUFACTURING SECTOR

II. BUSINESS SERVICES AND TECHNOLOGY CENTRES

III. APPLICATION PROCESS

I. MANUFACTURING SECTOR – INCENTIVES AND ELIGIBILITY CRITERIA

The Czech Republic offers both new and existing investors investment incentives and business support through several schemes. This document describes the system of national investment incentives offered by the government to investors in manufacturing facilities. As of the end of December 2003, 155 firms had been awarded incentives, and a further 61 applications were being processed.

THE NATIONAL INVESTMENT INCENTIVES SCHEME

The Czech government in April 1998 originally approved investment incentives for manufacturing. From the outset, it was designed as a scheme that applies equally to both foreign and domestic investors under the same conditions.

A new **Act on Investment Incentives** (Act No. 72/2000 Coll.), effective May 1, 2000, whose subsequent amendments came into force in May 2004, codifies, simplifies and extends the original national incentives scheme. The Act was discussed with the European Commission and follows European rules on state aid.

Incentives listed in the Act on Investment Incentives

| | |
|--------------------------------|---|
| Tax incentive | Corporate tax relief for up to 10 years for new companies Partial tax relief for up to 10 years for existing companies |
| Job creation grants | Financial support to create new jobs |
| Training and retraining grants | Financial support to train and retrain new employees |
| Site support | Transfer of public land at a favourable price |

The incentives are available singly or collectively and are designed to have maximum impact in the early stages of a project.

Tax incentive

The tax incentive has two forms. If a new company (legal entity) is established for the investment project, the new company is eligible for corporate tax relief for up to ten years. If the investment is made as an expansion or modernisation project within an existing Czech company (legal entity), the company is eligible for partial tax relief for up to 10 years. The tax relief is terminated when the company has exceeded the maximum level of eligible state aid - see the section below on compatibility of incentives with European Union regulations.

Job creation and training and retraining grants

The size of the job creation grant depends on the unemployment rate in the district where the investment is made, and ranges from zero in areas with unemployment below the national average to a maximum of CZK 200,000 per employee in districts with unemployment more than 50% higher than the average. The same applies to training and retraining grants, which range from zero to a maximum of 35% of total training and retraining costs.

Site support

This incentive is available on a national basis subject to availability of suitable sites, and the site should be selected prior to submitting the application for investment incentives. The incentive is granted by the government to the municipality and/or the private developer in the form of subsidies for development of site infrastructure and the transfer of land from state ownership to the municipality at an advantageous price.

From 1998 to 2003, the incentive resulted in the creation of 80 industrial zones where sites are readily available to investors.

ELIGIBILITY CRITERIA FOR MANUFACTURING

The investment must be made into a manufacturing sector and at least 50% of the production line must consist of machinery listed on a government-approved list of high-tech machinery.

The investment must be made into the launch of new production or into the expansion of existing production or modernization.

The investor must invest at least CZK 200 million (approx \$8 mil.) within three years. This limit is reduced in regions with high unemployment to CZK 150 million or CZK 100 million, depending on the unemployment rate.

Half of the investment minimum (above) must be covered by the investor's own equity.

At least 40% of total investment must be made into machinery.

The proposed production must meet all Czech environmental standards

INVESTMENT INCENTIVES - COMPATIBILITY WITH EU REGULATIONS

Compatibility of the investment incentives rules applied in the Czech Republic with EU state aid legislation is evaluat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Each application for investment incentives must pass evaluation by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which also decides on the total amount of state aid available to each project. The actual aid available to each project is calculated as a percentage of the total value of the actual investment (i.e. capital expenditure into buildings, machinery and equipment, including expenditure into intangible assets of up to 25 % of the costs for buildings, machinery and equipment). Once the limit of state aid available to the project has been reached, the tax break is terminated and the company has to start paying corporate tax.

Please see the attached map for the maximum percentage of state aid available in various regions in the Czech Republic, as required by EU regulations.

II. BUSINESS SUPPORT SERVICES AND TECHNOLOGY CENTRES - INCENTIVES AND ELIGIBILITY CRITERIA

In order to strengthen the Czech Republic's position as an information and technology hub in the Central European region, the Czech government also supports investment into development and innovation as well as service activities.

Based on Government Decree 1238 of December 10, 2003, *the Framework Programme for Support of Technology Centres and Centres of Business Support Services*, the following incentives are offered:

Subsidy for business activity

- Paid yearly up to 50
- Paid during a period of maximum 10 years, up to the ceiling of state aid (calculated using either the employees' two-year average wages within the first 3 years or using expenditures on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within 5 years).

Subsidy for training and re-training

- Paid yearly at a level of 35% (30% in Prague) of special training costs and 60% (55
- Paid during the period of maximum 3 years (or 5 years if the investor creates more than 100 new jobs)
- Maximum level of training subsidy is CZK 100 000 per employee (or CZK 150 000 per employee if the investor creates more than 100 new jobs)

DEFINITION OF BUSINESS SUPPORT SERVICES

"Business Support Services" are selected activities of companies characterised by a high proportion of added value, a high proportion of qualified labour, a close relationship with information technologies, a distinctive international focus, in particular customer contact centres, shared services centres, including the regional headquarters of multinational companies, software development centres, expert solution centres for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high-tech repair centres.

DEFINITION OF TECHNOLOGY CENTRES

Technology centres, or design centres, are centres of innovation activitie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manufacturing. The results of the centre's innovation activity are expected to be applied in regular production within 3 years from the Project Aid Decision. The typical innovation activity of the technology centre would include routine or periodic changes made to products, production series, manufacturing processes, existing services and other operations in progress, even if such changes may represent improvements. No part of the technological centre's activities may be intended for or depend on the arms industry in any way.

ELIGIBILITY CRITERIA

| Type of project | TECHNOLOGY CENTRES | CALL CENTRES |
|--|---|---|
| | SOFTWARE DEVELOPMENT CENTRES EXPERT SOLUTION CENTRES HEADQUARTERS | HIGH-TECH REPAIR CENTRES SHARED SERVICES CENTRES (EXCEPT HEADQUARTERS) |
| Minimum investment | CZK 15 mil. | CZK 30 mil. |
| Minimum number of newly created jobs | 15 | 50 |
| Amount recipient must finance with own resources | CZK 7.5 mil. | CZK 15 mil. |
| Linkage with production (relevant for technology centres only) | The results of the technology centre should be materialized in production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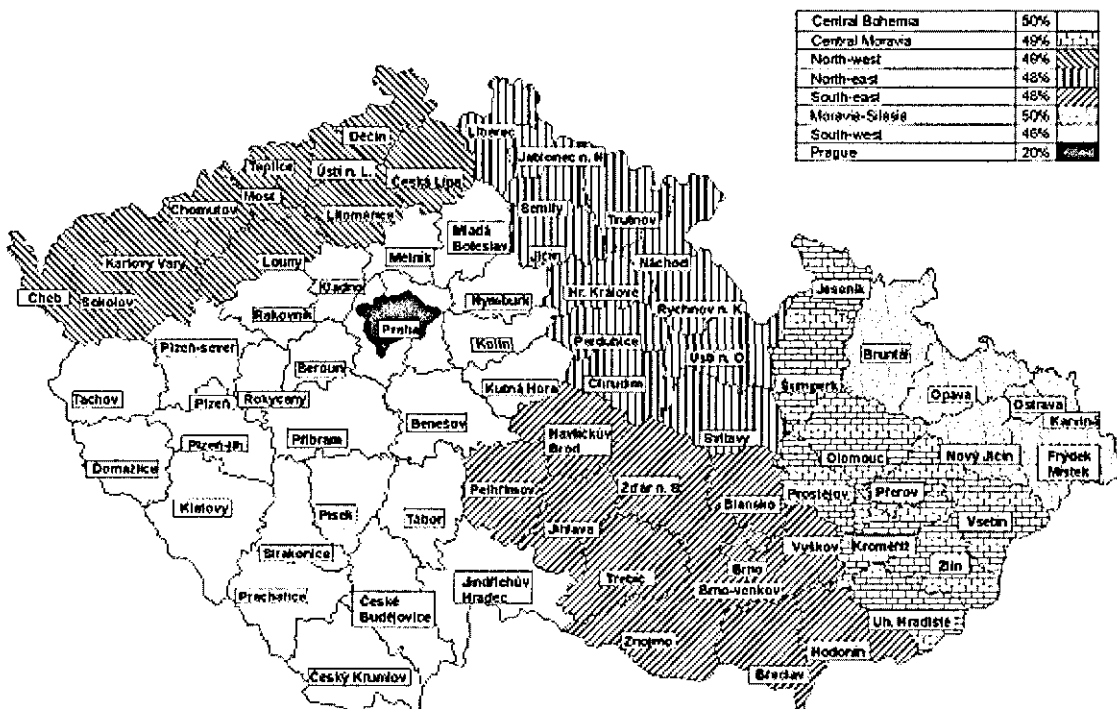
III. APPLICATION PROCESS

1. The investor prepares an application for investment incentives using a standardized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form and submits it to CzechInvest.
2. CzechInvest evaluates the application within 30 days (60 days in the case of incentives for technology centres and business support services) and forwards it to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3.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forwards the application to other ministries for their evaluation.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in cooperation with the Office for the Protection of Economic Competition, decides on the total amount of investment incentives available for each project according to EU regulations. This takes 2-3 months.
4. Upon receiving the comments from the ministries,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akes a proposal of a "Project Aid Decision" to the investor. The proposal lists all the incentives available for the project and lays out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incentives are granted.
5. The investor has a period of 6 months to accept the proposal. Once the investor has accepted the proposal,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issues a formal "Project Aid Decision".

Further details on investment incentives are laid out in the 'Manual on Investment Incentives' available at section Download.

Maximum percentage of state aid



Investment Opportunities

The Czech Republic has attracted a large amoun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since 1990, making it the most successful transition country in terms of FDI per capita. The introduction of investment incentives in 1998 has stimulated a massive inflo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greenfield and brownfield projects.

Key advantages of the Czech Republic as an investment location includ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all sectors and from all countries is welcomed and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the level of investment or ownership.

The 'knowledge pipeline' in the Czech Republic is of a higher quality than in most western European countries, boosted by a stronger enrolment pattern at secondary level and revealed in higher performances in mathematical tests at secondary level and a proportionately higher number of tertiary-level science and technology graduates.

A skilled and disciplined Czech workforce is ready to help your company achieve higher productivity levels. The upgrade and expansion of telecommunication networks and IT is a national priority.

GREENFIELD INVESTMENTS

The Czech Republic offers excellent conditions for greenfield investment. CzechInvest maintains its own national database of over 250 suitable industrial sites and buildings around the country that have clear title, industrial zoning permission and a plan for delivery of infrastructure to the border of the site. There are over 70 municipal industrial zones in the Czech Republic. The government supports the development of municipal industrial parks through the Programme for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Zones in which CzechInvest plays a major role. Investors locating in municipal industrial zones will receive fully serviced land at favourable prices. Greenfield projects meeting eligibility criteria can receive investment incentives including a tax break, job-creation grants, training grants and others.

JOINT VENTURES AND SUPPLIERS

Joint ventures between Czech and foreign firms are encouraged and supported in the Czech Republic. CzechInvest promotes the development of joint ventures between foreign & Czech firms through the use of its Database of Czech Suppliers. If approached by a foreign manufacturing firm wishing to set up a joint venture in the Czech Republic, CzechInvest will search its databases to see if a suitable potential Czech partner can be found and match the two potential partners.

CzechInvest is also implementing a Supplier Development Programme designed to boost the number of foreign investors that are increasing their use of Czech-based suppliers. Full details on the Programme and the Database of Czech Suppliers are available at www.czechinvest.org.

PRIVATISATION

All state-owned companies fall under the control of the National Property Fund. There are still some strategic companies scheduled for privatisation. In most of these companies, the state owns a minority stake. These firms will only be sold via public tenders and public auctions.

To enquire about state assets that may be for sale, check the website of the National Property Fund at www.fnm.cz under 'Privatisation projects'. Further information may be requested at +420 224 991 403 or info@fnm.cz

ACQUISITION OF PRIVATE COMPANIES

There are some good opportunities to acquire either already privatised companies or new start-ups. CzechInvest regrets that it does not have the resources to play an active role in identifying local firms as potential acquisition targets. We suggest you approach a Czech-based consultant who can help you directly. Your country's embassy should be able to supply you with a list of such consultants, or you can approach a member of the Association of Foreign Investors (www.afi.cz). We are ready to provide general information on the investment and business climate in the Czech Republic.

INVESTMENT OPPORTUNITIES IN INDIVIDUAL SECTORS

Manufacturing: Investment into hi-tech manufacturing sectors offers excellent potential due to the Czech Republic's long and rich industrial heritage and is strongly supported through government support programmes including the investment incentives scheme. Support of hi-tech manufacturing investment is the core of CzechInvest's activities.

Utilities: The gas, electricity and water service sectors are still in the process of privatisation. All enquiries about producers and distributors in these sectors should be addressed directly to the Ministry of Industry & Trade.

Strategic services and Technology Centres: These include customer contact centres, shared service centres, expert solution centres, software development, research & development centres, design centres and hi-tech repair centres. The Czech Republic aims to become the regional hub for these services and CzechInvest has made the attrac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strategic services one of its priorities. Investment support for strategic services has recently been introduced: Framework Programme for Support of Strategic Services Projects and Framework Programme for Support of Establishment and Expansion of Technology Cent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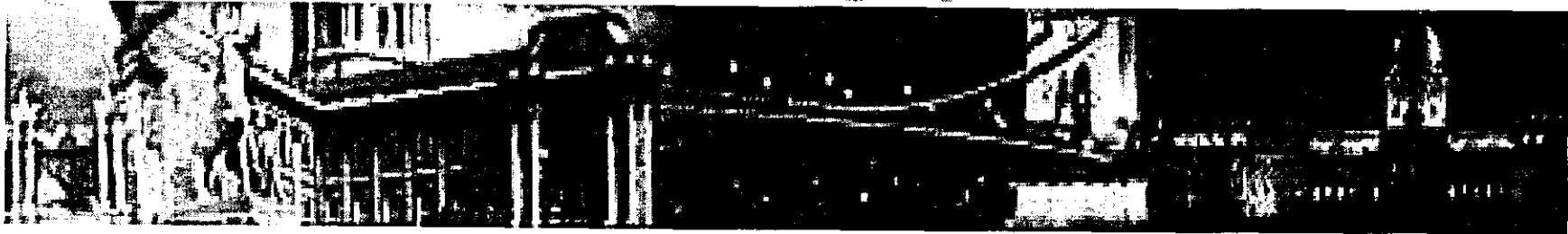
Financial services: Privatisation of the banking sector is nearly completed but there are some very good investment opportuniti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as demand for these services is increasing. Nevertheless, CzechInvest regrets that it does not have the resources to play an active role in aiding financial services investments. As in the case of acquisitions, we suggest you approach a Czech-based consultant who can help you directly.

Real estate: This sector also presents very good investment opportunities as demand for high-quality real estate of all types is growing. Nevertheless, CzechInvest is unable to identify real estate opportunities other than those in industrial manufacturing and strategic services. Please contact a Czech-based consultant or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Foreign Investment (www.afi.cz) who can help you directly.

Tourism and other services: There are many good investment opportunities in these sectors but CzechInvest does not have the resources to play an active role in these projects. As in the above case, we suggest you approach a Czech-based consultant or the Association for Foreign Investment.

Telecommunications: Privatisation and liberalisation of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are underway. Potential investors are advised to contact the Ministry of Informatics (www.micr.cz)

Competitiveness and investment promotion in Hung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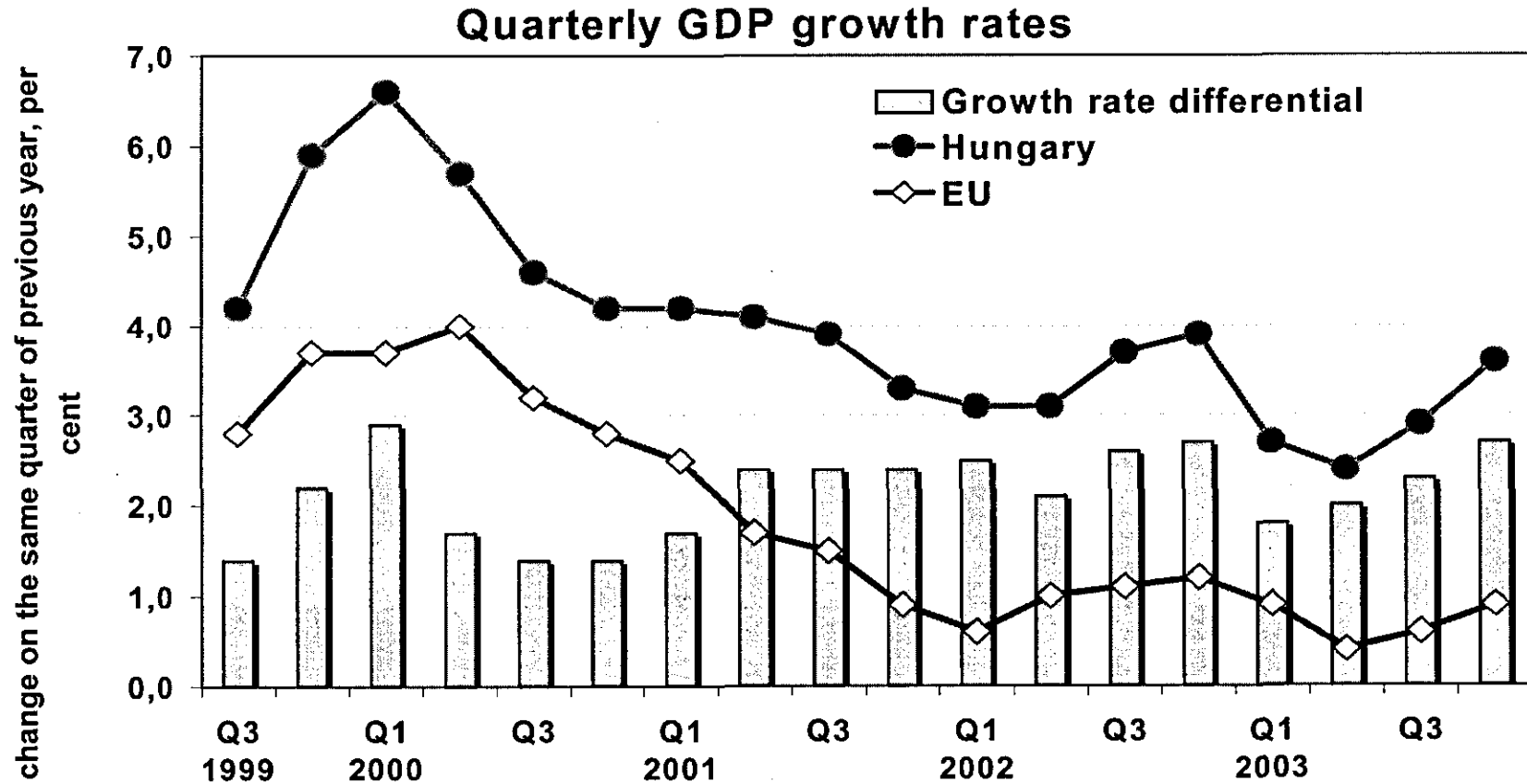


Ministry of Economy and Transport

(헝가리 경제교통부)



Hungarian GDP growth follows the trend of the 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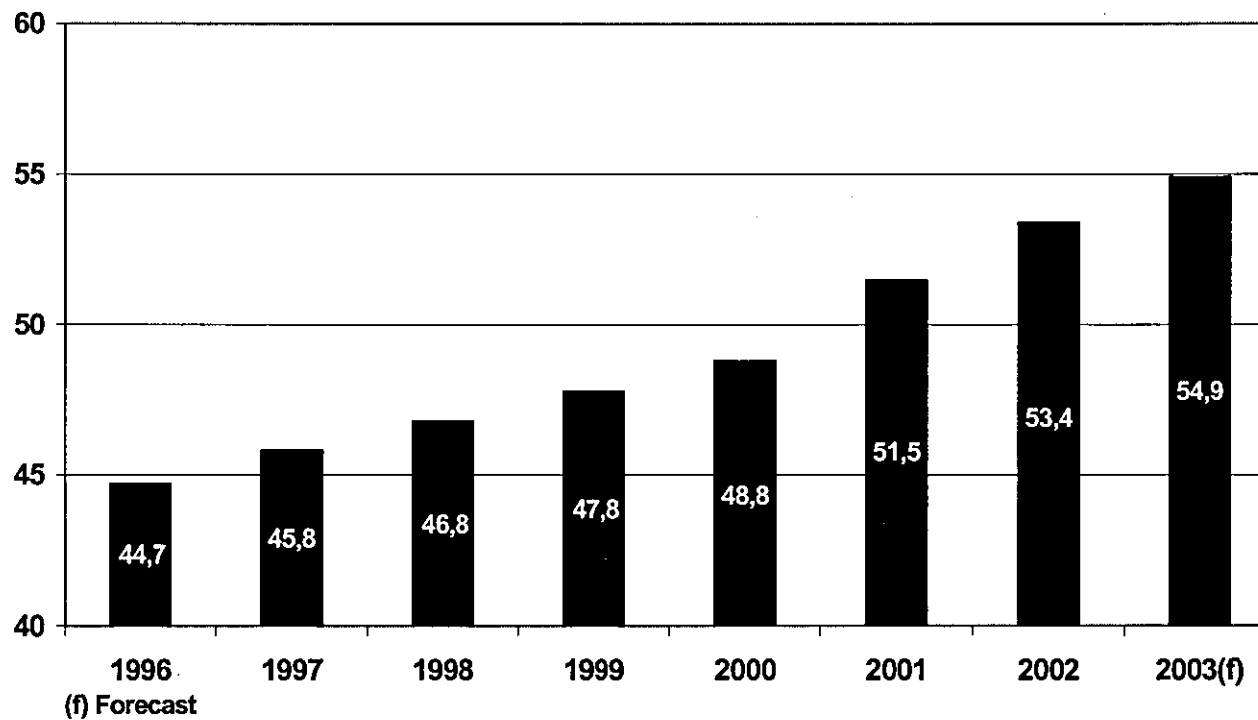


Source: Central Statistical Office, Eurostat



Real convergence has been unbroken since the mid-1990s

GDP per capita in Purchasing Power Standards
(EU-1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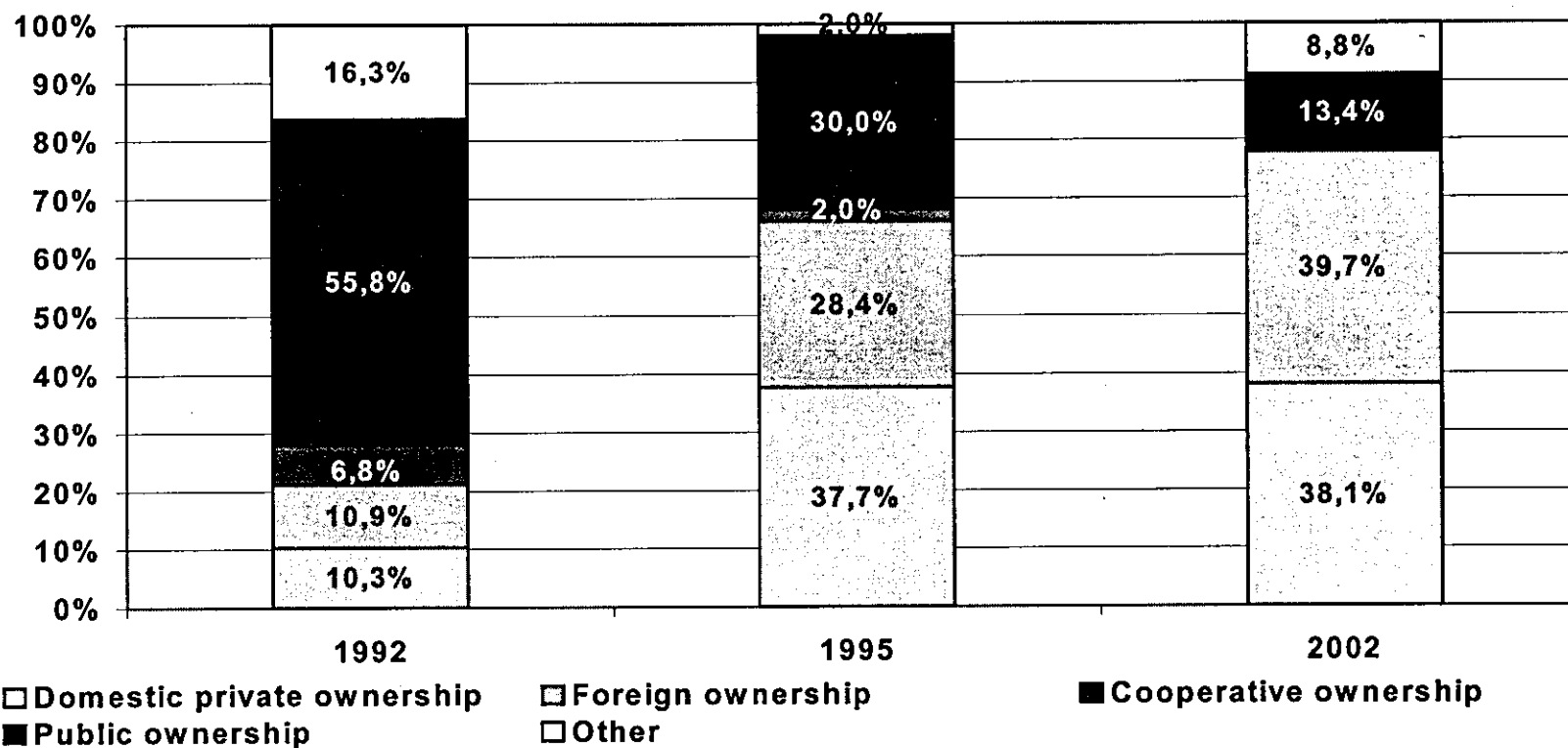
Assuming a constant 2.5-percentage-point growth-rate differential, catching up with the EU-15 would require approximately 25 years.

Source: Eurostat



Foreign capital's role in the successful economic transition has been decisive

Ownership Structure of Registered Capital of Hungarian enterpri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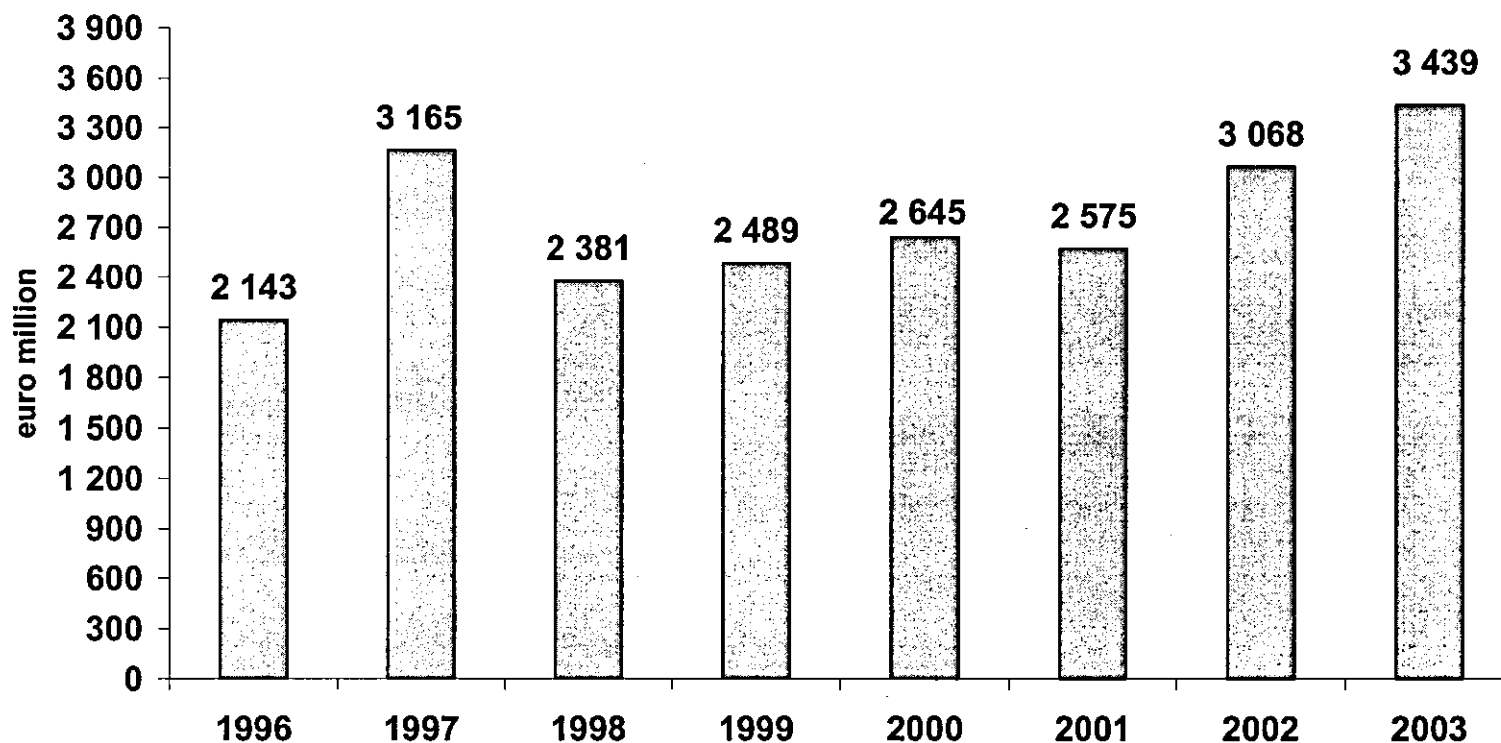


Source: Hungarian Tax Authority



Hungary has been attracting a continuously high inflo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nual FDI inflow* to Hung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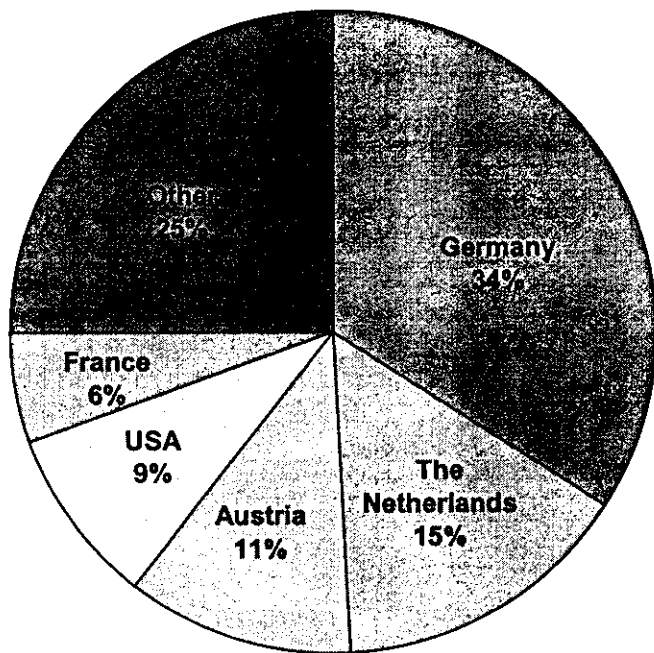
*Excluding other capital, including reinvested earnings

Source: Hungarian National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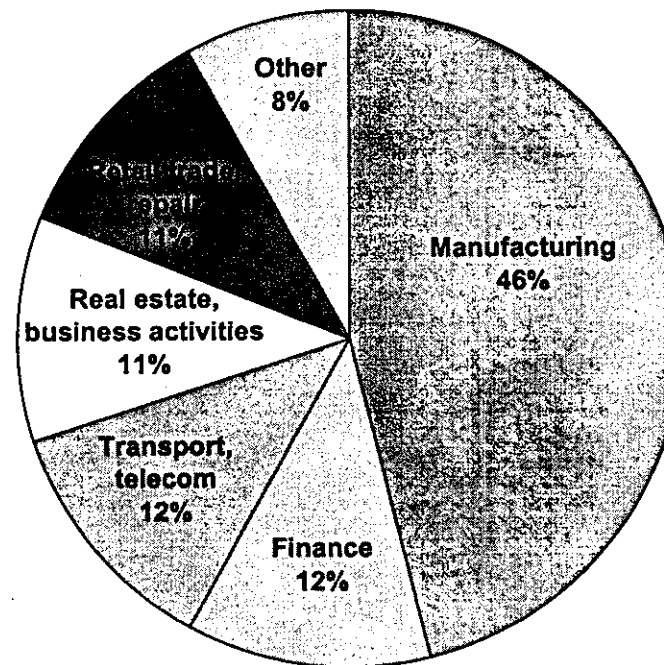


FDI influx has been arriving mainly from EU countries and directed to competitive industries

FDI by Countries of Orig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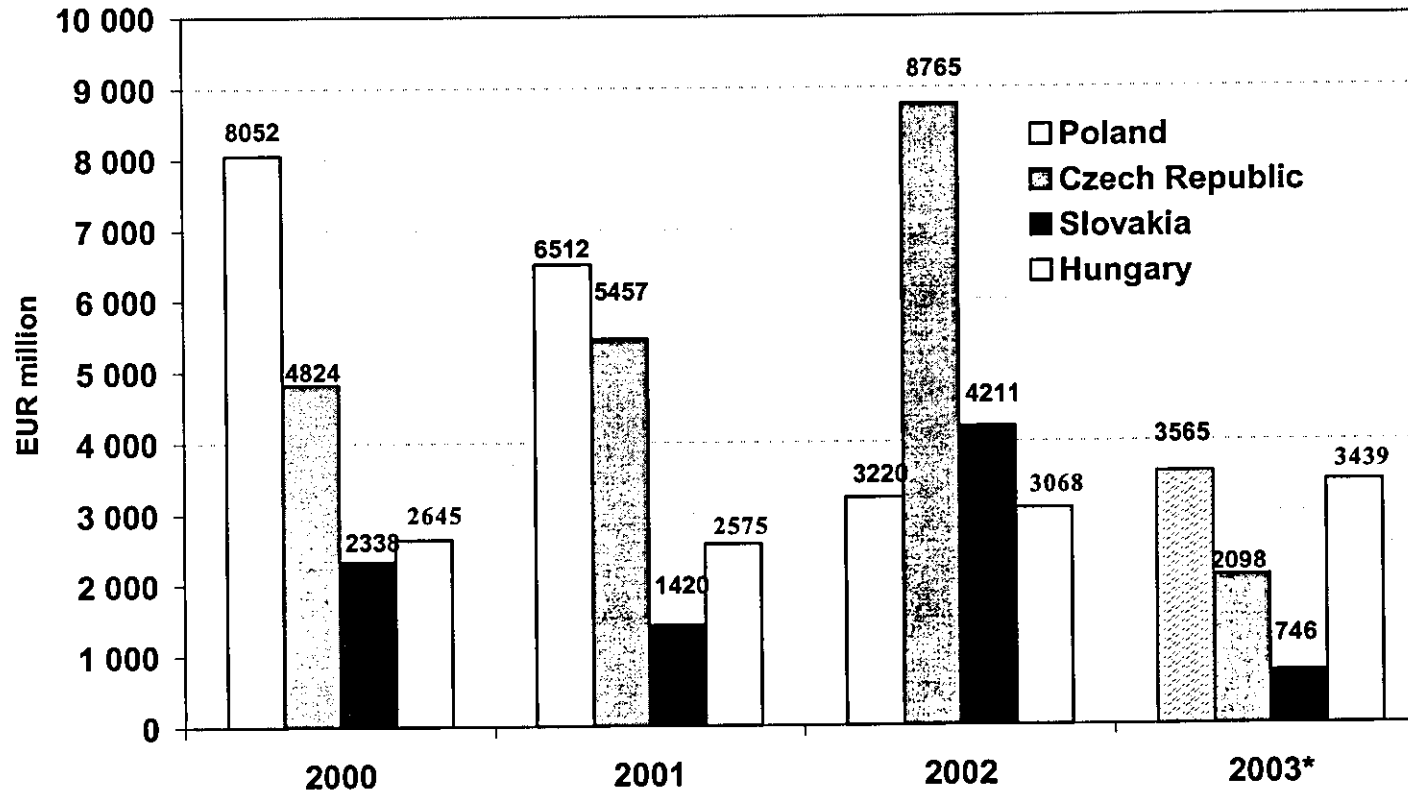
FDI by Sectors



Cumulative FDI inflows to Hungary reached EUR 31 billion (more than 40% of GDP) by end-2003.

Source: National Bank of Hungary

Net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excluding other capital)



* Including other capital for Poland in 2003

Source: National Bank of Hungary

Hungary is the only country among the Visegrad countries where the trend of FDI influx (excluding other capital) has been improving since 2000.



Hungary: the attractive investment location in the heart of Europe

Harmonised economic development programs

Compliance with EU regulations
Transparency
Efficiency
Predictability

Direct incentives

EU co-financed and national grants

Tax-related incentives

one of the lowest corporate tax rate
(16%) in Europe

Hungary: 53 subsidiary companies of the World TOP 100

... *General Motors, Accor, Oracle, General Electric, Electrolux, Henkel, Akzo-Nobel,
Alcatel, Nokia, British American Tobacco, Philips, Samsung ...*



Investment and general business conditions are improving

2001-2002

Substantial nominal
appreciation

Increases of the minimum
wage

Disharmony of wage and
productivity growth

Deterioration of cost-based
competitiveness

2003-2004

Breakdown of wage dynamics

Improving productivity

Reduction of the corporate
tax rate to 16%

Improving the conditions of
the development tax benefit

Tax-free investment reserve

**Enhancing competitiveness is a
top priority of the current
economic policy**



Further changes considered in taxation

**Decreasing and simplifying
business taxation**



**Promoting investment
and employment**

**Corporate tax and
local business tax**

- possible 100% deduction of the local business tax from the corporate income tax base
- possible further reduction of corporate tax rate
- expanding availability of accelerated depreciation

Personal income tax

- moving towards a simpler tax system

VAT

- simplified tax procedures (after joining the EU) e.g. in order to foster the process of becoming regional centre in the service sector

Health contribution

- gradual phasing-out of the lump-sum health contribution



EU co-financed economic development programs

(Fully or partly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Transport)

Economic Competitiveness Operative Program

| | | | |
|--|---|--|---|
| 1. priority Investment promotion 8 billion HUF | 2. priority Development of SMEs 9.6 billion HUF | 3. priority R&D, innovation 15 billion HUF | 4. priority Information society and economy development 6 billion HUF |
|--|---|--|---|

Regional Development Operative Program

1. Priority
Subsidies in order to improve tourism potential
6.5 billion HUF

Environment and Infrastructure Operative Program

Energy saving
1.2 billion HUF



“One stop shop” system in investment promotion

One of the major goals of investment promotion policy: decreasing complexity and dura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

**Investments
over 50 million euros**

- The promotion procedure of large investments is managed by the Directorate-General Investments and Economics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Trans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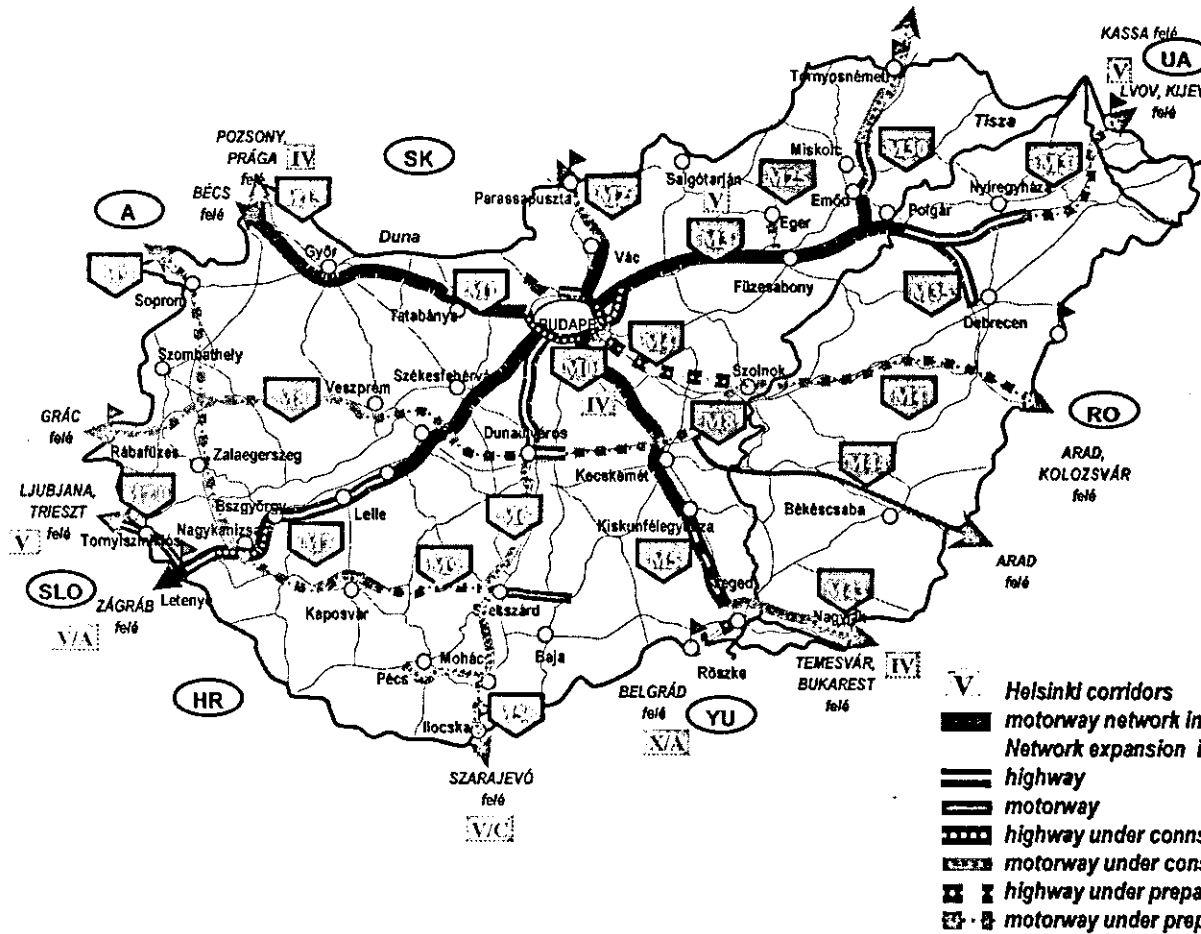
**Investments
over 500 million forints**

- According to the plans, investments over 500 million forints will be managed by the Hungarian Investment and Trade Development Agency (ITDH)

**Introduction of
„one stop shop” system
at ITDH**

- In the short run: - being the source of information
- subsidy management
- In the long run: - administrative one stop

Rapid development of transport infrastructure



By 2006

- 431 km of expressway to be completed
- 425 km under construction
- Further 803 km in preparatory phase

By 2015

- Network density to reach EU average (20-25 km/1000 km²)



Short term economic effects of the EU accession*

Growth rate

- an 0.8 percentage point increase in the GDP growth rate (between 2004-2006)

Foreign direct investments

- phasing out of tariff free zones
- state subsidy system in line with EU regulations
- increased business confidence
- regional hub role (the bridge between the EU and Eastern Europe)

Industrial production

- a 1.0 percentage point increase the rate of industrial output growth due to higher export sales dynamics
- stronger competition and drive for innovation increase competitiveness
- use of EU funds will boost the construction industry

Infrastructural investments

- transport infrastructural investments may reach EUR 10-11 billion until 2010
- investments in the telecommunication sector will approximate EUR 1 billion per annum

* based on a joint study of three economic research institutes



Outlook for EMU membership

Target date

- Date of possible entry between 2009-2010
- Official target date to be announced by mid-May (in line with the Convergence Programme)

Advantages

- Lower real interest rates boost investment
- Fixed exchange rate risk eliminates conversion costs and exchange rate risk
- Expanding foreign trade supports economic growth
The single currency could increase the rate of economic growth by 0.6-0.9 percentage points annually.

Possible disadvantage

- Giving up independent monetary and exchange rate policy as an instrument for managing asymmetric shocks

Challenges to face

- Government deficit (appr. 4.6% in 2004) and inflation (appr. 6.5% in 2004) significantly exceed the Maastricht threshold
- Meeting the Maastricht convergence criteria has a short-run cost



THANK YOU FOR YOUR KIND ATTENTION!

(붙임3)

면담자 현황

1. 체 크

o 체크 투자청(Czech Invest) - (Josef Lebl 자문관)



Josef Lébl
Advisor to the CEO

Phone: +420 - 296 342 503 josef.lebl@czechinvest.org
Fax: +420 - 296 342 542 www.czechinvest.org
Stepanska 15, Prague 2, 120 00 Czech Republic

o Skoda Auto -(Roman Kubista 생산부장)

ŠkodaAuto



Ing. Roman Kubišta

Produktkostenoptimierung
AO-Klasse

ČR-293 60 Mladá Boleslav
Telefon +420 326 8 11877
Telefax +420 326 8 11969
E-mail: roman.kubista2@skoda-auto.cz

o 노동사회연구소(RILSA) - (Ales Kroupa 부소장)



RESEARCH INSTITUTE FOR LABOUR AND SOCIAL AFFAIRS

MGR. ALEŠ KROUPA
DEPUTY DIRECTOR

PALACKÉHO NÁMĚSTÍ 4
128 01 PRAHA 2
CZECH REPUBLIC

TEL: +420 2 2491 3627
FAX: +420 2 2497 2873
E-mail: ales.kroupa@vupsv.cz

2. 헝가리

o 경제교통부(MOET) - (Mihaly Sipos 산업국장 등 2명)



Mihály I. Sipos
Department of Industry
director

H-1054 Budapest, Kálmán I. Str. 2.
postal address: H-1880 Budapest, P.O.B. 111.
e-mail: sipos@gkm.hu



Ministry of
Economy
and Transport
Republic of Hungary



Dr. Rövid Levente
Befektetési Főosztály

1055 Budapest, Honvéd u. 13-15.
postacím: 1880 Budapest, Pf. 111.
e-mail: rovidt@gkm.hu



Gazdasági és
Közlekedési
Minisztérium

telefon: +36 1 472 8000
mellék: 2119
telefax: +36 1 269 3478

o 무역투자진흥청(ITDI) - (Spanyik Peter 청장 등 2명)

www.itd.hu
THE HUNGARIAN
INVESTMENT AND TRADE
DEVELOPMENT AGENCY **ITD**
HUNGARY

Péter Spányik
CEO in charge

H-1061 Budapest, Andrásy út 12.
Phone: (36-1) 472-8100, 473-8200
Fax: (36-1) 472-8101
E-mail: altvez@itd.hu

www.itd.hu
THE HUNGARIAN
INVESTMENT AND TRADE
DEVELOPMENT AGENCY **ITD**
HUNGARY

Pallos, Levente
advisor
Overseas Division

H-1061 Budapest, Andrásy út 12.
Phone: dir (36-1) 472-8184, 472-8100
Fax: (36-1) 472-8133
E-mail: pallos@itd.hu

o 민영화청(HPSAC) - (Erzsébet Lukacs 국제국장)



HUNGARIAN PRIVATIZATION AND
STATE HOLDING COMP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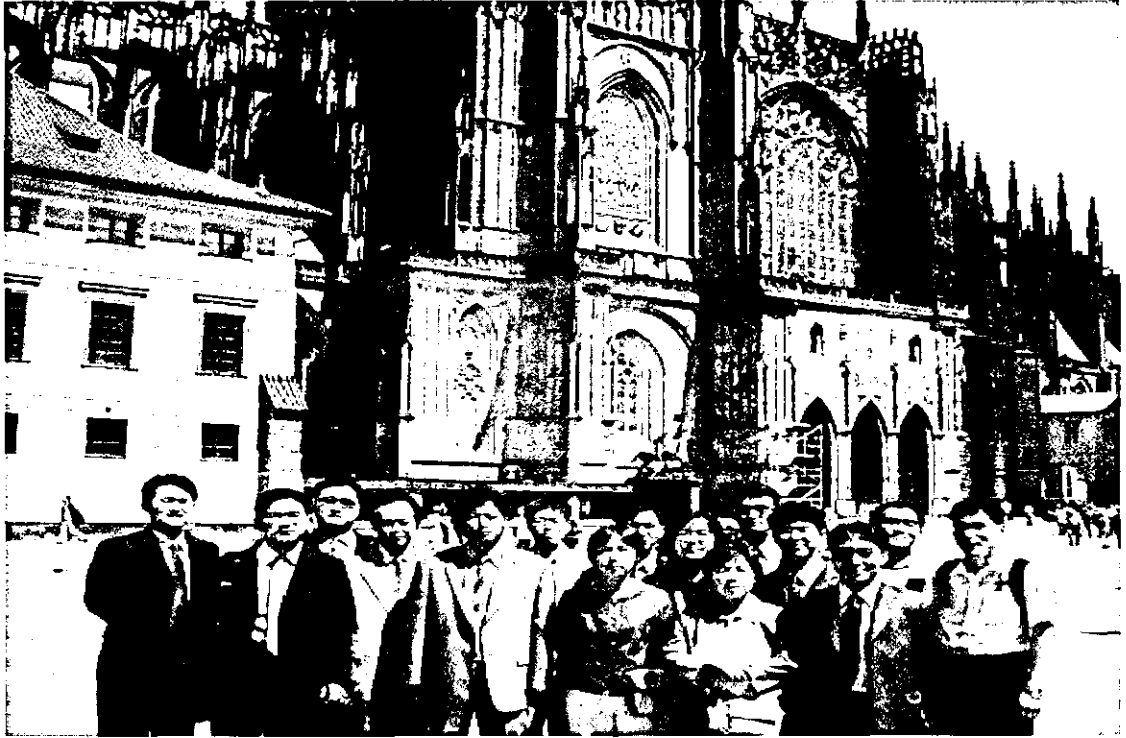
DR. ERZSÉBET LUKÁCS
DIRECTOR

COMMUNICATIONS AND INTERNATIONAL
AFFAIRS DEPARTMENT

H 1133 BUDAPEST POZSONYI ÚT 56.
MAIL: H-1399 BUDAPEST, P.O. BOX 70A
DIRRECT: (36 1) 237-4229
PHONE: (36 1) 237-4400 2810
FAX: (36 1) 370 0010, 237 4400 2110
E-MAIL: lukacs@erzsabet.hpvvf.hu

(붙임4)

연수 소감



(체코 프라하에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우물 안 개구리 바깥나들이

통일부 김 미 옥



우물 안 개구리는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개구리들이 바깥 세상에 대해 떠들어 댈 때면
저도 또한 나가 보고 싶다는 부러운 생각은 했지만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물 안 개구리에게도 바깥 구경을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웃해 있는 동족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동족
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일단의 개구리(?)들이 체제전환 경
험이 있는 다른 동족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우물 안 개구리는 모든 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비실비실 한 건강도 걱정이 되었고
세상어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누이 들어왔지만 게을리 한 탓에
세상어를 말하기는 커녕 알아듣기조차 못하는 것도 걱정이 되었고
처음 하는 바깥 구경에 촌티를 낼까 봐도 은근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설레임에 가슴이 마구마구 뛰기도 했지만요

바깥세상은 참 많이 달랐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대지, 찬탄이 절로 나오는 산과 호수, 낯설고 이국적인 도시
의 모습, 다리 위에서의 야경, 거기에 사는 모습까지.....
우물 안 개구리는 많이 보고 많이 배워야겠다는 야무진 결심을 하고 공식
기관 방문에도 야간학습(?)에도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정말 신나고 재미있고 많은 것을 배운 의미있는 바깥 나들이였습니다.

이제 다시 제 세계로 돌아 온 개구리는 딱 꼬집어 말할 순 없지만
자신이 떠나기 전 개구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물론 많은 결심도 했겠죠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
세상어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하고 있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 등등

요즘 개구리는 무척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체제전환 국가 연수를 다녀와서

건설교통부 민 기 숙



체제전환 국가를 연수한다는 것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듯한 설레임을 가지게 했다. 더군다나 체코와 헝가리 두 나라 모두 대학시절 감명 깊게 본 영화들을 통해 호기심을 키워온 나라였기에 한층 설레임이 더했다.

체코는 그 유명한 영화 "프라하의 봄"에서 잠시 접했었다. 무척이나 인상 깊은 영화였기에 언젠가는 꼭 프라하를 가리라 마음먹기도 했었다. 영화는 체코의 자유화 운동과 소련에 의한 탄압이라는 상황에서 펼쳐지는 한 명의 남자와 두 여자의 러브 스토리를 줄거리로 한다. 체코 망명 작가 밀란 쿤데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작품성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았었다.

현지체험을 통해 체코는 합스부르크가를 비롯 독일과 공산정권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였음을 알게 되었다. 고등학교 세계사 시간에 들어본 듯한 역사적 사건들과 인물들의 이름이 현지에서 가이드의 입을 통해 나올 때면 가물가물 했던 기억들이 하나 둘 살아나는 듯 했다.

공산정권하에 있던 체코인들의 '프라하의 봄'은 1968년 1월에 시작되었다. 개혁파의 지도자 알렉산드르 두브체프가 체코 공산당 중앙 위원회에 서기장으로 임명되면서 이른바 인간적인 얼굴을 한 사회주의로 알려진 자유화의 개혁이 시작된다. 하지만 그 봄은 짧아 그 해 8월 21일 새벽 소련군은 수백대의 탱크를 앞세우고 프라하를 침공해 들어오면서 갑작스런 종말을 맞이하고 만다. 지금은 명동시내와 같은 변화가인 바츨라프 광장. 도로 중앙에 야담하게 장식된 화단이 눈길을 끄는 이 광장에서 소련군의 탱크에 많은 체코국민들이 생명을 바쳤다는 사실을 듣는 순간 전율이 느껴졌다. 1989년 체코 민주화 혁명때에서 이 바츨라프 광장이 중심이 되었다고 하니 체코인들에게는 무척이나 소중한 역사적 현장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1989년 벨벳혁명을 통해 자유민주정부를 탄생시키기까지 체코는 50년이 가까운 세월을 공산정권 하에 있었다. 하지만 비공식적 집계로 1년에 1억에 가까운 여행객이 찾아온다는 관광대국이라 그런지 수도인 프라하는 잘

정돈되어 있었으며 대중교통도 발달해 있었다.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는 지하철, 트램이라 불리는 전철, 버스 등이 있었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내 중심가는 대부분 트램으로 연결하고 버스는 전철구간과 외곽지역을 연결하는데 쓰인다고 한다.

체크투자청과 체크의 대표적 자동차회사인 "스코다 오토", 노동사회연구소 등을 통해 알게된 사실은 체크가 체제전환 이전에도 북한과 같은 폐쇄적 사회가 아니었으며 체크국민들이 무척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이었다. 체제전환 이후 기업의 도산과 실업률의 증가 등으로 고전을 겪어야 했던 체크를 지금과 같은 1인당 GDP 8,000불을 넘는 국가로 만든 데에는 적극적 외화 유치 정책 등과 같은 노력이 물론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전통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는 국민성 등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일 것이다.

헝가리는 루마니아의 작곡가 이바노비치의 "도나우 강의 잔물결"을 통해 가깝게 느껴진 나라이다. 대학시절 "아빠는 출장중"이란 유고슬라비아의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숨막히는 스탈린 주의의 정치적 통제와 억압의 틈바구니에서 가위눌림에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을 그려낸 이 영화의 배경음악이 바로 "도나우강의 잔물결"이란 왈츠였다.

천년의 세월 속에 무려 오천 번의 외침을 당해야만 했던 헝가리의 가슴 아픈 역사를 안고 유유히 흐르는 도나우강... 강 양측에 페스트라 불리는 서쪽의 평지지역과 동쪽의 부다 지역을 끼고 흐르는 이 강은 수많은 유람선들로 붐비고 있었다. 밤이면 멋진 조명으로 빛나는 관광명소를 포도주 한 잔을 기울이며 여유롭게 선상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운치에 관광객들은 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헝가리의 수도인 부다페스트에서 헝가리 전통음식인 "구이야쉬"라는 스프를 만나게 되었다. 이국적일 것이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육개장과 같은 맛이어서 의아해 했다. 관광지 상점에서 우리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붉은 고추를 매어놓은 금줄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가이드의 설명을 통해 헝가리 국민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마자르족이 아시아계 민족으로 우랄어족 계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미운 여자를 "추녀"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들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서 여자에게 "추녀"라고 했다가는 귀썸을 맞게 될 것이라나.. 아무튼 우리와 무척 가까운 민족이란 사실을 알고 나니 부다페스트 거리가 더욱 정감있게 느껴졌다.

헝가리의 경제교통부와 민영화청의 방문을 통해 헝가리 역시 체크에 못지 않게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게되었다.

두 나라가 민영화의 과정에 있어 무상배분 중심의 급진적 사유화 방식과 외부투자가에 대한 유상매각 방식의 각각 상이한 방식을 취한 차이점은 있지만 양국 모두 경제회생을 위한 최상의 정책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헝가리 역시 체제전환 이전에도 북한과 같은 폐쇄적 사회는 아니었다. 체코와 마찬가지로 교육을 중시하는 헝가리인들은 이미 1968년에 새경제 정책에 의해 대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서구 경제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서구를 방문할 기회도 부여함으로써 국민들이 공산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를 비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덕분에 매우 평화로운 체제전환이 가능했다고 하니 북한만이 유일무이한 폐쇄사회가 아닌가 싶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정치의 개혁으로 인해 경제개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제개혁으로 인해 정치 변화가 뒤따르게 된 것이라고 자랑스레 말하며 북한과의 비교를 다소 불쾌하게 생각하는 듯한 그들의 모습에서 강한 자존심을 느낄 수 있었다.

짧은 연수기간동안 두 나라를 속속들이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도시의 모습이나 가이드들의 설명, 방문기관 면담자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서 느껴지는 프라하와 부다페스트는 잠시 다녀온 적이 있는 파리와 런던의 느낌과 그리 다르지 않았다. 강한 자존심을 지니고 침략국에 의한 식민지 역사마저도 교훈으로 간직하고자 고스란히 보전하고 있는 두 나라에서 우리는 수많은 관광객들과 자유롭게 애정표현을 하는 젊은이들을 쉽사리 볼 수 있었다.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나라. 외자유치를 위해 활발히 움직이는 나라. 두 나라는 잔잔히 흐르지만 도도함이 돋보이는 그들의 강과 같은 느낌의 나라였다. 프라하의 몰다우강과 부다페스트의 도나우 강의 잔물결이 아직도 눈에 어른거리는 듯 하다.

사회주의 체제 전환국을 다녀와서

통일부 강 태 성



체코 노동사회연구소와 헝가리 민영화청에서의 자세한 설명과 풍부한 실례는 연수단의 체제전환국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동유럽의 체제전환국들이 처했던 환경과 여건은 지금의 북한이 처한 그것과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체제전환국의 사유화 과정과 개혁 추진방법, 개혁 추진상의 문제점 등 이들의 경험은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의 개혁·개방을 도와줄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특히 체코에서의 잘 보존된 역사유적들과 시골전경,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아름다운 야경이 눈에 선합니다. 유럽에 다시 갈 기회가 생긴다면, 체코와 헝가리의 시골마을을 가보고 싶습니다.

체제전환국 실무연수 보고를 마치며.....

통일부 김 순 옥



체제전환국 실무연수를 다녀온 지도 어느덧 20여일이 지났다. 연구장 직책을 담당하여 연수준비와 현지출장 및 종합결과보고를 작성하기 까지의 과정에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나마 서술해 보고자 한다.

황부기 단장님을 비롯하여 15명의 연수단은 체제전환국 실무연수를 통해 북한의 체제전환에 대비한 정책대안을 얻고자 투철한 사명 의식을 갖고 6월3일 행자부(현.중앙인사위원회) 담당 사무관님의 실무연수에 따른 유의사항 및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준비에 들어갔다.

연구장이라는 타이틀을 부여받아 좀 부담이 되었지만, 워낙 막강파워의 연구원 3명과 같이 연구를 하게 되어 마음이 든든하였다. 우선 방문기관별 질문서부터 작성하라는 총무님의 명에 따라 일과시간후 짬짬히 검토하며 작성하는 것도 꽤나 시간이 걸렸다. 이 기회를 통해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계획경제체제와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내용을 좀더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드디어 실무연수 떠나는 날 6월21일, 인천공항에 허둥지둥 도착하여 수속을 밟고, 오후1시30분경 출발하여 체크 프라하에 도착하니 오후 5시경이었다.(약11시간 소요) 아! 이것이 바로 시차구나(한국과 7시간 차이)를 감지할 수 있었다. 프라하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면서 대단한 부러움을 느꼈다. 천여년 이상 잘 보존되어 있는 프라하 시내 건축물은 소위 "건축양식의 박물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방문국인 헝가리 부다페스트 역시 고도였으며, 김춘수님의 "어느 부다페스트 소녀의 죽음"이라는 시가 떠오르는 영웅광장에 갔을 때 자유를 위해 희생되었던 소녀의 명복을 빌었다. 다시 한번 자유민주체제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느꼈다. 하루 빨리 북한이 체제전환하여 북한동포들의 힘든 모습이 사라지고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되돌아오기를 기원해 보면서.....

우리 연수단의 주목적인 방문기관 면담이 시작되었다. 체크 투자청부터 시작하여 헝가리 민영화청을 마지막으로 6개기관 방문이 모두 이루어졌다. 우리가 방문하는 기관마다 성실한 자료준비와 프리젠테이션, 질문·답변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면담자들께서 워낙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고, 우리들의 끊임없는 질문 공세에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모습이 만족스러웠다. 특히 노동사회연구소 방문시 부소장님께서 2시간동안 너무나 성심성의껏 면담해 주셨던 점 감사드린다. 우리 연구팀은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속기사가 되어 노트에 기록하였으며, 질문서 준비하면서 조금씩 봤던 내용들이 클로즈업되어 생생한 지식으로 와 닿았다.

6월30일 귀국, 7월1일 제자리로 돌아와 그동안 밀렸던 업무처리하랴 야간에 남아 면담록 정리하면서 보고서 작성하랴 무척이나 바빴다. 연수 떠날 때 보다 돌아와서 연구할 부분은 엄청나게 많아졌다. 7월6일 1차 편집회의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과, 그후 분담된 내용을 정리하여 연구장에게 보내면 다시 연구원 모두에게 취합된 자료를 보내 검토·감수를 거쳐 완성해 갔다. 7월20일 2차 편집회의는 가벼운 마음으로 편집형태와 내용 일부 수정 등을 결정한 후, 가까운 일식집에 가서 저녁식사를 했다. 그동안 연구하면서 느낀 소감들을 이야기하며 그동안의 고생(?)을 보람으로 생각하며 분위기가 화기애애하였다. 특히 체제전환에 계속 관심을 갖고 연구하여 전문성을 키우겠다는 한연구원의 포부에 찬사를 보내며, 우리 모두 체제전환

연구모임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우리 연구팀 연구원 개인에 대한 짚막한 평을 하고자 한다. 언제나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한재현 수석연구원, 다양한 자료 준비와 체계적인 정리를 잘 하시는 김수영 수석연구원, 꼼꼼한 자료준비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끝까지 분석하며 열정을 쏟아주신 김미옥 수석연구원, 우리 연구팀은 그야말로 짝이었다. 연구장이 좀 부족하여도 연구원들이 모두 합심하여 결과보고서가 원만히 잘 진행되었고 이 지면을 통해 연구팀 수석연구원님들과 그동안 사진자료와 연구원고에 대해 성실히 감수를 맡아주셨던 자원봉사 연구원이신 강태성님께 감사를 드린다.

연구팀을 제외한 우리 연수단 각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 연수단을 언제나 잘 이끌어 주시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던 황부기 과장님, 연수중에 부이사관님 승진의 기쁜소식까지 안고 돌아오신 단장님께 다시한번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연수 준비를 위해 일정 섭외와 자료등을 준비하며 무척 애써 주신 총무 이해준·최석찬님, 풍족하지 않은 예산을 갖고 후생복지에 힘써주시며 가는 곳마다 즐겁게 해주셨던 재무 홍양희·김구원님, 언제나 새로움에 열정적이신 권혁록님, 어떤 정보도 놓치지 않는 서정웅님, 영어에 능통하여 연수팀 가이드 역할까지 잘 해주셨던 민기숙님, 연수팀의 막내이며 신세대 멋쟁이 김세필님, 이번 연수에 감사역할을 멋지게 해주신 스마일 조병준님, 마지막으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모든 일정에 동참해 주시고 다뉴브강 야경까지 안내해 주신 윤옥균님(유학후 귀국),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연수가 만족스럽고 유익한 연수가 되었으리라 믿으며, 체코·헝가리의 체제전환 성공사례를 모델로 북한이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지원하여 안정적인 체제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우리 연수단은 앞으로도 체제전환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지속되어 각 부처 정책입안시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